한국사회

2022년 제23집 1호

일반논문

■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화: 쟁점과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세계화 담론 변화 분석
| 박길성
■ 코로나19 앞의 사회/공동체: 증여, 명명, 자가면역의 동역학
| 박세진
■ '소셜과 혁신'을 바라보는 대학생의 양가적 시선: 사회학 실습 교육 사례
| 권현지 · 이상직
■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 한국 거주 이주배경 청년을 중심으로
| 백경민 · 연규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로서 연2회 발간된다. 한국사회연구소는 급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와 국제지역사회의 제반 현상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22일 설립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isrku.org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2022년도 한국사회연구소 임원

소장
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부소장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센터장
사회트렌드 센터장: 임인숙(고려대 사회학과)
지역사회개발교육 센터장: 김수한(고려대 사회학과)
데이터분석 센터장: 김선업(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자문위원
노익상(한국리서치) 염재호(고려대) 장하성(고려대)
(이상 가나다순)

운영위원
김수한 김진영 김철규 김형찬 마동훈 박길성 송효종 신현석
윤인진 이명진 임인숙 정일준 조대엽
(이상 가나다순)

한국사회

2022년 제23집 1호

차례

〈일반논문〉

-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화: 쟁점과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세계화 담론 변화 분석 | 박길성 3
- 코로나19 앞의 사회/공동체: 증여, 명명, 자가면역의 동역학 | 박세진 37
- '소셜과 혁신'을 바라보는 대학생의 양가적 시선: 사회학 실습 교육 사례 | 권현지 · 이상직 85
-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 한국 거주 이주배경 청년을 중심으로 | 백경민 · 연규진 143

-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163
-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169

한국사회 제23집 1호(2022년): pp.3-35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화: 쟁점과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세계화 담론 변화 분석*

박 길 성**

요 약

이 글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계화 담론을 논의한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후를 전망한다. 세계화에 관한 일반적인 양상을 정리하고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세계화 담론의 변화를 신문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시출현단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세계화가 과거와 같은 비중을 지닌 사회 질서의 중심축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세계화의 축소냐 강화냐의 이분법을 넘어 세계화, 탈세계화, 재세계화가 영역과 층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세계화, 탈세계화, 재세계화, 한국

Ⅰ. 들어가며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의 시대다. '국경을 초월한다'의 의미를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은 오늘날 세계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연구를 함께 논의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 김경필 박사, 강수환 박사, 박사과정 재학중인 이종훈, 최윤재에게 감사한다. 귀중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세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gspark@korea.ac.kr

세계화 담론의 새로운 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은 세계화를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 사태는 초연결적 세계화 시대의 취약점과 부정적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조건을 배경으로 세계화 논의가 다시금 조명되는 까닭이다. 코로나 대유행은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대유행 이후의 세계화 및 세계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와 같은 질문들이 이어진다.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화 논의의 새로운 양상과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1959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 줄 언급되면서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1년 웹스터사전에서 '글로벌리즘'(globalism)과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용어가 새로이 등장한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자 학명으로 등장한 이후 지난 60여 년의 현대자본주의 역사를 배경으로 그 어떤 학술적인 혹은 시사적인 논제보다 방대한 문헌들이 출간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라는 기존의 세계화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세계화 논의에 새로운 지점을 논쟁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사실 세계화 논의는 애초부터 논쟁적이었다. 세계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세계화의 기점을 어디로 보아야할지? 세계화의 동력은 무엇인지? 세계화라는 것이 실재하는지? 국민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인지? 세계화는 그동안 인류가 오랜 기간 경험한 근대성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인지?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변화가 국소적 제한적 변화인지 아니면 총체적 변화인지? 인류 역사에서 지속된 경향의 확장된 형태인지 아니면 괘도를 바꾸는 계기인지? 세계화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세계화의 텍스트적인 의미는 전지구적 상호의존의 심화이다. 상호의존이 전지구적으로 연결되며 그 속에서 상호의존이 심화됨을 의미한다(Nye, Jr., 2002: 79). 인적·물적 교류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담고 있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 현상의 확대, 심화 과정을 보편적 흐름으로 목격해 왔다.

전지구적 상호의존의 확대·심화가 제동이 걸린 것은 2007~8년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많은 이들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징후로 거론하였다.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비교 되지 않을 만큼 세계화의 둔화 양상을 보인다. 매우 다급하게 국경봉쇄, 이동통제, 백신민족주의 등으로 이어졌고 세계화라는 기존의 보편적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언뜻 보기에도 세계화의 일반 경향에 반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조짐을 보여온 탈세계화의 추세를 더욱 가속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자국우선주의, 지역화 등의 현상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정부 시대가 돌아왔으며, 자국중심정책을 펴면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세계화가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이는 복잡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화의 일반성과 코로나 대유행의 특수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세계화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편향하는 축소냐 강화냐의 이분법적으로 진행된 기존의 논의에 질문을 던진다. 전염병과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전에 없던 전지구적 변수와 계기들이 세계화의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제3의 과정 혹은 변증법적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중시한다. 세계화, 탈세계화, 재세계화의 여러 영역과 모습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의 역사상황조건 속에서 세계화의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한국은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극적으로 세계화를 경험한 국가다. 한국만큼 세계화의 기회와 위험을 극명하게 경험한 국가도 없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이 세계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한다면,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K-pop의 세계적인 확산은 세계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Park, 2022). 세계화의 꿈과 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한국사회를 보면 된다고 하여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화를 디딤돌 삼아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다. 한국은 국제분업 질서 속에서 성장을 도모하였다. 초창기 낮은 단계에서의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산업 역시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성공적인 성장을 달성하였다. 최근에 K-pop으로 선도되는 한류 문화산업은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균형적 전략에서 찾아진다(Park, 2022). 세계화를 근간으로 하는 성장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세계화에 매우 취약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화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세계화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세계화를 추진하다 경험한 1997년 IMF 외환위기다(박길성, 2003). 여전히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를 비롯하여 여러 국면에서 세계화에 대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에 취약하다는 것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G2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상황 때문이다.

한국은 비교적 유연하게 코로나19를 대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부터 강고했던 국민국가의 지위와 역할이 강하게 작동한 셈이다. 임상적 성과와는 별개로 지역봉쇄, 국경봉쇄, 이동통제 없이 비교적 낮은 강도의 제한 조치, 이를테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해 왔다. 물론 인권의 침해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종합하면 한국에서 세계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화의 인식이나 담론에 미친 영향에 관한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효과와 세계화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최근 들어 설명력을 넓혀가는 담론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한국의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화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제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화 담론을 전개한다. 여기서는 팬데믹 이전의 세계화 추세, 팬데믹의 조건으로서 세계화, 그리고 팬데믹이 세계화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다. 제3장은 한국사회의 세계화 담론의 변화를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법을 활용하여 진행한

다. 이어 제4장에서는 향후 세계화의 전망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인 제5장에서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전개한다.

Ⅱ.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화 담론

1.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세계화

그동안 세계화는 불가피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현상이라는 믿음이 일정 부분 있었다. 실제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직접적인 여파가 있었던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세계화의 추세는 지속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계화는 둔화했으며, 이것을 많은 이들은 탈세계화라 지칭하고 국가 간 상호의존과 통합이 약화하는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탈세계화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탈세계화 현상이 부각된 시기는 대공황을 겪은 1930년대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침체기인 2010년대이다. 1930년대와 2010년대의 탈세계화 현상을 가져오기 전에 국제사회는 세계화 규범에 충실하려 했던 시대를 경험한다. 이는 각각 1850-1914년 시기와 1950-2007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30년대의 탈세계화와 2010년대의 탈세계화는 성격상 차이점이 있다. 1930년대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를 지키려 했고 전체주의 독재국가들이 탈세계화를 주도하였다. 반면 2010년대의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움직임이 세계사회를 탈세계화로 몰고 갔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경기침체라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상이한 가치추구라는 정치적 요인도 작용한 것이다(이상환, 2020: 158-9).

2019년 1월 24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으며, 세계 GDP 대비 교역량이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0년대 세계화의 속도가 느려지고 둔화되는 것을 'slowbalization'이라 명명한 바 있다. 세계무역액은 2008년 세계 GDP 대비 61%였는데 2018년 58%로 하락했고, 세계화를 추동했던 핵심 동력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액도 2007년 세계 GDP 대비 3.5%에서 2018년 1.3%로 급감했다. 초국적 은행대부도 2006년 세계GDP 대비 60%에서 2018년 36%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규모를 보여주는 중간재 수입 규모도 2008년 세계 GDP 대비 19%에서 2018년 17%로 하락하였다. 특히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인 중국의 제조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더 자립적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제조업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2000년 49.4%에서 2016년 81.3%로 급증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국가와 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정준호, 2020; 윤상우, 2021: 118-119).

세계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탈세계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 주도로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이후,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금융 지구화가 투기 과열 및 부채의 그림자를 만들면서 금융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비트 단위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컴퓨팅 기술과 초고속 연결망을 물리적 기반으로 한 나노세컨드 단위의 금융거래는 문화상품, 지식상품과 함께 시공간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갱신하였고, 이 갱신과정에서 투자가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부채를 통해 미래의 노동과 시간, 가능성까지 저당하였다(권창규, 2021: 362). 아울러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지속적으로 진척되고 있고, 금융부문이 생산부문보다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부문의 팽창은 자산가격 버블을 야기하고, 생산적 투자보다는 투기적 자산을 성장 시켰다(Foster, Jonna and Clark, 2021).

금융리스크와 더불어 국경 간 인간의 이동을 포함하는 사회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글로벌 이민, 해외 관광, 초국적 인적교류(취업, 유학, 출장 등), 항공/물류량, 초국적 정보교류(인터넷)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적으로 2018년 세계 해외여행객(입국자 기준)은 14.1억 명이었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세계인구 5.3명 중 1명이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의 해외여행객은 6.8억 명 수준으로, 최근 수치는 해외여행객이 지난 18년간 2배 이상 급증했음을 보여준다(윤상우, 2021: 119). 경제부문의 세계화 경향과는 다르게 사회적 세계화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코로나 팬데믹의 조건으로서 세계화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화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코로나 대유행이 세계화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함께 전 세계적인 생산 재배치와 생산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아웃소싱 및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국경 간 사람의 이동과 접촉, 이민과 관광, 물류-항공의 급증으로 팬데믹은 단기간에 확산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는 세계화 경향성 하에서 연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윤상우, 2021: 107).

코로나 대유행과 세계화는 인류와 바이러스라는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세계화는 바이러스와 인류 간 상호작용 양상을 바꾸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 어느 한 지역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 사람을 감염시키면, 그 지역 안에 살던 사람과 바이러스 간 상호작용이 전개된다. 해당 지역에서 사람이 자연 감염된 후 면역을 습득하거나 사망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공동체가 집단면역에 도달한다. 이 현상이 수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해당 지역 내 유전자 풀에서 전염병에 강한 유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 과정 중 바이러스의 유전자 풀에서도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 양측의 상호작용으로 바이러스와 사람 간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조동준, 2020: 150).

세계화 이전에는 전염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완만하고 순차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만 세계화가 진척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코로나 대유행은 국경을 넘나들기 매우 쉬워진 상황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항공기를 통한 대규모 인적교류는 바이러스 이동에 수월한 환경이 되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등장하여 지역 감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전 세계로 이동하여 다른 지역에 퍼뜨려지는 것이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차를 두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이제 인류는 바이러스의 변이, 확산, 약화를 사실상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세계화는 전염병 대유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조동준, 2020: 151).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세계화 정도가 높은 국가들은 코로나19 치명률도 더 높게 나왔다. 세계화의 정도와 코로나19 치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Farzanegan, Feizi, and Gholipour. 2021).

3.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화 영향

코로나 대유행은 세계화의 세 부문에 영향을 주었다(Afesorgbor, van Bergeijk, and Demena, 2022). 그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경제 부문이다. 경제 부문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재화, 서비스, 자본의 흐름이다. 그런데 코로나 대유형은 이러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를 야기했다.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대유행 직후 상품교역은 축소되었다. 특히 상품교역의 축소는 선진국 경제들에서 보다 쉽게 관찰된다. 선진국 경제는 후발국 경제보다 교역 축소 비율이 더 컸고, 게다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년 해외직접투자 역시 전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다(Afesorgbor, et al., 2022).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lockdown)는 세계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흔들어 놓았다. 이것에서 파생된 불안전성으로 인해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상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공급망이나 가치사슬의 세계적 네트워크화가 고도로 진척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이것은 큰 위협이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이 고도로 지구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자신들의 공급망, 가치사슬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전성, 가치사슬의 취약성, 국제적 하청업체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고 있다(Foster and Suwandi, 2020; 임운택, 2021: 94).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대유행 이전까지 제조업은 큰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제조업을 가진 국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지만, 연구개발, 고부가가치 서비스, 관광 등에 집중하던 국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조동준, 2020: 151).

경제 세계화에 이어 두 번째 영역은 사회 세계화다. 사회 세계화는 사람들의 국경을 넘는 이동이나 각종 교류행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민, 관광, 초국적 인적교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사회 세계화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행이나 국경을 넘는 이동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행, 유학, 이민이 모두 어려워졌다. 아울러 이민자들의 송금도 사회 세계화를 구성하는 요소였는데, 이것도 코로나19가 개별 국가에 주는 영향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축소되며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Afesorgbor, et al., 2022).

세 번째는 정치 세계화다. 정치의 세계화는 국가들이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서로 협력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슈들에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갈등을 야기

할 만한 이슈들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대유행은 정치 세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 대유행이 발생하고, 바이러스 대처에 필요한 제품이나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국가들은 지구적 협력보다는 자신들 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통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일부 선진국들이 독점하려고 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초기, 미국과 중국은 대유행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국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Afesorgbor, et al., 2022).

코로나 대유행은 이처럼 정치 세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향후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화를 강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기술들이 과거보다 발전되었고, 지구적 대유행은 개별 국가 단위 해결책의 유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Ⅲ. 한국사회의 세계화 담론 변화 분석

1. 분석 방법의 의의

1) 코로나19 전후 세계화 담론 분석

담론 분석을 통해 세계화의 거시적이며 연속적인 사회변동의 진행 방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기별 담론의 변화를 확인해봄으로써 향후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기적 단면을 포착할 수 있다. 특정 시기의 세계화가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특정 시기에 세계화와 관련된 주요 화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세계화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과 코로나19라는 비교적 단기적인 충격이 세계화라는 중장기적 사회 변동에 미친 영향을 세계화 담론의 변화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

2) 세계화 관련 기사 동시출현단어분석

동시출현단어분석 방법은 계량적 내용분석의 일종으로 비교적 많은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단어빈도, 동시출현빈도 등을 비교함으로써 주제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세계화 담론이 어떤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 담론 중에서도 함께 언급된 주제어들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 세계화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 주제어들과 (상대적) 주변에 위치한 주제어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화 담론 변화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2. 연구자료

1) 연구자료와 전처리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계화 담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데이터 DB 및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기사 수집을 위하여 수집시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24일 기준 '1년 전 1년 간'과 '유행 1년 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에 활용할 기사는 빅카인즈에서 DB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 '전국일간지'로 분류된 11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계화'라는 검색어를 표제나 본문에 포함하는 기사만을 선별하여 수집하였다. 빅카인즈에서는 기사 본문 전문 대신 텍스트랭크(TextRank)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본문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동시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치순 상위 50개 단어들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어 유사도 분석 및 동시출현빈도 분석에 활용하였다(Mihalcea and Tarau: 2004).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자료 개요

DB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검색어	세계화 (표제+본문)
대상 언론사 (11개, 가나다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수집시기	코로나19 유행 이전 1년: 2018.1.24. - 2019.1.24.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 2021.1.24. - 2022.1.24.
수집 기사 수	코로나19 유행 이전 1년: 1,549개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 1,251개
분석대상	본문을 구성하는 단어들 중 동시출현빈도 기준 가중치순 상위 50개 단어(명사)

2)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보다 직관적인 유사도 및 동시출현빈도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작업의 일환으로 동의어를 설정하고 불용어를 삭제하였다. 동의어의 경우 단수형 표현과 복수형 표현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전체 단어를 단수형 표현으로 통일하였고, 영문명과 국문명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학문 분과와 학문 분과의 전공자를 지칭하는 표현은 모두 학문분과로 통일하였다. 한편 불용어의 경우 전체 단어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우선 빈도 수 5 미만의 단어를 모두 불용어로 지정하였으며, 이외 지나치게 많이 반복되어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인명·지명과 명사 추출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은 부사·수·단위 등 또한 불용어로 지정, 제거하였다(표 2 참조).

〈표 2〉 전처리: 동의어, 불용어 처리

동의어 처리	예시	불용어 처리	예시
단수형, 복수형	전문가(전문가들), 소비자(소비자들)	빈도수 5미만	시아버지, 요리책, 잣죽
영문명, 국문명	다보스포럼(다보스, WEF, 세계경제포럼)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인명·지명	인명: 문재인, 바이든, 이재명 지명: 한국, 미국, 중국, 서울
학문분과, 전공자	경제학(경제학자), 사회학(사회학자)	부사·수·단위 등	세대별, 40여, 20만, 1개

3. 연구방법: 동시출현단어 분석

1) 단어 유사도 분석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는 일상에 존재하는 단어, 문장 등을 정제하여 원하는 부분만을 추려내는 전처리 과정과 전처리된 자연어들을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과정을 포함한다. 특징 추출 과정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 바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문서들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연구자가 지정한 다차원 공간에서의 상호 간 거리를 계산하여 벡터값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컴퓨터는 이 벡터값을 학습하고 연산함으로써, 서로 다른 단어들을 구분하고 단어 간 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임베딩을 위해 파이썬(python)의 젠심(gensim)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Word2Vec을 활용하였다. Word2Vec은 미콜로프와 동료들이 고안한 신경망 기반 학습 알고리즘으로, 단어 임베딩에 활용되던 기존 신경망 알고리즘의 학습 데이터 규모의 한계와 임베딩 차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컴퓨팅 자원 및 시간 대비 학습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Mikolov et al., 2013a). 본 연구에서는 Word2Vec의 단어 추론 및 벡터화 방식 중 주변 단어를 통해 중심 단어를 추론하는 CBOW(Continuous Bag

of Words) 방식과 중심 단어를 통해 주변 단어를 추론하는 Skip-Gram 방식 중 의미론적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진 Skip-Gram 방식을 차용하였다.. 학습을 위한 매개변수는 젠심 라이브러리 Word2Vec의 기본 설정값(default)을 적용하되, 임베딩 차원(vector_size)과 중심단어와 인접단어 간 최대 거리(window)는 각각 기존 연구에서 성능이 검증된 값을 적용하였다(vetor_size=300, window=5)(Mikolov et al.: 2013b).

2) 동시출현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여 전처리한 각각의 단어들의 동시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어쌍(A,B)와 단어쌍(B,A)을 같은 것으로 규정하여 중복되는 경우를 제거하였다.

4. 연구 결과

1) 단어 유사도 비교

아래의 〈표 3〉은 본 연구의 중심 단어인 '세계화'와 임베딩된 300차원 공간상의 거리가 가까워 상대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단어들을 보여준다. 이들 단어들은 '세계화'를 언급한 기사 안에서 '세계화'와 유사한 맥락에서 쓰인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 1년 기사들과 유행 이후 1년 기사들에서 세계화와의 유사도 상위 20개 단어를 추려봤을 때 전문가, 일자리, 노동자, 외국인, 선진국, 자본주의, 민주화, 불평등의 8개 단어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한국 언론은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 '세계화'와의 코사인 유사도 상위 20개 단어

	코로나19 유행 이전(2018-2019)		코로나19 유행 이후(2021-2022)	
순위	단어	코사인 유사도	단어	코사인 유사도
1	전문가	0.998068	코로나19	0.998577
2	지도자	0.997618	온라인	0.997950
3	일자리	0.997592	불평등	0.997514
4	노동자	0.997585	외국인	0.997445
5	미군	0.997439	기후변화	0.997437
6	신자유주의	0.997417	선진국	0.997409
7	외국인	0.997217	노동자	0.997288
8	선진국	0.997156	팬데믹	0.997275
9	다보스포럼	0.997058	홈페이지	0.997181
10	가능성	0.996989	경제학	0.997102
11	공동체	0.996966	행정부	0.997075
12	자동차	0.996908	유튜브	0.996937
13	개발도상국	0.996858	전문가	0.996905
14	자본주의	0.996819	자본주의	0.996656
15	민주화	0.996787	일자리	0.996647
16	불평등	0.996734	참가자	0.996569
17	희생자	0.996703	수상자	0.996333
18	무역전쟁	0.996645	민주화	0.996274
19	백악관	0.996612	소비자	0.996269
20	wto	0.996566	의약품	0.996175

한편 지도자, 미군, 신자유주의, 다보스포럼, 가능성, 공동체, 자동차, 개발도상국, 희생자, 무역전쟁, 백악관,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코로나19 이전 1년'의 기사들로부터 산출한 유사도 상위 20개 단어 목록에서만 확인되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결과를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시기적 맥락과 '코

로나 대유행 이후'와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하자면, 당시의 한국 언론은 세계화와 관련하여 다자주의(다보스포럼, WTO, 공동체 등)와 이의 대척점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백악관, 무역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끝으로 코로나19, 온라인, 기후변화, 팬데믹, 홈페이지, 경제학, 행정부, 유튜브, 참가자, 수상자, 소비자, 의약품 등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의 기사들로부터 산출한 유사도 상위 20개 단어 목록에서만 확인되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전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석하자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 한국 언론은 코로나19와 세계화의 관계 즉, 세계화가 코로나 대유행에 미친 영향과 코로나가 세계화에 미친(혹은 미칠)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의약품). 특히 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untact)'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온라인, 홈페이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당면한 상황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행정부)과,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의 의견(참가자,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진 것으로 보인다.

2) 동시출현빈도 비교

(1) 단어들의 동시출현빈도 비교

아래의 〈표 4〉는 세계화 관련 기사에서 두 단어의 동시출현빈도 기준 상위 20개의 단어쌍을 보여준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 1년간의 세계화 관련 기사에서는 세계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른 관심이 나타난다. 반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 1년 간의 세계화 관련 기사에서는 언론의 관심이 코로나19 관련 이슈, 특히 감염병 자체와 경제 관련 이슈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는 세계화와 관심 대상 간의 관계에 관한 보도가 많았다면, 대유행 이후에는 '세계화-코로나-관심 대상'의 3자 관계가 관련 담론의 기본 골격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세계화 관련 기사에서의 단어 동시출현빈도 상위 20개

	코로나 대유행 이전(2018-2019)			코로나 대유행 이후(2021-2022)		
순위	단어 1	단어 2	동시출현빈도	단어 1	단어 2	동시출현빈도
1	세계화	일자리	17	세계화	코로나19	42
2	노동자	일자리	12	코로나19	팬데믹	31
3	대기업	중소기업	11	온라인	코로나19	27
4	민주주의	세계화	10	감염병	코로나19	15
5	민족주의	세계화	10	소비자	코로나19	14
6	세계화	정치인	9	공급망	코로나19	12
7	불평등	일자리	9	노동자	코로나19	12
8	방탄소년단	빌보드	9	도전자	심사위원	11
9	민주주의	자유주의	9	관계자	세계화	10
10	선진국	일자리	8	인플레이션	코로나19	10
11	대중화	세계화	8	불평등	코로나19	10
12	박물관	패션쇼	8	유튜브	코로나19	10
13	민주주의	정치인	7	세계화	온라인	9
14	경제학	일자리	7	심사위원	치킨대전	9
15	외국인	유학생	7	기념식	코로나19	9
16	세계화	외국인	7	계열사	세계화	9
17	냉동식품	식문화	7	기념식	세계화	9
18	미군	주한미군	7	외국인	코로나19	9
19	세계화	전문가	6	기후변화	코로나19	9
20	일자리	중산층	6	세계화	소비자	8

(2) '세계화'와의 동시출현빈도 비교

아래의 〈표 5〉는 본문을 구성하는 단어 중 '세계화'라는 단어가 가중치순 상위 50개에 포함된 코로나19 유행 이전·이후 기사에서 각각 '세계화'와 동시에 출현한 단어 중 동시출현빈도 기준 상위 20개의 단어를 선별한 것이다. 외국인, 전문가, 불평등, 홈페이지는 두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20개

단어에 포함되었다.

한편 일자리, 민주주의, 민족주의, 정치인, 대중화, 개막식, 도서관, 경쟁력, 세계은행, k팝, 영향력, sns, 태권, 가능성, 다보스포럼, 참가자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 시기의 상위 20개 단어 목록에서만 확인되는 단어들이다. 이전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다자주의 vs. 자국우선주의(다보스포럼, 민주화)', '경제(일자리, 경쟁력, 세계은행)', '정치(민주주의, 정치인)', '문화(대중화, 개막식, 도서관, k팝, sns, 태권)'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해볼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관계자, 온라인, 계열사, 기념식, 소비자, 추징금, 최소화, 경제학, 심사위원, 연구소, 근로자, 미술관, 제국주의, 지자체, 네트워크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시기의 상위 20개 단어 목록에서만 확인되는 단어들이다. 이 자체만으로는 담론의 주제나 경향성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전에 세계화 관련하여 한국 언론이 관심을 두던 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 부분 변화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5〉 세계화 관련 기사에서 '세계화'와 동시출현한 단어 및 동시출현빈도 상위 20개

	코로나 대유행 이전(2018-2019)		코로나 대유행 이후(2021-2022)	
순위	동시출현단어	동시출현빈도	동시출현단어	동시출현빈도
1	일자리	17	코로나19	42
2	민주주의	10	관계자	10
3	민족주의	10	온라인	9
4	정치인	9	계열사	9
5	대중화	8	기념식	9
6	외국인	7	소비자	8
7	전문가	6	전문가	8
8	개막식	6	추징금	8
9	도서관	6	외국인	7
10	경쟁력	5	불평등	7
11	불평등	5	최소화	7
12	세계은행	5	경제학	7

	코로나 대유행 이전(2018-2019)		코로나 대유행 이후(2021-2022)	
순위	동시출현단어	동시출현빈도	동시출현단어	동시출현빈도
13	k팝	5	홈페이지	6
14	홈페이지	5	심사위원	6
15	영향력	5	연구소	6
16	sns	5	근로자	6
17	태권	5	미술관	6
18	가능성	4	제국주의	5
19	다보스포럼	4	지자체	5
20	참가자	4	네트워크	5

주: 두 시기에 공통되는 단어는 밑줄 처리하였음.

(3) '세계화'가 포함된 네트워크 군집 비교

단어 A와 단어 B가 n개의 기사에서 동시출현한 경우, 네트워크적 시각에서 보면 단어 A와 B는 n만큼의 가중치를 갖는 링크(link)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전체 단어쌍으로 확대하면 단어쌍을 이루는 각각의 단어들을 노드(node)로 하며 동시출현빈도가 링크의 가중치가 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엑셀(NodeExcel)을 활용하여 단어들의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Wakita-Tsurum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높은 군집 내 연결 밀도(dense intra-community links)"와 "낮은 군집 간 연결 밀도(less inter-community links)"를 지향하는 모듈성(modularity)에 기반해 단어들을 군집화(clustering)하였다(Wakita and Tsurumi, 2007; Yuliana, Sukirman and Sujalwo, 2017). 아래의 〈표 6〉은 군집화 결과 '세계화'와 동일 군집(cluster)에 포함된 단어들을 보여준다. 이 단어들은 —'세계화'를 포함한— 군집 내 단어들과 높은 연결성을 가지며, 군집 외 단어들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결성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세계화는 경성 이슈(hard issues)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정치

경제적 패권경쟁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무역분쟁, 국제정치경제의 다자주의 패러다임과 그것이 봉착한 위기 및 도전에 관련된 단어들이 '세계화'와 동일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계화의 양상에 부합한다.

이를 기준으로 대유행 이후의 기사들에서 확인된 '세계화'와의 동일 군집 구성 단어들을 살펴보면 뚜렷한 이슈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대유행 이후에는 식품 및 연구개발이 세계화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세계화라는 장기적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라는 단기적 충격이 작용함으로써 만들어낸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한국 언론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화는 —경성 이슈 관련 세계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증대된 건강, 의료, 보건, 환경 분야에 관한 관심을 동력으로 삼아 이 분야에서의 초국적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Madhok, 2021).

〈표 6〉 '세계화'와의 동일 군집 구성 단어

코로나 대유행 이전(2018-2019)		코로나 대유행 이후(2021-2022)	
소분류 (단어 수)	단어 (전체 59개)	소분류 (단어 수)	단어 (전체 53개)
미중갈등 (12)	• 대중국, 동맹국, 미중, 백악관 • 개혁개방, 일대일로, 우선주의, 일방주의 • 강경파, 고위급, 한미, 행정부	식품 (11)	• k푸드, 간편식, 세계김치연구소, 셰프, • 식품회사, 전통식품, 조리법, • 편의점, 한국식, 현지인, 현지화
다자주의 (13)	• 국민투표, 브렉시트, 지지자 • wto, 기조연설, 다보스포럼, 다자주의 • 정상들, 정상회담, 정상회의, 주요국 • 동반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연구개발 (14)	• 과학화, 기능성, 업무협약, 연구소, • 연구자, 원동력, 학술지, 표준화, 유공자, • 유효성, 의약품, 치료법, 한의학, 화장품

코로나 대유행 이전(2018-2019)		코로나 대유행 이후(2021-2022)	
소분류 (단어 수)	단어 (전체 59개)	소분류 (단어 수)	단어 (전체 53개)
무역분쟁 (11)	• 무역, 무역갈등, 무역전쟁 • 보호무역, 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 세이프가드 • FTA, 수입품, 자유무역, 재협상	사건·사고 (5)	• 사과문, 악의적, 참담, 추징금, 피고인
경제일반 (10)	• 1인, GDP, 가능성, 국제무대, 기업인, 세탁기, 전경련, 전략, 제조업, 중산층	경제일반 (17)	• 관계자, 구성원, 사유화, 사회공헌활동, 생산량, 소비자, 수출국, 수출액, 신흥, 인지도, 임직원, 전국화, 전시회, 참가자, 창업주, 최소화, 판매량
기타 (13)	• 개막식, 기자회견, 마술사, 박물관, 본격화, 세계인, 수호자, 장례식장, 참석자, 창업자, 패션쇼, 프레타포르테, 환구	기타 (6)	• 기념식, 기념행사, 대가족, 맨주먹, 사진, 언론인

주: 군집 내 단어들의 레이블은 내용전달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가 시기적·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임.

Ⅳ. 코로나 팬데믹과 향후 세계화 전망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세계화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한 논제다. 양분되어 있다. 세계화가 일시적으로 위축할 것이라는 주장과 세계화가 상당 기간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화는 일시적 수축을 경험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세계화 추세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 주장한다. 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지구적 산업연계가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확장 일변도의 세계화는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시적 수축을 강조하는 입장은 현재 우리는 이미 전례 없는 수준의 세계화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다양한 교류, 경제의 네트워크화, 지식, 아이디어, 사람들의 이동과 순환이 세계화를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이다(구양미, 2020:210, Ciravegna and Michailova,

2022:172-173).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적 타격을 야기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내적 문제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코로나 대유행은 일종의 외생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식되면 경제나 세계화는 곧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특히 코로나 대유행은 다른 사회적 재난인 전쟁, 천재지변과 달리 생산설비나 자본재를 파괴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해서 볼 때 일시적 충격으로 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화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냥 형태만 달라질 뿐이라는 논지다. 특히 디지털 상품들은 이제 적지 않은 산업들을 주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눈에 뛰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일시적 충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이것이 세계화의 퇴조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경제적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세계화가 후퇴한다는 것이다. 여러 국가들이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이른바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의 탈출을 가속화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re-shoring)이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니어쇼러잉(near-shoring)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대체로 공통적이다. 또한 위기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일부 국가에 집중되었던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의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구양미, 2020: 210).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적 가치사슬이 약화되어 경제적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계적 가치사슬의 재편성은 보다 덜 세계화되고, 보다 지역적으로 분할된 세계경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조동준, 2020: 152; Ciravegna and Michailova, 2022). 코로나 대유행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나 글로벌 가치사슬이 취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만큼, 공급망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고, 핵심 부문에 대한 국유화나 더 많은 물량보유

가 필요하다는 인식 대두된다는 것이다(임운택, 2021: 94).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세계화 경향성이 둔화되고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계화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분명해진만큼 탈세계화 추세는 더욱 확산,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는 감소할 것이며, 해외 진출기업들의 본국 회귀인 리쇼어링이나 글로벌 생산 공급망을 인근 역내 지역에만 배치하는 역내 블록화 현상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윤상우, 2021: 122).

전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는 기업에도 커다란 변화를 동반한다(Delios, Perchthold and Capri, 2021; Enderwick and Buckley, 2020; Hameiri, 2021). 전지구적인 산업 연계가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리스크 인식이나 리스크 평가방식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대응 전략도 적시생산(Just In Time) 경제에서 비상대비(Just In Case) 경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Brakman, Garretsen and van Witteloostuijn, 2020).

세계화의 중요 쟁점의 하나인 국민국가의 역할에 관해서는 모든 선행 연구가 공통적으로 국민국가의 재부상을 전망한다. 이를테면 난민문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문제, 새롭게 제기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 있어 국민국가의 정치경제적 개입 및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세계화가 퇴조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에는 사회적, 정치적 이유도 있다.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보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Ciravegna and Michailova, 2022).

첫째, 코로나 대유행은 전반적으로 경제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국가 내부 불평등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했다. 아울러 국가 간 불평등도 증가했고, 세계적으로 빈곤이 줄어드는 추세도 반전되었다. 이러한 국가 및 세계 단위의 불평등 증가는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의 사회세력이 다시 세계화를 증진시키려 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여러 국가들에서 코로나 대유행은 개별 국가가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화시켰다. 과거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던 국가의 경제개입도 이제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대유행으로 발생한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생각이나 보호주의 정책의 발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코로나 대유행에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방역이나 치료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이나 다자 간 제도에 기초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적 대책을 만들었고 국가 간 경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그간 세계화가 작동하는데 기초가 되어온 제도적 틀이나 도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지역화(regionalization) 역시 세계화의 후퇴를 전망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중 갈등과 지구적 양극화가 발생하면서 세계화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정치경제 전반에서 미중 패권경쟁 심화 양상을 보인다(Madhok, 2021).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공동체(TPP, RCEP 등) 결성 조짐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Enderwick and Buckley, 2020). 양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자주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강하다. 지역 공동체 간 배타적 협력과 경쟁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국제규범(기후, 탄소 등) 참여 강제에 대한 불만으로 등장한다(McNamara and Newman, 2020).

코로나 대유행 이전 이미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과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이 분화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중국의 내수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국 시장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전부터 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상호의존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두 대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경제연결망의 강도는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를 포함하는 중국 중심의 경제연결망을 발전시켰고, 미국은 미국

중심의 경제연결망을 발전시켰다(조동준, 2020: 153-154).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과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 간 간극이 더 벌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계 제약회사가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핵심 영역을 미국에서 진행하지만 실제 생산을 중국에서 진행하던 과거 방식이 한 국가 안에서 완결적 주기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이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미중 간 상호의존이 줄어들면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인한 양국의 자제 기제가 점차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양국 간 이해 갈등이 상대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극단적 갈등으로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양국 간 갈등이 악화될 위험이 커진다(조동준, 2020: 154).

정치적 경쟁은 더욱 심각한 위험의 국면으로 들어간다. 코로나 이전 미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권위주의가 경쟁은 과거 냉전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체제경쟁은 분명 존재한다.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차이가 더 선명해지고, 체제경쟁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봉쇄를 포함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였다. 반면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봉쇄와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했지만, 질병 예방에서는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양국 정치체제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조동준, 2020: 155).

코로나 대유행은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냉전 시대를 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이상환, 2020: 157). 신냉전은 탈냉전기 패권경쟁의 산물이고 중국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 충돌의 결과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세력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나가는 중국 내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로 보인다. 경제발전이 정치적 민주화를 초래한다는 명제가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이상환, 2020: 161).

V. 요약 및 결론

1. 한국의 세계화 담론 분석 요약

코로나 팬데믹은 전지구적인 현상이지만, 각 국가는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팬데믹을 전후한 상황에서의 세계화 논의의 변화를 조밀하게 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 유행 이전과 이후 세계화 담론의 변화를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세계화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주요 언론 신문 기사의 동시출현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 대유행 이전 한국 언론은 세계화를 정치경제 이슈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특히나 그동안 세계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했던 자유무역·다자주의에 더해, 브렉시트·미중갈등 등 국제정치 현안이 만들어낸 무역분쟁·보호주의·자국우선주의가 일종의 반(反)경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언론의 세계화 담론 지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둘째, 코로나 대유행은 세계화와 결부된 경성 이슈(hard issues)에 대한 한국 언론의 관심을 단기적으로나마 희석시킨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신종 감염병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됨에 있어 물리적인 인적 교류가 제한된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창출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관심이 기존 세계화 이슈에 대한 관심을 대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협력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화 이슈로 부상하였다.

셋째,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일자리 문제, 불평등 문제 등 세계화와 결부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는 국내외의 일자리 문제,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대유행에 대응하며 'Bring the state back in'이라는 수사가 다시 회귀하여 국민국가가 그 역할과 권위를 승인받으며, 일자리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는 정서가 확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화의 일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2. 새로운 방향 모색

그동안 세계화는 불가피하고 지속될 현상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간 대규모 자본 흐름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전환하면서 세계 GDP 대비 교역량이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 이상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빠른 속도로 확대했던 글로벌 인적·물적 교류가 위축되고 비교적 혹은 절대적으로 임금이 싼 국가에 집중되었던 제품 생산 시설도 각국의 공급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 혹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외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한 것이다. 팩데믹이 세계화의 부작용과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세계화의 후퇴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 사슬이 흔들리자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국내에서 찾아 나서는 경향이 강해졌다. 싼 공급대신 가장 안전한 공급망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다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경제 및 정치 갈등이 격렬하게 겹쳐지면서 서방국가의 제조업체들은 주요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세계화를 불신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의 정당성도 높아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간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공급망, 가치사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을 많은 나라가

알게 되었고, 이것의 리스크가 새롭게 주목받았다. 실제로 세계화를 비판하는 흐름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실제로 몇몇 큰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보호무역이나 자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변하고 있다(Thangavel, Pathak, and Chandra, 2022: 7-8).

하지만 세계화를 멈추거나 반대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세계화를 늦추고 국가들 간의 연계를 끊는 고립전략은 코로나 대유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에 불과하다. 대유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집단적인 협력을 기초로 더 강하게 일어서도록 서로 돕는 것이다. 지구적 협력을 통해서만이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이나 지구적 도전인 기후 변화, 테러리즘, 핵확산,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Thangavel, et al., 2022: 9-10).

팬데믹의 상황에서 모든 국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력의 방안을 찾아 나서는 이른바 정치의 세계화가 다시 부상되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적 협력이 제도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경제의 세계화는 다소 둔화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에 정치의 세계화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여전히 상호의존적인 세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세계화의 후퇴 경향은 분명하지만, 세계화가 느려진 것만은 분명하지만 역주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가 과거와 같은 비중을 지닌 사회 질서의 중심축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의 세계화는 세계화의 변형 혹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경성 이슈에서 연성 이슈(soft issue)로의 전환으로서 세계화가 두드러지게 출현한다. 기후, 안전, 식량 위기의 세계화의 출현을 비롯하여 의료, 건강, 소비자, 문화, 삶의 질의 세계화가 중심 영역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축소냐 강화냐의 이분법을 넘어 세계화, 탈세계화,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영역과 층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복잡하게 출현하는 양상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났던 많은 현상은 세계화의 후퇴라기보다는 세계화의 영역과 층위에 따라 구성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역사 상황조건(historical contingency)이 세계화의 거대구조(deep structure)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키고 있다.

2022년 5월 31일 접수
2022년 6월 26일 수정 완료
2022년 6월 18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구양미. 2020.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209-228.

권창규. 2021. “팬데믹을 통해서 본 자본주의 성장신화의 안과 밖”. 『사이間 SAI』. 30: 347-387.

박길성. 2003.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고려대출판부.

윤상우.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자유주의 전망: 글로벌 경제와 선진국 국가성격에 대한 시사점”. 『지역사회학』. 22(1): 105-136.

이상환. 2020. “Post COVID-19 시대의 국제정치: 탈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신냉전 질서의 도래”. 『정치·정보연구』. 23(3): 151-168.

임운택. 2021. “포스트 코로나 현상과 노동의 위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18(2): 80-114.

정준호. 2020.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윤홍식 편.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사회평론아카데미.

조동준. 2020. “코로나-19와 지구화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60(3): 125-167.

Afesorgbor, S.K., van Bergeijk, P. and Demena, B.A., 2022. “COVID-19 and the Threat to Globalization: An optimistic note”. In E. Papyrakis (Ed.) *Covid-19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

Brakman, S., Garretsen, H., and van Witteloostuijn, A. 2020. “The turn from just-in-time to just-in-case globalization in and after times of COVID-19: An essay on the risk re-appraisal of borders and buffers.” *Social Sciences & Humanities Open* 2(1). 100034.

Delios, A., Perchthold, G., and Capri, A. 2021. “Cohesion, COVID-19 and contemporary challenges to globalization.” *Journal of World*

Business. 56(3), 101197.

Enderwick, P. and Buckley, P. J. 2020. "Rising regionalization will the post-COVID-19 world see a retreat from globalizati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27(2).

Farzanegan, M. Feizi, M. and Hassan, G. 2021. "Globalization and the Outbreak of COVID-19: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 14: 105. https://doi.org/10.3390/jrfm14030105

Foster, J. and Suwandi, I. 2020. "COVID-19 and Catastrophe Capitalism". *Monthly Review.* 72(2): 1-20.

Foster, J., Jonna, R. and Clark, B. 2021. "The Contagion of Capital: Financialized Capitalism, COVID-19, and the Great Divide". *Monthly Review.* 72(8): 1-19.

Hameiri, S. 2021. "COVID-19: Is this the end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76(1): 30-41.

Madhok, A. 2021. "Globalization, de-globalization, and re-globalization: Some historical context and the impact of the COVID pandemic." *BRQ Business Research Quarterly.* 24(3): 199-203.

McNamara, K. R. and Newman, A. L. 2020. "The Big Reveal: COVID-19 and Globalization's Great Transform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74(S1): E59-E77.

Mihalcea, R., and Tarau, P. 2004. "Textrank: Bringing order into text." pp. 404-411 In *Proceedings of the 2004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ikolov, T., Chen, K., Corrado, G. and Dean, J. 2013a. "Efficient estimation of word representations in vector space." *arXiv preprint arXiv:1301.3781.*

Mikolov, T., Sutskever, I., Chen, K., Corrado, G. S. and Dean, J. 2013b.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nd their

compositionality."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6.

Nye, J. Jr. 2002.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prld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Oxford University Press.

Park, G. 2022.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From Financial Crisis to K-pop.* Korea University Press.

Thangavel, P., Pathak, P. and Chandra, B. 2022. "Covid-19: Globalization – Will the Course Change?". *Vision.* 26(1): 7-10.

Wakita, K. and Tsurumi, T. 2007. "Finding community structure in mega-scale social networks." pp. 1275-1276 In *Proceedings of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Yuliana, I., Sukirman, S. and Sujalwo, S. 2017. "A Comparison of Community Clustering Techniques: Fruchterman-Reingold and Wakita-Tsurumi."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y.*

COVID-19 Pandemic and Globalization: Its Agenda and the Analysis of Globalization Discourse Change in Korea

Park, Gil-Su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globalization discourse in the historical conjuncture of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explaining the globalization trends before the pandemic and overlooking the trends after the pandemic. After reviewing general features of the globalization in the age of pandemic,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in discourse by the method of co-word analysis using Korean newspapers. Although globalization does not operate as a central axis of social order as in the past, it is clear that i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Beyond the dichotomous discussion, it is concluded that globalization, de-globalization, and re-globalization are emerging in different manners depending upon the domain and layer

Key words: COVID-19, pandemic, globalization, de-globalization, re-globalization, Korea

한국사회 제23집 1호(2022년): pp.37-84

코로나19 앞의 사회/공동체: 증여, 명명, 자가면역의 동역학*

박 세 진**

요 약

이 연구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들이 증여에 값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사람들은 코로나-주지-않기라는 선물을 서로에게 준다. 논문은 증여와 사회/공동체의 관계라는 익숙한 사회인류학적 테마를 코로나19의 창궐에 의해 자극된 사회/공동체의 운동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변주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향한 혐오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코로나-주지-않기라는 선물을 일반화시키는 공동체의 도덕적 자가면역 과정이 검토된다. 둘째, '이름의 경제'라는 관점 아래 코로나19의 자극이 국민이라는 이름의 역량 강화로 귀결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주권적 명명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안한다. 전쟁 프레임이 범유행의 상황에 도입된 결과 사람들은 적에-맞서-선물하는-국민으로 명명되게 되는바, 본 연구는 코로나19 범유행을 국민의 이름(名)이 이끄는 삶(生)을 육성하는 근대적 '생명정치'가 예외적 강도로 전개되는 시간으로 파악한다.

주제어: 코로나19, 생명, 증여, 자가면역, 주권적 명명

Ⅰ. 들어가며: 코로나19와 선물

첸관싱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영감을 끌어와,

*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9S1A5C2A02083616). 심사 원고를 검토해준 익명의 논평자들과, 논문의 몇몇 착상들이 발표된 2021년 한국문화인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준 안승택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 parksejin515@gmail.com

김홍중(2020: 165)은 코로나19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론적 사유의 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전략”의 유효성을 제창한다. 그에 따를 때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재난[1]은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가시화되지 않았을 리얼리티의 특정 양상들(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이론적 주제로 끌어올려 형상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현실 적합성이 더 명확해지는 이론과 그 실효성이 희박해져 가는 이론을 대질시켜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적 사회이론의 생산적 재구성을 모색”할 계기를 이룬다(김홍중, 2020: 165).

이 글은 코로나19의 방법론·인식론적 가치에 대한 이 같은 견해를 공유하되, 그 가능성을 범유행 상황 속에서 새로이 등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새삼스레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리얼리티를 대상으로 모색한다. 코로나19 범유행은 근대적 형태의 집합적 삶을 둘러싼 질문들을 강도 높게 제기하는 문제계(問題界)를 이루는데, 이때 질문의 강도 높음은 재난 상황의 ‘예외성’과 그 안에서 전개되는 리얼리티의 ‘기시감’ 사이의 낙차로부터 비롯된다. 감염 확산의 억제라는 명목하에 취해진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조치들(확진자 동선공개와 격리, 감염여부를 불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집합·이동·출입제한,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약 등)은 분명 예외적이지만,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보다 근본적 리얼리티에 주목할 때 범유행의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은 연속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근대적 생명권력·규율권력에 대한 푸코 이론의 유효성이 범유행 이후 새로이 주목받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김봉수, 2021; 신응철, 2021; 홍경자, 2021). 통제와 규율의 강도 및 범위에 있어서의 변이는 당연히 통제·규율이라는 리얼리티 자체의 일관성을 전제한다. 통제·규율의 주된 실행자인 국가의 사태 인식(코로나와의 전쟁)과 자기 인식(국민의 안전 보장),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국민들의 자기 동원과 이를 통해 활력을 얻는 국민공동체의 존재 역시 새로움을 결여한 리얼리티이다.

---

1)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범유행을 선언했다. 이는 홍콩 독감(1968년)과 신종 플루(2009년)에 이어 1948년 창립된 세계보건기구가 범유행을 선언한 세 번째 사례이다.

따라서 전대미문의 것으로 간주되는 코로나19 범유행의 상황 속에서 기왕의 배치들, 정상적 작동들, 익숙한 구조들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모스(2002)가 『증여론』에서 전범을 세운 이래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천착했던 기획, 즉 증여의 다양하면서도 보편적인 실천들의 분석을 통해 인간 사회와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기획을 논의의 바탕에 도입한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 우리가 집합적으로 경험해온 일들을 증여와 사회/공동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생산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추가적인 이론적 자원들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며, 코로나19 범유행이 기존하는 리얼리티를 예외적 형상하에 드러나게 하는 '자극'을 이룬다는 관점에 어떠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

서둘러 생각해보면 코로나19와 선물 사이에 선명한 대립의 선이 그어지는 듯하다. 오고가는 선물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반면 오고가는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거리두게 한다. 모스(2002: 150 이하)의 말처럼 주고-받고-돌려줄 삼중의 의무가 선물의 운동을 조직한다면, 주지도-받지도-돌려주지도 않아야 할 의무가 코로나19의 운동을 멈추기 위해 부과된다. 또 선물의 순환이 그 보이지 않은 영(靈), 마오리족이 하우(hau)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추동된다면(모스, 2002: 65 이하), 코로나19는 (거의) 보이지 않은 물질인 비말에 실려 사람들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는 '주기'와 '주지-않기'라는 상반된 양태 아래 이뤄지는 선물과 코로나19의 기능적 수렴 속에서 해소된다. 선물주기와 코로나-주지-않기는 공히 그 수행자들을 집합적으로 들끓게(collective effervescence) 만든다. 누벨칼레도니의 카나크(Kanak)인들이 자신들의 축제를 "지푸라기로 만든 지붕의 각 부분을 한데 이어서 단 하나의 지붕, 단 하나의 말(parole)을 만드는 바느질"에 비유하듯(모스, 2002: 95), 선물주기(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의례에 참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자가 투입하는 모든 행위들)의 일시적 창궐로서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열광적으로 확인한다. 흥미롭게도 이른바 '코시국'의 우

리 역시 축제의 분위기와 대척점에 있는 우울의 분위기(코로나블루)와 축제의 북적임과는 정반대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말과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위대한 시민정신”, “전세계의 모범”,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각자의 자아를 들끓게 하는 언어의 과잉이 이를 방증하는바, 선물주기와 코로나-주지-않기 속에서 사람들은 동일한 부름, 공동체의 부름을 듣는다.

이러한 수렴의 함의는 명백하다. 코로나-주지-않기가 곧 선물주기이다. **사람들은 코로나-주지-않기라는 선물을 서로에게 준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주지 않음으로써 주어지는 선물을 창궐시키는 계기를 이루며, 코로나-주지-않기의 모든 세목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줘야만 하는 선물의 일람표를 구성한다. 비말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회성(sociability)의 순간을 서로 금함으로써, 또 가장 기본적 자유에 속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각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안전을,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 말하자면 ‘백신’을 준다. 이 시국에 이 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그림 1〉 대구광역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선전포스터

이로써 선물과 코로나19를 마주 놓는 이 글의 구상이 일정한 설득력을 확보한다. 범유행의 재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의 부름을 들으며, 수많은 '나'들은 무엇보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나눠가지는 존재론서 이 부름에 응답한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주지-앓기로서의 선물주기의 '범실천'으로 이끌리는바, **범유행이라는 자극과 증여의 범실천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회/공동체의 운동**이 분석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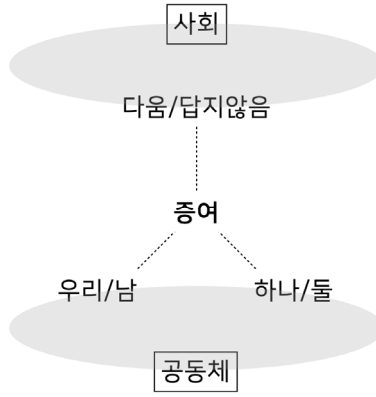
이 진술에 표명된 사회와 공동체 사이에 빗금을 치는 관점을 방어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 이는 증여를 주제로 한 많은 논의들이 '공동체적 사회'의 도래라는 꿈에 현혹되어 왔다는 사실, 그러나 사회가 공동체적이길 바라는 이러한 소망은 증여의 기능을 이상화하는 일면적 해석을 조장할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가운데 노정되는 공동체와 사회 개념의 융합에 반해 둘의 분석적 구분의 이론적 미덕을 주창하는 것이다. 공동체와 사회의 개념적 종차는 '사람들'과 그들이 점하는 '위치들' 사이의 간단한 구분에 입각해서 파악될 수 있다(박세진, 2020).

① 공동체 개념은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응한다. 사람들은 **우리/남** 그리고 **하나/둘**이라는 구분의 한 면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의 연관을 관찰하며, 서로의 연관을 우리-하나로 이해하는 이들의 집합이 곧 공동체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라는 범주는 남의 배제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찰은 '배제에 입각한 포함'의 관찰이다. 남이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를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남이 아닌 우리'이다. 다른 한편 우리를 이루는 나와 너는 하나의 말·생각·행위를 서로에게서 관찰하기를 기대하는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포함된 것이 배제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이제부터 나하고 너는 남남이다") 하나를 지시하는 관찰 역시 배제에 입각해서 포함하는 것이다.

② 사회 개념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하는 위치들에 대응한다.

> 이러한 위치들은 예컨대 아들, 선생, 친구, 국민과 같이 이름지어져 있으므로, 하나의 사회적 위치를 점유하는 일은 특정한 이름을 얻고 지키는 일과 같다. 위치-이름은 다른 위치-이름과의 관계(아들과 아버지, 선생과 학생, 친구와 적, 국민과 외국인의 관계) 밖에서는 아무런 실재성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여기에 더함으로써, '위치-이름들의 관계적 구성체'로서의 사회라는 관점이 제안될 수 있다. 위치-이름은 그것을 점한 사람을 **다움/답지않음**의 구분(이를테면 아들다움/답지않음)이 이끄는 관찰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인과적 힘을 갖는 실재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름 가진 자의 삶은 자신의 '이름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 된다.

사회와 공동체의 이 같은 구분은 다음의 이유에서 둘의 연결을 전제로 한다. 나는 특정한 이름, 예를 들어 친구라는 이름의 중개를 통해서만 너와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이름 가진 나'로서, 즉 다움/답지않음의 구분에 입각해 자기 자신과 타자들을 관찰하는 존재로서 우리/남, 하나/둘의 구분에 따른 관찰을 수행하고 또 그러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 내가 친구답지 않은 말·생각·행위를 할 때 우리/남, 하나/둘의 관찰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자명하다. 이러한 구상 속에 증여를 도입해본다면, 상술한 관찰들(사회와 공동체를 구분된 것으로서 연결하는 관찰들)의 통일성을 담보해주는 기능이 거기에 할당될 수 있다. 증여를 통해 우리/남, 하나/둘, 다움/답지않음의 구분의 앞면을 지시하는 관찰이 일거에 실행된다. 나와 너의 연관에 우리-하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의 '이름다움'을 증명해주는 모든 실천이 곧 증여이며, 코로나-주지-않기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선물주기임이 본문의 논의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그림 2〉 증여와 사회/공동체

이로써 본 연구에서 수행될 성찰의 윤곽이 드러난다. 코로나19는 선물의 순환을 통해 연결되고 재구성·재생산되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외적 자극**을 이룬다. 범유행의 시작 이래 우리가 지나온 것은 공동체적 삶이 멈추고 사회관계들이 파괴되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개인들의 고립 속에서 오히려 고양되고 국민이라는 위치-이름의 역량 강화 가운데 사회가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을 전례 없이 강력하게 규정하게 되는 시간이다. 모스(2002: 277)를 원용해 말해보자면, 코로나19의 자극은 사회/공동체의 "본질, 전체적 운동, 살아있는 측면"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찰나적 순간"을 만들어낸다. 코로나19는 사회/공동체의 곁(para-)에 자리함(site)으로써 그 구분 및 연결의 논리를 자극하며, 이 글은 그렇게 촉발된 사회/공동체의 **내적 교란**을 이 논리가 자기에게 고유한 가능성을 따라 전개되는 과정으로 분석한다.

본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II장에서는 목숨의 삶과 이름의 삶의 구분을 제안하면서 코로나19 범유행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물학적 실존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일의 불충분함을 확인한다. III장은 코로나19에 의해 유발된 교란을 공동체 쪽에서 살펴본

다. 교란은 구조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남의 구분과 하나/둘의 구분에 입각한 관찰이 강화되면서 코로나-주지-않기라는 선물이 일반화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우리는 이를 인구의 생물학적 면역화에 선행하는 공동체의 도덕적 자가면역 과정으로 분석할 것이다. IV장은 코로나19에 의한 교란을 사회 쪽에서 검토한다. 코로나에 곁을 내준 이름들(예컨대 코로나에-걸린-친구)의 역량 축소가 국민이라는 이름의 역량 강화[2]를 통해 상쇄된다는 주장이 '이름의 경제'라는 관점 아래에서 제기되며, 전쟁 프레임이 범유행의 상황에 덧씌워짐으로써 코로나-앞의-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변용의 분석 가운데 주권적 명명이라는 문제의식이 제안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소위 '코로나 시국'이 어떤 성격의 시국인지에 대해 짧게 논의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코로나19 범유행을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사유를 자극하는 계기**로 받아들이면서, 범유행 상황의 전개를 사회/공동체의 특정한 운동으로 포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론적 착상들을 제안·검토하고자 한다. 논의는 코로나19 백신 캠페인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상황, 인구의 생물학적 면역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백신'을 줘야만 했던 상황에 집중할 것인데,[3] 이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과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규정했던 그 시기 동안 범유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 정의(공동체의 위기, 코로나와의 전쟁, 자기희생의 요구 등)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는 이경묵(2022)이 "코로나19 플랫폼"을 구성하는 "실행 프로그램들"로 검토한 일련의 조치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은 물

2) 여기서 말하는 이름의 역량은 다움/답지않음의 관찰을 그 점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인과적 힘을 가리킨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IV장 초반부를 참조.

3) 엄밀히 말하자면 범유행 '상황'은 하나가 아니다. "생물학적 특징뿐 아니라 그 효과 면에서도 2019년 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2년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르며"(이경묵, 2022: 209), 그 사이 여러 "실행 프로그램(마스크 보급, 거리두기와 격리, 백신 도입과 접종)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강화되었다가 약화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정의와 할 수 있는 행동(기회)이 교체되었다"(이경묵, 2022: 220).

론, 그 같은 조치들이 저임금노동자·실업자·빈민·노인·장애인·이주민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제함에도 불구하고(조문영, 2020)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게 해준 것이기도 하다.

Ⅱ. 코로나19와 생명

1. 목숨의 삶과 이름의 삶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바이러스는 죽음의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협으로서 우리 곁에 왔다. 그 앞에서 각자는 자기보존의 새삼스러운 충동을 다양한 정도로 실감하는데, 이때 보존되어야 할 자기는 언뜻 목숨과 등치될 수 있을 듯하다. 2020년 중반의 시점에서 범유행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국가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의 상황에 준거하면서 아감벤은 이렇게 묻는다.

> "죽은 이들, 우리의 죽은 이들은 장례식의 권리가 없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우리의 동료 인간들이 말소되었음에도 교회가 이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존 이외의 다른 가치가 없는 사회란 어떤 것인가?" (Agamben, 2020b)

질문은 또 다른 질문들을 통해 답해져야 한다. 과연 문제가 되는 '생존'이 목숨의 보존과 같은 것일까? 인간 존재의 '자기'는 그 생물학적 실존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코로나19-앞의-자기'는 정말 가능하면 가장 오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일까?

만일 이러한 물음들이 홉스에게 주어진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사고를 거쳐 긍정의 답이 제출될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인간 삶의 동인은 '자신에게 좋

은 것(good, 선)을 향함'으로서의 욕망이며(홉스, 2008: 77-79), 미래를 계산에 넣을 때 그것은 선의 확보를 위한 더 큰 역량을 지니려는 권력의지가 된다(홉스, 2008: 138). 개개의 인간이 다른 모든 인간의 적으로 상정되는 홉스적 '자연 상태'에서 궁극적인 선은 살아남는 것이므로, 결국 욕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endeavour, 코나투스)에 다름아닐 것이다. 욕망은 자기보존이라는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삶을 이끌며 이때의 자기는 목숨 쪽으로 계속 미끌어진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생사여탈적 투쟁이 '자연 상태'를 규정하는 이상, 인간 본성(nature)은 목숨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지향으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같은 질문을 스피노자에게 던진다면 정반대의 답을 예상해야 한다. 자기보존의 지향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유명한 코나투스 테제가 분명히 하듯 "각 사물은 자신의 존재 역량에 따라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Spinoza, 2005: 205).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 테제를 상술한 홉스적 자명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논증한다. 욕망이란 자기에 대한 욕망이되, 여기서 자기는 생물학적 실존의 힘으로 환원될 수 없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역량을 본질로 가진 존재이다. 자기 존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구현하는 자기'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때의 본질이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목숨을 초과하는 정도만큼 자기보존은 목숨의 보존을 초월한다. 마트롱은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 "물론 우리는 살기를 원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단지 살기만을 원한다. 그렇지만 삶은 단지 피의 순환이나 그 밖의 기초적인 생물학적 기능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산다는 것, 이는 나의 개체적 본질에 따라 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본질을 상실할 때, 설령 내 피가 여전히 돌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죽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마트롱, 2008: 129-130).

관건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존재' 안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 '자기 존재'를 정의하는 본질을 현실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컨대 스피

노자적 의미에서 '자유인'이 자기 존재 안에서 지속한다는 것은 곧 이성의 명령을 따르기를 계속한다는 것이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한다 하더라도 정직할 것"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마트롱, 2008: 744). 자기로 살고자 함은 때로 죽고자 함일 수도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써 살고자 했던 인간들, 목숨을 버림으로써 이름을 지킨 이들의 존재가 말해주는 것은 **목숨의 보존으로서의 삶과는 다른 계열의 삶이 있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질서는 하나가 아니며, 고대 그리스의 언어 습관에 기대 아감벤이 제안하는 조에(*zoê*)와 비오스(*bíos*)의 구분이 이 사실을 포착한다. "조에는 모든 생명체(동물, 인간 혹은 신)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켰다. 반면 비오스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가리켰다"(아감벤, 2008: 33). 아감벤의 언어에서 조에는 "단순한 자연 생명", "벌거벗은 생명(la vita nuda)", "인간 신체에서 살아 있는 존재" 등으로 표현되며, 비오스는 "가치 있는 삶", "정치적 삶", "인간 신체에서 말하는 존재"와 연결된다. 이 그리스적 구분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 지금 여기와 아주 가까운 곳, 한반도의 북반부에서 유통된다는 사실은 특기해둘 만하다. 북조선의 담화는 육체적 생명의 삶을 "사회정치적 생명"[4]의 삶과 대비시키며, 둘 가운데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물론 후자이다.

이러한 지역적 구분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진술에 기대 일반화될 수 있다. 유기체의 살아 있음 또는 조에의 가능조건은 다윈이 말한 '자연 속의 자리', 현대적 용어로는 생태적 적소(ecological niche) 내의 특정 위치를 얻고 지키는 데 있다. 지금 여기에서의 생존을 위한 유기체의 투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태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투쟁과 같다면(cf. Guille-Escuret, 1996), 사회정치적 생명 또는 비오스의 가능조건은 '사회 속의 자리', 즉 위

4)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회정치생활 과정에 가지게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명.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며 영생하는 생명이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사회정치적생명", 조선말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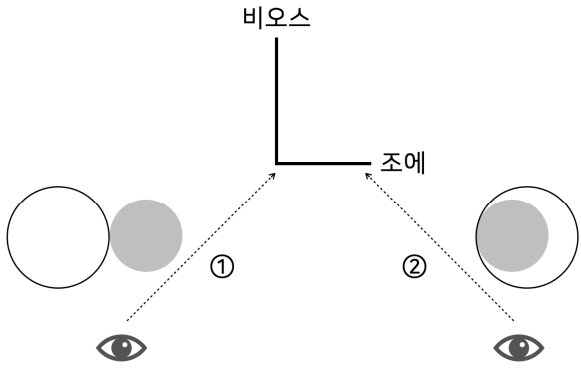
치-이름을 얻고 지키는 데 있다. 북조선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어버이수령의 '혁명전사'라는 이름이 요구하는 삶을 구현한다는 것이며(박세진, 2022), 스피노자적 인간(가령 소크라테스)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자유인'이라는 이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때 끝난다. 조에, 유기체의 삶, 목숨의 살아있음에 대비되는 비오스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름을 얻고 지키고 남기기 위한 투쟁의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문제는 生命의 보존이 아니라 말하자면 '生名'하는 것, 이름(名)이 이끄는 삶(生)을 살고 또 이름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목숨은 사라져도 이름은 살아남을 수 있으며,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만 이름이 살 수 있다.

2. 코로나-앞의-자기

아마존 원주민 사회의 남자들('남자 즉 전사')에게 끌라스트르(2002: 341)가 부여한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정의는 이러한 관점과 공명한다. 여기서 죽음은 물론 목숨의 말소로서의 죽음인데, 그것을 통해 당사자가 남자라는 이름하에서 살아남게(또는 '영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죽음을 향한 존재는 또 다른 삶을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生命을 넘어섬으로써 生名하고자 하는바, 목숨을 위한 삶과 이름을 위한 삶(자유인의 삶, 남자-전사의 삶, 국민의 삶, 어머니의 삶 등) 사이의 원리적 괴리는 이처럼 후자가 전자의 포기를 요구하는 순간 현실화된다. 요컨대 비오스는 조에의 부정 가능성 위에 스스로를 정초한다. 조에를 간직하는 대가로 비오스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 이름을 더럽혀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

여기서 조에와 비오스는 상호 배제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간 존재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비오스가 인간이 다른 유기체들과 공유하는 조에 위에 '추가'되는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름은 축자적 의미에서 '체현'되어야 한다. 이름의 삶은 목숨을 가진 몸을 '빌려' 이뤄지며, 목숨의 포기라는 요구 역시 이러한 빌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제 조에는 비오스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자 그 현실성을 담보하는 조건이라는 역설의

형상으로 드러나는바, 둘의 관계는 '포함적 배제'라는 역설의 논리로 파악되어야 한다(cf. 아감벤, 2008: 45). 비오스는 조에를 **배제의 형식으로 포함**한다.



〈그림 3〉 포함적 배제

비오스와 조에를 수직각적으로 결합된 원들로 형상화해 본다면, 둘의 관계는 그것을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①의 관점에서는 비오스와 조에가 상호 배제적인 것으로, ②의 관점에서는 비오스가 조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로써 명확해진다.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각자가 보존하고자 하는 '자기'는 목숨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아감벤의 한탄도 실상 이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죽음이다. 관건은 목숨 자체가 아니라 이름의 삶에 포함적으로 배제된 목숨(엄마의 목숨, 남편의 목숨, 딸의 목숨, 친구의 목숨, 이웃의 목숨, 국민의 목숨, 동료 인간의 목숨)이며, 목숨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에 한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목숨은 생물학적 질서로부터 사회적 질서로 '포획'될 때 비로소 소중해진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위기의 서사 역시 문제의 요체가 생물학적 생명의 개별적 유지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준다. 우리는 마치 당연한 듯이 범유행의 상황을 공동체의 위기로 이해한다('재난'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이러한 이해가 내포되어 있다). 또 "팬데믹 발생에 뒤따른 정치적 위기가 거의 즉각적으로 강력한 정부 조치를 정당화기 위한 전쟁의 레토릭으로 뒤덮였다"(Lehtinen and Brunila, 2021: 2)는 사실이 보여주듯, 코로나 시국을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관점 역시 꽤나 당연해 보인다[5]. 이러한 당연함으로부터 연역되는 또 다른 당연함이 바로 코로나-앞의-자기가 목숨-가진-몸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전쟁에 의해 위협받는 것은 각자의 유기체적 목숨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 오직 공동의 것으로서만 존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또 전쟁이란 목숨-가진-몸을 대량으로 파괴하는 일에 다름없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은 적의 편에 속한 이들의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 편의 목숨도 소모한다. 슈미트(2012: 61)가 말하듯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는 기꺼이 "죽을 각오와 살인할 각오"를 그 구성원에게 요청하는데, 이를 국민의 삶을 살 각오, 목숨을 버림으로써 국민의 이름 아래 '영생'할 각오로 바꿔 써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구분한다는 진술은 충분하지 않다. 전쟁은 무엇보다 조에와 비오스, 목숨의 삶과 이름의 삶을 구분한다. 가치가 논해 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름이 이끄는 삶이며, '목숨 그 자체'는 가치의 영역 밖에 머물러 있다. 적의 이름이 그것에 포함적으로 배제된 목숨을 원리적으로 파괴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면,

5) "文 '지역감염 확진자 수 4명…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하자'"(서울경제, 2020/07/20), "정세균 '전쟁에 준하는 사태… 불법행위자 즉시 검거'"(경향신문, 2020/09/27). 이 같은 상황 인식은 지역과 체제를 불문하고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가령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다른 국가가 아니라,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적과 전쟁 중입니다"(*Le Monde*, 2020/03/16)라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진단'이나, "이 땅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을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타산이나 대가도 바람이 없는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전쟁"(조선의 오늘, 2022/06/09)으로 이해하는 북조선의 관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국민의 이름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로 각오한 자의 목숨은 그 소모의 실제적 가능성 위에서 보호된다. 목숨은 목숨 이상의 것일 때에만, 목숨 너머의 차원에 포획될 때에만 가치 있다. 이 포획은 목숨을 버릴 요구를 함축하는 것이므로, 목숨은 자기 안에 죽음을 기입시킴으로써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코로나와의 전쟁 역시 국민이라는 이름이 이끄는 삶의 수호를 목표로 하며, 목숨은 목숨 이상의 것으로서, 즉 이름의 삶에 포함적으로 배제된 것으로서 보호되고 관리된다. 코로나19는 삶과 죽음의 두 질서 사이에서 문제로 포착된다. 조에의 연쇄적 파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에 국민이라는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 될 이름이 이끄는 삶을 사는 이들의 연결이 맞서는바, 전쟁의 유비가 분명히 해주는 것처럼 코로나-앞의-자기는 곧 **적에-맞서는-국민**이다. 제기되는 질문은 이때의 맞섬이 무엇을 통해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Ⅲ. 코로나19와 공동체

1. 주지 않을 수 없는 선물

공동체에 관한 근자의 정치철학적 논의의 주요 준거 중 하나인 에스포지토는 영어 커뮤니티(community)[6]가 유래하는 라틴어 코무니타스(*communitas*)의 어원 분석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거기에는 '함께'를 뜻하는 '*cum*-'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선물, "주지 않을 수 없는(cannot not give)" 선물을 가리키는 '*munus*'와 결합되어 있으므로(Esposito, 2010: 5), 고대 로마인들이 공동체라는 단어로 포착하고자 했던 현실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다. 증여의 의무를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의 집합이 공동체일

6) 불어 communauté, 이탈리아어 comunità, 스페인어 comunidad, 포르투갈어 comunidade 등.

것이다.

에스포지토는 소유-닫힘의 공동체론을 빼앗김-열림의 공동체론을 통해 극복한다는 구상 아래 이러한 평이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극화한다. 흔히 이야기되는 바와는 달리 공동체는 "그 성원들이 공동으로(in common) 가진 것이 그들에게 고유한(proper) 것"이 되는 운동과 무관하다(Esposito, 2013: 83). 오히려 공동체는 선물의 의무 부과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이다. "공동체는 탈취(expropriation) 과정의 개시 그 자체"이며(Bird and Short, 2013: 2), 이 과정 속에서 각자는 타자를 향해 개방되면서 감염과 상처에 노출된다. "원초적 코무니타스에 완전히 속한다는 것은 자기를 타자에게 서서히 여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실체, 즉 개인적 정체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Esposito, 2013: 84). 이처럼 "공동체는 각자의 정체성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비우기"에 "오직 '상실, 제거, 또는 빼앗김'으로서만 경험될 수 있다"(Bird and Short, 2013: 9). 이렇게 주지 않을 수 없는 선물인 무누스를 통해 각자가 무손한(proper)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무누스를 통해 연결되는 모두 역시 고유한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지 않을까? 그리하여 "공동체는 공통의 본질 또는 공유된 속성(property, 재산) 이외의 모든 것"이지 않을까?(Bird and Short, 2013: 2).

다시 한 번 질문은 또 다른 질문들을 통해 답해져야 한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공동체적 존재성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빼앗김일까? 혹 공동체를 '보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는 열망이 에스포지토로 하여금 빼앗김-열림과 소유-닫힘의 변증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는 문제의 핵심이 마치 공동체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과 바람직하지 않은 관점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는 것처럼 사고한다. 에스포지토는 공동체를 "소속, 정체성, 소유권"과 연결시키는 어떤 '공동체주의자들'의 관점을 집요하게 문제 삼는 반면, 민족·언어·땅·역사·전통·종교·조상·혈연과 같이 공유된-고유한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길어올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 인간의 '숙명'에 진지하게 착목하지 않는 듯하다. 그는 빼앗김-열림으로 시작되는 과정이 어쩌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소유-닫힘으

로 귀결되는 공동체의 존재론적 역설을 보지 못하며, 증여가 공동체의 어원에 자리한다는 사실 확인을 넘어 증여의 실질적 기능을 분석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맹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비판이 요청된다.

우선 주목할 것은 오직 빼앗고 여는 공동체라는 에스포지토의 관점이 '공동체에 선행하는 개인적 정체성'이라는 전제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실체, 즉 개인적 정체성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포기가 아닌 쟁취(또는 포기를 통한 쟁취)일 수 있다. 공동체적 삶 이전에는 단지 유기체들이 존재할 뿐이며 그 경우 말해질 수 있는 정체성(자기 동일성)은 조에의 차원에 국한된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기로서의 자기'라는 폐쇄적 회로에 갇힌 존재, 오직 자신의 것인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본질로 갖는 존재에 머물러 있다. 증여의 의무를 지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이러한 존재를 극복하는 새로운 존재의 지평이 열린다. 앞서 시사된 것처럼 증여의 궁극적 형상이 목숨을 내놓는 것, 목숨의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의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존재였던 자기가 이제 그 포기의 실제적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타자를 향해 개방된다는 것이다. 포기되는 것은 말하자면 '오직'과 '내 목숨'의 연결이며, 이러한 포기의 결과 '타자와의 연결 가운데서 존재하는 자기'라는 새로운 종류의 개체성이 쟁취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 빼앗김을 통해 얻은 것이 공동체적 존재의 '가장 소중한 실체'를 이룬다. 나는 증여를 통해 탈취되는 동시에 쟁취하며, 그렇게 얻은 것을 또 다른 무언가를 '줌으로써 보존한다'(cf. Weiner, 1985). 증여는 "타자에 대한 배려"의 법(에스포지토, 2015b: 312)이기 이전에 자기에 대한 배려의 몸짓이다.

출발점에 이미 개인적 정체성이 있다는 설정, 증여를 통해 "그/그녀 자신으로부터 도주하는" 주체(에스포지토, 2015a: 401)라는 설정이 공동체에 대한 에스포지토의 사고를 편향시킨다. 하지만 과정은 자기로부터의 도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찾고자 하는 여정으로 시작된다. 자기가 타자를 향해 개방되어야 한다면, 이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실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이들과 관계 맺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만 나 자신과 관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인간은 분명 "사이의 존재", "함께-있음(commune)의 존재자"이지만(에스포지토 2015a: 403), 또한 확실한 것은 함께 있음 가운데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나'라고 말하고 '나'로서 행위하는 매순간 '나'는 말과 행위의 원천으로서 나와 너 모두의 관점에서 개체화된다. 말하자면 '나'는 따옴표를 통해 닫히는 동시에 말과 행위를 통해 너에게 개방된다. 함께 있기 위해서 나는 증여해야 하고, 증여하기 위해 나는 나 자신으로 있어야 한다. 나는 증여의 실천에 나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음을 알아야 하고, 다움/답지않음의 평가를 중차대한 일로, 나 자신의 일로 감각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한편 열림은 그것이 증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인 한 '모든 타자'를 향한 것일 수 없다. 선물을 매개로 성립하는 "우리의 함께-있음(*cum*), 함께-있음으로서의 '우리'"(에스포지토, 2015a: 400)는 선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이들 '없이 있음'이기도 하다. 공동체는 무누스를 함께 하는 이들에게만 열려 있으며, 공동체적 자기는 타자 일반이 아니라 그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하나-다움이라는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전체 타자의 특정 부분에게만 열려 있다. 무누스는 확실히 타자성(otherness)을 향한 열림의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각자가 이 요구를 수행한 결과 창발하는 '우리성(weness)'이 공동체에게 닫힘의 운명을 부과한다는 사실도 부인될 수 없다.

이처럼 공동체는 여는 것이자 닫는 것, 포함하면서 배제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자기는 빼앗김으로써 얻게 된다. 증여는 이러한 역설을 순치 없이 전개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존재를 담보한다. 자기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일부를 빼앗기는데(모스, 2002: 71), 여기서 핵심은 타자에게 주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자기가 '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타자들과의 연결을 본질로 갖는 공동체적 자기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결핍'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모든 행위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타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언제나 '밖으로 전유(expropriation)'된다. 나는 나의 행위를 통해 너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무언가를 통해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우리,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의미된다면 그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 가운데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되기에 빼앗김은 얻음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남, 하나/둘 사이에 포함과 배제의 빗금이 그어지므로 열림은 닫힘이다.

〈그림 4〉 "시민들이여 마스크를 써라!": 프랑스 로리앙 시의 선전포스터

이상의 논의는 코로나-주지-않기의 실천이 선물주기일 수밖에 없는 원리적 이유를 해명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목들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나를 위한 일이며 나아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그 가운데 내가 빼앗기는 동시에 얻게 되는지, 내가 '너와 남이 아니라 우리인 나'로 재확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프랑스의 한 지자체에서 제작한 위의 포스터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공한

다. 왜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가? 작은 글씨의 표어가 답하길, "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 마스크 착용은 공동체에의 포함(소속)을 밝히는 것이며, 미착용은 우리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한 뼘도 안 되는 부직포가 나를 존재론적 기로에, 우리/남의 갈림길에 서게 한다.[7] 대문자로 적힌 커다란 표어("시민들이여 마스크를 써라!") 역시 코로나-주지-않기의 실천을 대표하는 마스크 착용에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프랑스 국가의 후렴구인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Aux armes citoyens)"를 패러디한 이 표어는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일을 전시에 무기를 들지 않는 일과 등치시킨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도덕적 지탄은 물론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마땅한 행위로 의미화된다. 포스터는 비난, 혐오, 적의를 행간에 감춘 채 모두에게 증여를 명령한다.

2. 공동체의 '자가면역'과 증여의 명령

남은 문제는 선물주기로서의 코로나-주지-않기가 공동체 내에서 확산·정착되는 실제적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자극이 유발한 교란의 구체적 양상에 주목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범유행의 초기 국면은 **피해자/가해자 도식**이 이끄는 관찰의 급작스런 확산을 통해 특징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예기치 않은 발생이 만들어낸 모든 불확실성을 뚫고,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개인과 집단의 형상이 신속하고도 명료하게 가시화되었다.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 예배를 강행하는 '개독교'인들, 소위 불법 집회의 참가자들과 집합

7) 수많은 나와 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대열 속에서 서로를 만나며, 우리의 시각에서 이뤄지는 사태 서술은 이러한 만남을 촉구하고 자축한다. 참여, 헌신, 희생이라는 의미가 코로나-주지-않기의 실천에 부여되며, 그것은 감사(#국민덕분에)와 응원("서로를 향한 우리의 응원")을 요청하는 일로 간주된다. 거리두기는 사랑으로 하는 것("연말연시, 사랑한다면 거리두기 하세요!")이자,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배려하는 마음 가까이두기")이라고 말해진다. 요컨대 그것은 완벽하게 증여의 의미론에 포섭된다.

금지를 무시하고 집합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젊은이들, 심지어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숨을 헐떡이는 택배배달원"(이문수, 2020: 143)이 바이러스의 숙주로 식별되고 커뮤니케이션되었다.

커다란 **역학적 불확실성**(예방과 치료의 불가능성, 확산의 반복, 잦은 변이 등)을 가진 코로나19의 자극은 그에 상응하는 크기의 **도덕적 확실성**의 구축이라는 방식으로 공동체에 의해 수용된다. 상술한 것과 같은 '비도덕적 인간'들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발맞춰 증식할 뿐만 아니라, 확진자들이 감염 사실을 주변에 밝히기 꺼려한다는 것이 말해주듯 감염이라는 역학적 사실은 그 자체로 가해라는 도덕적 사실로 의미되기에 이른다. 감염이 곧 죄가 되고 낙인이 되는[8] '도덕 역학(moral epidemiology)'의 등장은 범유행의 현실 자체를 변화시킨다. 사람들은 이제 병원체에 대한 면역을 갖지 못한 취약한 신체가 아니라 도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특히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잠재적 피해자의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마치 비난의 대상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코시국'의 삶이 견딜 만해지기라도 하듯,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가해의 죄를 범한 이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충동을 발산했으며 미디어는 이를 적극 중개하면서 강화했다.

이로써 중요한 논점 하나가 떠오른다. 코로나19에 자극된 공동체는 배제되어야 할 것을 자기 내부에서 식별함으로써 포함하게 되며, 그렇게 식별된 자기의 일부를 공격함으로써 그것을 자기로부터 배제시키고자 한다. 상황은 **자가면역**을 연상시킨다. 생물학적 의미의 면역은 약화된 형태의 감염을 통해 받아들인 병원체를 항원으로 삼아 면역계가 항체를 형성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자가면역은 면역계가 자기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면역과 마찬가지로 포함적 배제의 논리를 따르되 그 적용 대상이 기존에 몸 내부에 통합되어 있던 기관이나 조직이라는 점에서 독특성을 가진다. 코로나19 범유행 초기 국면의 공동체 역시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일부를 이물질(가해자)로 인식하면서 그에

8) "[코로나 1년] 완치됐지만… 나를 꺼리는 시선 가장 힘들어"(연합뉴스, 2021/01/13).

대한 강력한 면역 반응—비난, 혐오, 분노, 적의의 소통—을 보인다.[9)]

데리다는 "짐승과 주권자"라는 제하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자가면역에 대한 흥미로운 사고를 개진한다(Derrida, 2010: 118-120).[10)] 그가 주목하는 것은 굴대의 양끝 혹은 중앙에서 이뤄지는 바퀴의 운동이다. 바퀴는 굴대를 축으로 끝없이 회전하는데, 데리다는 이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되돌아가려는 자기성(ipséité)의 운동, "자기 자신으로 있고자 하는 꿈"에 의해 추동되는 자기지시적이고 자기참조적인 운동의 메타포로 이해한다. 그러나 바퀴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바퀴(자기성)의 관점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굴대는 실상 앞을 향해, 미지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바, 이로부터 자기성의 운동이 내포하는 역설이 드러난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해 운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타성(異他性, altérité)과 마주하게 된다. 자기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 가운데 스스로를 위협에 노출시키게 된다는 역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가면역과 연결된다. 자기가 자신의 순수성을 간직하려는 지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외적 위협의 인식은 내적 순수화 작업의 착수라는 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자기는 자신의 면역기제를 스스로를 향해 작동시키게 된다.[11)]

자가면역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공동체에 대한 본고의 관점과 결합시켜,

---

9) 오늘날 면역(immunity)이라는 용어는 거의 전적으로 생물의학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기원에서부터 19세기 이전까지 그것이 '의무 또는 책임의 면제'를 뜻하는 법적·정치적 용어였음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immunity의 번역어인 면역(免疫) 역시 생물학적 면역과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함"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황임경, 2013: 118-123).

10) 데리다의 자가면역 개념에 대한 소개로는 진태원(2018: 25-30)과 신정아·최용호(2016)를 참조. 이문수(2020)는 코로나19 범유행의 상황과 관련해 데리다, 에스포지토, 버틀러의 면역 개념이 가진 함의를 논한다.

11) 진태원(2018: 27)이 인용하는, 데리다의 1993년 저작인 『마르크스의 유령들』의 한 대목은 자가면역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선취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살아 있는 유일한 자아로 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동일한 것으로서 자기 자신과 관련시키기 위해, 살아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자기 내부로 타자를 영접하게 되며[...],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비자아, 적, 대립자, 적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역적인 방어기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맞서서 작동시켜야 한다"(Derrida, 1993: 275).

코로나19의 자극에 의해 유발된 공동체의 교란 양상과 자가면역을 통한 그 극복 과정을 기술해보기로 하자.

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말(또한 말에 값하는 행위)을 하나/둘의 구분에 기대 관찰한다. 우리라는 믿음은 하나의 말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은 말의 동일성에서 그 가시적 증거를 찾는다. 코로나19는 하나를 지향하면서 운동하는 공동체가 그 가운데 마주하게 된 위협이다.
② 그러나 하나의 말에 대한 기대는 예/아니요 사이의 선택 가능성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 조건에 의해 원리적으로 위협받는다. 그 말이 어떤 것이건 '아니요'라고 답하는 이들이 없을 수 없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가진 위치-이름들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할 때, '아니요'라는 대답이 어디선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마스크를 쓰시오", "내일부터 9시에 문을 닫으시오"라는 말에 대해 '예'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③ 공동체의 자가면역은 '아니요'에 대한 면역 반응을 통해 '예'를 확산시키는 과정(따라서 둘을 극복하고 하나를 관철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자극은 기존에는 아무런 문제로 간주되지 않던 환경을 위협의 원천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체를 자가면역의 길로 이끈다. 수많은 학교, 회사, 마을, 아파트 단지 등이 공공연하게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우리/남의 경계를 재확인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 입국을 차단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 국민공동체의 일부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입국에 대해서까지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④ 환경에 대한 이 같은 인식 속에서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지향을 제고하게 된 공동체는 이제 자기 내부의 오염 인자, 이물질, '가해자'를 예민하게 감각하면서 그에 맞선 면역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미디어의 적극

적인 개입 가운데 증폭되는 가해자에 대한 비난·혐오·적의의 소통이라는 주요 면역기제에 더해, 확진자 동선공개, 구상권 청구, 코로나 신고포상제와 같은 '프로그램들'(이경묵, 2022)과 31번 확진자로 대표되는 슈퍼 전파자('슈퍼 가해자')의 형상 등이 내적 순수화를 위한 공동체의 자가면역에 동원된다.

⑤ 이러한 작업 속에서 감염이라는 역학적 사실은 도덕적 사실로 변모한다. 바이러스 확진은 자기방역, 자기감시, 자기절제, 자기희생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방기했다는 도덕적 하자를 확증하며, 감염의 가능성은 당사자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자로 만들 가능성이 된다. 감염이라는 사실에 무누스(*munus*)를 함께(*cum*)하지 않았다는 도덕적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 낱낱이 공개되는 동선이 당사자의 도덕적 결함의 증거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코로나-주지-않기의 세목들은 그것을 이행하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⑥ 그 결과 하나의 말에 대한 공동체의 기대가 '아니요'를 통해 위반될 가능성이 급진적으로 축소된다. '아니요'라는 대답은 그 자체로 이미 공동체에 대한 위해가 되며, 그 발화자는 잠재적 감염자, 감염원, '감염 조장자'로서 즉각 가해의 죄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주지-않기의 방법을 규정하는 말들은 이제 **증여의 명령**이 되고, 우리-하나-다움의 의미에 무감각할 수 없는 모든 이들에 의해 압도적인 '예'로 답해지게 된다. 예컨대 "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는 말은 '아니요'를 도덕적으로 배제하므로 증여의 명령이며, '예'를 실천하는 이들의 공동체적 존재를 긍정해주므로 **증여**의 명령이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자극에 의해 유발된 공동체의 자가면역은 자신의 일부에 대한 비난·혐오·적의의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증여의 명령이라는 항체를 획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흥미롭게도 공동체, 증여, 면역 사이의 연결은 면역을 뜻하는 라틴어 이무니타스(*immunitas*)와 공동체를 뜻하는 코무니타스(*communitas*)가 무누스(*munus*)를 어근으로 공유한다는 사실 속

에서도 확인된다(에스포지토, 2015b: 311-312). 로마법의 이무니타스는 공적인 의무를 면제받거나 특정한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예외적 개인·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근대 면역학은 이를 '질병의 해로부터의 면제'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현실을 지시하게 된다. 면역이라는 단어의 이러한 이중적 용법을 취해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한 범유행 초기 국면의 전개를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백신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인구의 면역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공동체가 먼저 도덕적 자가면역을 시작한다. 공동체는 스스로 의무를 면제한 자기 내부의 존재들을 이물질로 식별하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바, 공동체의 자가면역은 **면역에 대한 면역**에 다름아니다. '코시국'의 공동체는 의무를 면제한 이들로부터 면제되고자 한다.[12)]

자가면역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면역체계에 대한 루만의 논의와 접속될 수 있다.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 이론은 체계를 환경에 대해 닫혀 있는 것('작동상 폐쇄')으로 간주하므로, 체계의 면역은 원리상 자가면역적일 수밖에 없다. "면역이란 환경으로부터 온 방해요소들을 막아내거나 예견하는

12) 공동체와 면역, 코무니타스와 이무니타스의 관계는 에스포지토의 테마이지만, 위에서 개진된 자가면역에 대한 이해는 에스포지토로부터 고취된 것이 아니다. 그의 구상(Esposito, 2013)에서 면역 개념은 공동체의 특정한 관념(가닿아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으로서의 공동체)을 보호하는 이론적 기능을 부여받는다. 공동체는 무누스(=빼앗음)를 통해 자기를 타자에게 개방시키는 '좋은 것'인 반면, 면역은 비록 자기의 보호에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잉 속에서 공동체를 소유-닫힘의 상태로 타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나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문제는 언제나 면역으로 인해 발생한다. 우리의 입장은 좋은 것/나쁜 것의 구분을 취함 없이 증여의 면역(이무니타스)과 증여의 공동체(코무니타스) 사이의 내재적 관계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증여의 면역은 특권(귀족, 지주 등이 가진 특권)과 배제(예컨대 제국의 변방 주민들의 배제)라는 이중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대개의 시민들(특권을 누리지도 않지만 배제되지도 않는)을 포함하는 증여의 공동체가 재생산된다. 반면 평등의 권리가 소수의 특권/배제를 이론상으로 거부하는 오늘날 증여의 공동체는 증여의 면역으로부터 면역됨으로써 재생산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특히 이주민, 외국인, 타인종의 '배제로 간주되지 않는 배제')는 공동체만의 문제라고도 면역만의 문제라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증여는 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이 아니다. 면역체계는 '내적인 갈등에만 반응하며 경우에 따라 등장하는 갈등에 대해서 일반화 가능한 해결책을 발전'"시킨다(정성훈, 2009: 342). 루만(2020: 708-711)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근대사회에서는 법이 전체 사회 체계를 위한 면역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어떤 일은 합법이니까 기대해도 되고 어떤 일은 불법이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소통들의 연쇄"(정성훈, 2009: 339)인 법체계가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갈등과 결부된 기대들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면역체계로서의 법체계는 사회의 '자기생산'을 보호한다(루만, 2020: 705). 루만이 분화된 기능체계들 중 하나에 전체 사회체계의 '자가면역' 기능을 할당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라는 단일 체계의 자가면역 기능을 배제의 위협과 포함의 보상을 통해 갈등을 통제하는 증여에서 확인한다. '아니요'의 증폭이 면역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에서 "체계는 아니오에 맞서 면역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오에 힘입어 면역되어 있다"(루만, 2020: 704).

증여의 명령이라는 항체를 통해 '면역의 면역'이 이뤄짐으로써 범유행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다. 모두가 주지 않을 수 없는 선물을 주게 되는 국면, 혐오(공동체의 '자기혐오')의 열병이 가라앉고 이런저런 방역조치의 수용이 일반화되는 국면의 끝에서 비로소 백신 캠페인이 시작되며, 공동체의 도덕적 면역성은 인구의 생물학적 면역화 작업의 진도에 비례해 감소하기 시작한다. 어느새 바이러스와 함께 이전과 같은 삶을 재개할 가능성이 대두되고(위드코로나), 어느새 하나둘 '패스'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다(백신패스). 그렇게 증여의 명령이 일상의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묻히는 시점[13]이 결국 찾아온다.

13) 예컨대 자영업자들에 대한 가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희생의 명령이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방역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대체되는 시점(이경묵, 2022: 235).

Ⅳ. 코로나19와 이름의 경제

1. 코로나-인간, 코로나-국민

서두에서 제안된 입론에서 공동체는 사회와의 연결 가운데 운동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범유행 상황을 사회 쪽에서 다시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보다 풍성한 이해를 모색하는 일이 남아 있다. 선물주기로서의 코로나-주지-앉기를 대표하는 마스크 착용에 재차 주목해보자. 흥미로운 점은 증여가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모스(2002: 152)는 증여를 예컨대 북미 북서연안의 '수장'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역할 혹은 페르소나(*persona*)의 행위로 파악하는데, 페르소나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우리는 연극의 배역 또는 무대 위 배우가 쓰는 마스크(가면)를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범유행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연기'해온 것은 어떤 페르소나, 어떤 배역일까?

범유행 상황이 요구하는 다른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씀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거리를 준다(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몇 미터 정도의 추가적인 거리). 그렇게 마스크를 쓴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가 오고가지만, 거리가 곧 선물이고 하나의 선물은 다른 선물을 상쇄하므로 오고가는 거리는 더 큰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지운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며, 대신 마스크를 쓰고 서로에게 선물하는 이들 사이의 동일성, 똑같이 마스크를 쓴 이들의 똑같음이 남는다. 그것은 이미 논의한 바처럼 증여의 명령을 따르는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동일성이자, 아래에서 확인할 것처럼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국민으로서의 동일성이다. 마스크를 얼굴에 걸치는 매순간 우리는 국민으로 거듭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는 익명의 마스크가 아니라 **명명**의 마스크이다.

본고가 정의하는바 인간 사회의 유일한 부(富)는 이름이므로, 범유행의 상황을 이름들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자극이라는 견지에서, 말하자면 '이

름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시도해볼 만하다. 코로나19의 자극은 일단 '코로나'로 형용되는 이름들의 생산이라는 방식으로 이름의 경제 안에서 처리된다. 예컨대 아버지, 친구, 과장님만이 아니라 코로나에-걸린-아버지, 코로나로-죽은-친구, 코로나로-격리된-과장님도 있으며, 이런 식으로 폭넓게 유통되는 '코로나'의 형용은 그것이 들러붙은 이름의 역량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소비된다. 즉 '코로나'로 형용된 이름들은 다움/답지않음의 관찰을 그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힘을 대폭 상실하게 된다. 아버지는 자식과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친구는 우정을 나눌 수 없으며 과장님은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코로나'에 곁을 내준 이름들은 그 변별적 가치를 잃어버리며, "우리의 동료 인간들"이 처한 상태에 대한 아감벤의 한탄이 방증하듯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두는 **코로나-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으로 환원된다. 감염이라는 역학적 사실은 이름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사실'로 확인된다.

코로나-인간이 된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들의 상태는 아감벤이 주목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떠올리게 한다.[14] "살해는 가능하되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아감벤, 2008: 45)인 이 고대 로마의 사람들은, 전자의 규정이 웅변하듯 시민적 권리의 영역에서 배제되며 후자의 규정이 말해주듯 종교적·의례적 영역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코로나-인간으로 환원된 이들은 분명 이와 형식적으로 유사한 배제에 노출된다. 아직 살아있는 코로나-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들, 또는 차라리 예전에는 그것이 권리임을 미처 실감하지 못했던 일상적 활동들을 금지 당한 채 엄격한 감시 아래 감금된다(자기 집이건 병원이건 수용기관에서건). 만일 이미 죽었다면, 코로나-인간은 친족의 법이나 종교의 교리가 규정하는 의례의 온전한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서둘러 화장될 것이다.

실제로 아감벤은 범유행 초기에 행해진 일련의 개입들(Agamben, 2020a; 2020b; 2020c)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전개한다. 그는 호모

14) 라틴어 *sacer*는 오늘날 영어의 sacred와 달리 '신성한'이라는 의미와 '저주받은'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사케르'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건 일반적 존재들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 범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아감벤, 2008: 45, 역주 4).

사케르를 비오스로부터 **분리된** 조에의 형상,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이해한다. 호모 사케르가 신을 위한 제물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가치 있는 삶(비오스)도 그에게 허용되지 않음을 뜻하며,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한낱 목숨'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아감벤은 인구 전체가 이와 같은 벌거벗은 생명으로 축소되는 현실, 나아가 이러한 '예외상태'가 정상화되고 영구화될 비관적 가능성을 코로나19 범유행의 세계에서 목도한다(cf. 이문수, 2020: 132-133).

> "더 심한 전염병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누구도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이동마저 금지시키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항구적 위기와 비상사태 속에서 살아가는 데 너무 익숙해져버린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조건으로 환원되었다는 사실, 삶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일체의 연민과 감정의 차원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Agamben, 2020b).

범유행 상황에 대한 아감벤의 인식은 주권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반영한다. 아감벤은 특정한 인간 부류를 비오스(폴리스의 삶)로부터 분리된 벌거벗은 생명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주권의 본질적 기능으로 파악하며,[15] 시민적 삶에 대한 보호는 이러한 폭력을 전제로 이뤄지는 주권의 이차적 기능으로 간주한다. 모든 곳에서 주권은 배제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정치와 법률의 영역에 포함되는 호모 사케르를 생산해왔으며, 범유행의 상황은 모두의 벌거벗은 생명으로의 환원이 생물학적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수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문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과 사태 인식은 Ⅱ장에서 확보된 생명에 대한 관

15) "주권의 영역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또 희생 제의를 성대히 치르지 않고도 살해가 가능한 영역이며, 신성한 생명 즉 살해할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이란 바로 이러한 영역 속에 포섭되어 있는 생명을 말한다"(아감벤, 2008: 176-177).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호모 사케르들로 간주하는 자가 바로 주권자"이다(아감벤, 2008: 178-179).

점과 충돌한다. 거기서 개진된 주장은 ① 인간 존재의 자기는 목숨의 삶(生命)을 배제의 형식으로 포함하는 이름의 삶(生名)을 살아간다는 것, ② 그 자체로는 가치의 영역 외부에 자리하는 목숨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자의 것으로서 보호/파괴된다는 것, ③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삶은 목숨의 보존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범유행의 상황이 이를 확증한다. 그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낱 목숨'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생명이며, 생명의 '소중함'은 결코 생물학적 질서, 生命의 질서로부터 생성될 수 없는 감각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분기는 다음의 지점에 위치한다. 아감벤은 비오스로부터 분리되어 조에로 환원되는 인간의 부류가 있다고 보는 반면, 이 글의 주장은 이름을 가지는 한 어떤 존재도 이런 식의 환원에 노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함적 배제를 이런저런 인간 부류의 삶을 '벌거벗기는' 주권적 폭력의 논리가 아니라, **목숨의 삶으로 축소 불가능한 이름의 삶을 생성하는 명명의 논리**로 이해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호모 사케르를 다시 본다면, 호모(인간)라는 이름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이름의 역량과 권리들이 사케르(신성한/저주받은)라는 형용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호모 사케르는 호모라는 이름을 갖되 그것을 통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 말하자면 이름을 가진 것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에 대응한다. 호모 사케르는 한낱 목숨이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존재,** 벌거벗은 生命이 아니라 차라리 '보류 상태의 生名'이라고 할 만하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어떠한 존재의 삶도 목숨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저도 아닌 삶이 있으며 이 삶의 빈곤함과의 대비를 통해 이름의 삶이 가진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코로나-인간이 한낱 목숨과 등치될 수 없음은 더더욱 자명하다. 한편으로 오늘날 인간이라는 이름(그 자체로 신성한 이름)은 온갖 종류의 권리들을 통해(인권법의 인플레이션) 로마 시대의 '호모'와는 비교될 수 없는 보호를 향

유한다.[16] 다른 한편 코로나-인간들이 상이한 국민국가의 관할하에 있다는 지당해 보이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우리시대에 점점 더 애지중지되고 있는 국민이라는 이름이 이끄는 삶을 수호한다는 당위 아래서 행위하며, 범유행 상황은 바로 이 사실을 모두로 하여금 실감하게 한다. 봉쇄되는 국경을 통해, 따라서 해외로 나갈 수 없음을 통해, 이곳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의 코로나 확산 소식을 통해, 국가적 백신 캠페인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검사·치료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또 방역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국가에 묻는 말과 국가의 통제 정책에 대한 거부의 말의 경합을 통해 우리 각자는 자신이 국민의 이름하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새로이 환기하게 된다.[17] 감염 여부를 불문한 모두는 **코로나-국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분석되어야 한다. '코로나'에 곁을 내준 이름들이 변별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 점유자들은 코로나-인간의 상태로 환원되지만, 동시에 그들은 코로나-국민의 자격으로 여전히 국가의 보호 아래 머무른다. 통과의례에 대한 반 겐넵(2000)의 고전적 논의가 분석에 영감을 제공한다. 그는 통과의례의 세 국면을 ① 당사자가 기존의 상태(지위, 신분, 관계, 활동, 장소 등)로부터 분리되어 ② 일상적 삶의 바깥(en marge)에서 시련의 시간, '한계상황'을 통과한 후 ③ 새로운 지위를 얻어 공동생활의

16)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간으로 여겨지고 모든 인간의 삶이 신성한 것으로 선언되는 이 시대의 역사적 특이성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범유행의 상황에서 근대적 가치들—인간의 이름이 이끄는 삶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것을 특정하는—의 후퇴를 보게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저항(서유럽이나 미국의 예처럼)과 한탄(아감벤의 예처럼) 속에서, 무엇보다 이전 상태로의 회귀에 대한 모두의 열망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임' 자체는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 '코로나'라는 형용은 확실히 인간에게 할당된 권리들에 커다란 제한을 가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삶은 그것이 제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통해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삶,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삶과 구분된다. 코로나-인간은 한낱 목숨이 아닌 모든 것이다.

17) 범유행은 정책의 성공/실패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의 정치적인 결정능력을 부각시킨다." 또 "중대한 위기 발생시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 강화 현상인 '국기결집 효과'"와 "국가는 사회[공동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환상"이 범유행과 함께 확산된다(노진철, 2020: 158).

영역에 다시 통합되는 것으로 식별한다. 여기서 핵심은 물론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 국면, 터너(2005: 145-164)가 리미널리티(liminality)[18]라고 부른 상태이다. 예컨대 성인식의 당사자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지만 아직 어른도 아닌 상태, 즉 리미널리티에 있다. "그는 이전 상태나 그 후에 와야 할 상태의 특징을 거의 아니면 전혀 가지지 못하는 문화영역을 통과한다"(터너, 2005: 145).

통과의례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과정에 대입해보자. 성년의례를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그러하듯, 코로나에 이름 곁을 내준 사람들은 이전에 그 이름을 통해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입사의례의 수련자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획일적인 조건으로 변화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터너, 2005: 146),[19] 그들은 코로나-인간이라는 동일한 존재로 환원되어 일상적 삶의 바깥에, 정상적인 권리들과 의무들의 외부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리미널리티의 상태에 있다. 코로나-인간은 '오염'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여러 통과의례의 대상들(초경 중인 소녀, 망자의 몸 등)과 유사하며, 또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도, 다시 태어나야 할 병약한 존재라는 점에서도(터너, 2005: 152-153), 도덕적 비난의 시련에 노출된다는 점에서도,[20] 그 앞에서 "순종과 침묵"을 강요받는다는 점

18) 영어 'liminal'은 문턱에, 혹은 문지방에, 그러니까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상태를 형용하는 것이다.

19) 은뎀부(Ndembu)족의 할례의례에 대해 터너(2005: 164)는 이렇게 쓴다. "수련자들은 입구의 상징적인 문 밑을 지나갈 때, 입었던 세속의 의복이 '벗겨진다.' 그들은 그 때까지의 이름은 폐지되고, 모두 공통의 음와디(mwadyi) 곧 '수련자'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평준화'된다.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다."

20) 터너(2005: 153)는 잠비아의 은뎀부족에서 최고 지위의 추장이 될 이가 거치는 통과의례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상황을 기술한다. "이어서 쿠무킨딜라(Kumukindyila) 의례가 시작한다. '쿠무킨딜라'란 글자의 뜻은 '그에 대해서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추장에 선택된 자를 비난'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용히 하시오! 당신은 비열하고 이기적인 바보요 성질도 못돼먹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동료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화내기만 합니다! 비열함과 도둑질이 당신이 지닌 모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당신을 불러 추장의 직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그러하다(터너, 2005: 157). 그 끝에서 사람들은 코로나-국민이라는 새로운 지위(이름)에 가닿게 되므로, 코로나-인간의 상태는 코로나와 무관했던 삶이 코로나에 맞선 국민의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문턱'에 해당한다.

두 가지 사실을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첫째, 앞서 살펴본 호모 사케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인간은 인간이라는 이름을 갖되 이름의 역량(점유자를 다움/답지않음의 관찰에 노출시키는 힘)과 권리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이도저도 아닌 존재이다. 코로나-인간'다운' 행위는 없으며, 코로나-인간에게 마땅한 권리도 없다. 코로나-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코로나-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다른 이름(코로나-국민)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도덕적 정화의 시련을 감내하는 일이다. 둘째, 코로나-인간은 비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이들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실상 코로나와 무관한 이는 아무도 없다. 누구나 감염되고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모두는 잠재적으로 '가해'라는 도덕적 하자를 떠안고 있는 코로나-인간이다. 코로나 인간은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고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감염되었을지도 모를 모든 이들의 도덕적 자기성찰 상태에 상응한다.

이름의 경제는 '이도저도 아닌 것'의 생산을 통해 이미 국민인 자들을 코로나-국민으로 거듭나게 한다. 코로나-인간이 거치는 도덕적 시련이 사람들을 코로나-국민의 삶으로 매개한다. 코로나-인간은 코로나-국민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국가의 방역조치를 증여의 명령으로 수용하는 삶을 육성하고 그 지속을 담보한다. 확진 여부를 불문한 모두가 코로나-인간을 그림자로 가진 코로나-국민이다. 격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거리를 주는 방식으로 '코시국'이 요구하는 무누스를 이행하는 한에서 확진자들 역시 온전한 코로나-국민이다. 그 삶은 벌거벗은 목숨의 삶이 아니라 격리라는 자기희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이름의 삶이며, 고립된 개체의 삶이 아니라 '감금' 속에서 이뤄지는 공동체적 삶이다.

한 인터뷰에서 아감벤은 범유행 상황의 국가가 마치 자코뱅 독재 시기의 공안위원회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는데(Agamben, 2020d; cf. 박문정, 2021: 128), 이는 그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흥미로운 함의

를 가진다. 자코뱅 공안위원회는 공포에 기대 '시민(citoyen)'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삶을 정의하고자 했었다는 점에서, 즉 그것이 목표했던 '공공의 안녕(salut public)'이 시민의 이름이 이끄는 삶의 안녕이었다는 점에서, 나아가 당시 프랑스 안팎에서 전개된 혁명전쟁이 이러한 기획의 맥락을 이뤘다는 점에서 현재의 '팬데믹 공안위원회'와 커다란 유사성을 보인다. 아감벤은 공안위원회를 벌거벗은 생명을 생산하는 주권적 폭력의 상징으로 불러오지만, 상술한 유사성은 오히려 주권을 이름의 삶과 연결시키는 관점, 즉 **주권적 명명**의 관점을 추동한다. 자기 위의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주권, 지고한(sovereign) 힘으로서의 주권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름을 부여하는 힘으로 간주해본다면 어떨까? 국민국가 질서에서 주권은 국민(시민, 인민, 공민 등)으로 인구를 명명하는 힘이자 그러한 명명으로부터 비롯되는 힘으로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보호/파괴는 주권적 명명의 실행을 보조하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말하자면 이름이 이끄는 삶의 '육성술'로서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주권은 명명하는 것이므로, 이때 보호/파괴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낱 목숨이 아니라 이름의 삶에 포함적으로 배제된 목숨이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사유는 주권과 전쟁의 관계라는 고전적 테마와 접속되어야 한다. 적이 없다면, 사람들이 적 앞에서 生命의 위협을 실감하지 않는다면, 자코뱅 공안위원회와 팬데믹 공안위원회는 국민적(=시민적) 生名의 새로운 육성이라는 기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것이다. 주권적 명명이 가능하기 위해 이름의 경제는 '전시 경제'가 되어야 한다.

2. '적의 이름의 은유'와 주권

전쟁은 국민국가의 극복 불가능한 지평을 이루는 듯하다.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행위해야 한다는 당위로부터 전쟁의 필연성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안녕을 위협하는 적과 싸워야 하기에, 전쟁은 국가의 당위적 행위 방식이 된다. 전쟁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의 목표

가 “백성들[국민들] 상호간의 평화와 공동의 적에 대한 방위”(홉스, 2008: 289)에 있다는 진술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국민국가가 자신이 과거에 수행한 전쟁을 끝없이 반추하고 기념하는 한편 온갖 것들에 대한 전쟁(실업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채와의 전쟁, 물가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분리주의자와의 전쟁 등)을 끊임없이 새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왜 문재인이, 바이든과 마크롱이,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시와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또 그 밖의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범유행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했는지는 의문이 아니다(Lehtinen and Brunila, 2021). 그것은 전쟁의 수행 가운데 자기에게 고유한 힘을 확보하는 국민국가의 ‘존재론’, 따라서 언제나 적에게 특별한 성찰적 가치를 부여하는 국민국가의 ‘인식론’으로부터 기대되는 일이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범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행할 힘을 확보할 수 없는 국가의 긴박한 상황 정의인 것이다. 우리의 가설은 이러한 힘이,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으로 불리는 사람들 이외의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없다는 것, 즉 주권은 명명하는 힘이자 명명을 통해 행사되는 힘이라는 것이다. 정서(affect)의 관리라는 견지에서 범유행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논하는 레흐티넨과 브루닐라(Lehtinen and Brunila, 2021)의 분석이 이러한 가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들의 핵심 논지를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범유행의 발발과 함께 불안(anxiety)의 정서가 확산된다.
② 범유행이 전쟁의 상황으로 틀지어짐으로써 감염에 대한 불안은 공동의 적에 대한 공포(fear)로 전환된다.
③ 불안은 대상이 없는 것인 반면 공포는 대상을 가진다. 이런 이유에서 공포는 불안에 비해 더 큰 통제 가능성을 가진다.

저자들이 설정한 불안과 공포의 대비는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

자는 공히 위협에 대한 정서 반응이되, 위협의 실체가 불확실하고 그 제거 전망이 불투명할 때 불안이 있고 반대의 경우 공포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예방·치료·확산·변이 가능성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가까이 있을 수도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있을 수도(무증상 감염) 결국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무엇보다 바이러스를 경유해 적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옮겨감으로써 상황의 급진적 '개선'이 이뤄진다. 보이지 않고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는 바이러스는 이제 그 확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중국인, 아시아인, 외국인, 이주민, 신천지 신도, 방역 수칙 위반자들 등)의 몸체를 통해 가시화·국지화된다. 이렇게 위협의 처소가 특정됨으로써 불안은 공포로 전환되며, 적을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응들(국경의 봉쇄, 이동제한, 집합금지, 구상권 청구, 코로나 신고보상제 등)의 실행을 통해 공포가 관리된다.

전쟁 프레임의 도입을 통한 불안의 억압과 공포의 생산이라는 아이디어는 목숨/이름의 대항과 연결될 수 있다. 목숨을 지키려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감염증 확산과 마주할 때, 다시 말해 범유행 상황을 **생명체/바이러스**의 구분에서 출발해 관찰할 때 바이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대로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에 투영된다.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심지어 이미 내 몸 안에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나는, 당연히 나의 현재 행위가 미래의 기대되는 결과를 위해 **충분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나는 완벽한 안전이라는 불가능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무지의 상태를 해소하기는커녕 그것을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들 뿐이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 충분/불충분의 구분에 입각한 행위 관찰이 결론에 가닿지 못하는 상태가 불안이다.

혼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의 관점을 버리고 **국민/적**의 구분에 입각해 사태를 관찰할 때 상황이 반전된다. 바이러스는 볼 수 없지만 적은 볼 수 있으므로, 나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제 적에 맞선 현재의 조치들이 기대되는 미래를 위해 충분한지 아닌지가

집합적으로 관찰되고 논쟁되며, 그 가운데 보다 더 확실한 조치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의 관념은 극복의 관념을 함축하므로 조치들은 승리를 전제하고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적의 존재는 여전히 현재적 위협이지만, 승리의 미래가 희망을 견인하는 한 위협은 불안을 배양하는 대신 공포로 반응된다.[21] **희망/공포**는 위협에 대한 집합적 대처가 충분/불충분의 구분에 입각해 관찰되는 상태의 정서적 등가물을 이룬다.

이렇게 불안이 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희망/공포가 위협 대상의 제거 가능성이라는 문제와 연동하는 정서들이라면, 그러한 가능성에 준거한 사람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관찰은 **긍지/혐오**라는 또 다른 정서 쌍을 낳는다. 극복의 미래를 도래시키기 위한 집합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서, 다시 말해 적에-맞서-선물하는-국민인 자기에 대한 관찰의 상태가 긍지이고, 희망되는 미래의 도래를 지연시키는 타자에 대한 부정적 관찰의 상태가 혐오이다. '자기와 같지 않은 존재'에 대한 이러한 혐오는 비국민, 외국인, 이민자, 타인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숙주 노릇을 하는 공동체의 '나쁜 일부'를 향해서도 표출된다.

아래 두 정식의 도움을 얻어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해보자.[22]

$$\frac{\text{적의 이름}}{\text{코로나-앞의-자기}} \cdot \frac{\text{코로나-앞의-자기}}{\text{자기에게 의미된 것}} \rightarrow \text{적의 이름}\left(\frac{\text{주권적 국가}}{\text{적에-맞서-선물하는-국민}}\right)$$

$$\frac{\text{적의 이름}}{\text{불안}} \cdot \frac{\text{불안}}{\text{자기에게 작용된 것}} \rightarrow \text{적의 이름}\left(\frac{\text{희망/공포}}{\text{긍지/혐오}}\right)$$

21) 모든 국민국가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역사이며, 국민이 힘을 모으면 승리한다는 것은 이 역사의 '진리'이다. 적의 이름이 범유행 상황에 투입됨으로써 환기되는 이러한 진리는 불안을 배격한다.

22) 이는 라캉(Lacan, 1966: 557)이 제안한 은유 공식에 현재의 논의 내용을 대입한 것이다. 첫 번째 정식은 하나의 시니피앙(코로나-앞의-자기)이 다른 시니피앙(적의 이름)에 의해 대체되면서 새로운 의미(적에-맞서-선물하는-국민)가 생성되는 과정을 포착한다. 두 번째 정식은 이 과정에 개입하는 정서들을 정리한다.

① 생명체/바이러스의 구분에 따른 상황 관찰이 행위의 충분함/불충분함에 대한 후속 관찰의 동요를 결과함에 따라, 코로나-앞의-자기는 일단 불안의 상태,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변용(affection)된다.[23]

② 전쟁 프레임이 범유행 상황에 덧씌워지고 적의 이름이 코로나19와 그 숙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상황이 전변한다. 자기는 더 이상 '코로나 앞에' 있지 않다. 이제 자기는 '적에 맞서' 있다. 자기는 한갓 미물로부터 위협받는 한낱 목숨이 아니라 **적에-맞서-선물하는-국민**으로 스스로를 자각한다. 국민/적의 구분이 활성화되면서 후속관찰의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애초의 불안은 희망/공포와 긍지/혐오의 정서에 자리를 내준다.

③ 자기의 긍지/혐오는 국민의 이름에 투자되어 그 역량(다움/답지않음의 관찰을 부과하는 힘)을 강화하고, 희망과 공포는 국가로 결집되면서 국가의 존재 역량(증여를 명령하는 힘)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국가는 다시금 주권적인 것이 된다. 이제 국가는 승리의 희망을 고취하는 한편 공포를 국민에게 되돌림으로써(자코뱅 공안위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처벌의 위협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담보하게 된다.

④ 이 지점에서 주권은 법적 폭력의 전개 속에서 확인되지만, 주권의 생성은 다른 곳에서 이미(시간이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에서) 이뤄졌다. 주권은 '분열→명명→통합'의 형식하에서 생성된다. 즉 주권은 '적의 이름의 은유'를 통해 수많은 인구가 일시에 국민으로 명명되고, 그 결과 불안 속에서 분열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힘이다. 주권은 그러한 힘으로서만 하나의 말과 행위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주권은 적의 이름의 투입이 야기한 국민공동체의 '정서적 자기조절'의 결과 지금 여기에서 실효성을 갖게 되며, 국가가 사람

23) "나는 정서를, 그 행위 역량을 증대 혹은 감소시키거나 촉진 혹은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들로,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변용들의 관념들로 이해한다"(Spinoza, 2005: 197).

들의 특정한 정서적 변용으로부터 길어내는 이 힘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때로 폭력적으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이름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주권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간략히 부연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오래된 아이디어가 '전시 경제' 아래에서의 주권 생성 과정에 일정한 빛을 비춰준다. 경제적 행위자들이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행하는 일들이 결국 공공의 선에 기여하게 된다는 착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현재의 논의에 접목될 수 있다. 국민/적의 구분에 따른 관찰은 이름의 경제에 접속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국가는 관찰을 촉구하고 호소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특정 행위(증여)를 통해 자신을 적과 맞선 국민으로 실제로 관찰할 때에만 국민과 적 사이의 빗금은 유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적의 이름을 투입함으로써 이름의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스스로의 힘으로 빗금을 칠 수는 없다. 국민/적의 구분, 나아가 좋은/나쁜 국민이나 내부의 적/외부의 친구와 같은 이차적 구분들에 입각해 이뤄지는 개별적 관찰들의 결과 전체의 수준에서 빗금이 그어진다.

개별적 관찰들의 총합을 통해서만 그어지는 이 '공공의 빗금'을 명명하는 주권의 형상으로 간주해볼 수 있지 않을까? 『리바이어던』의 유명한 표지 그림이 주권자의 정치적 신체를 무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이미지화하듯 주권적 명명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몸소 행하는 빗금치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사람들이 자기희생(증여)의 각오와 실천을 통해 이러한 빗금을 긋는다는 점에서 주권은 명명 가운데서 이미 행사되고 있다. 전쟁을 전형으로 갖는 '예외상태'에서 이뤄지는 주권적 결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정은 적 앞에서 국민으로 명명된 사람들이 개별적 후속 관찰들을 통해 긋는 빗금을 다시 한 번 '공공화'한다. 코로나에 맞선 생명정치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더/덜 강력한 조치들에 대한 요구와 예/아니요, 좋아요/싫어요의 경합이 국가로 하여금 결정적인 구분의 빗금을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V. 나가며: 생명정치의 겨울

'코로나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에 대한 다수의 성찰은 이전/이후의 도식에 입각해 진행되며(cf. 노진철, 2020), 그 공통된 진단은 물론 코로나 이후가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리라는 것이다. 범유행이 끝나면 다시 보통의 시간이 오겠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보통, '뉴노멀'일 것이다. 재난 상황의 예외성이 요구한, 이전의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조치들의 일시적인 허용은 결국 새로운 정상이 되어 범유행 이후의 삶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왜 일시적이었던 것은 항구화되어야만 하는 것일까?[24] 그와 같은 설정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충동'이 사태를 면밀히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시도에 장애를 이뤄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학은 자신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배우는 관계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루만(2014a: 36)의 말은 이런 점에서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이 글의 논의 역시 범유행 상황의 예외성을 전제하고 이뤄졌지만, 이때의 예외는 비정상으로서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의 고양과 압축으로서의 예외**이다. 우리가 정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적 삶의 하모니가 말하자면 적, 국민, 국가의 '주권적 앙상블'에 의해 담보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상성이 일반적으로는 일상의 다채롭지만 반복적인 화음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할 때, '코시국'의 예외성은 주권적 앙상블의 강화가 일상의 화음들을 대거 집어삼켜버리기에 이르렀다는 데서 찾아진다. 코로나

24) 노진철(2020: 148)에 따를 때 "지금까지 어떤 감염병 재난도 사회문화적 진화를 언급할 정도의 사회 변형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전'에 대한 역사적 근시안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식별하는 봉쇄, 격리,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들이 과거의 대규모 전염병 유행의 시기들마다 이미 취해져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범유행 상황에 적용된 방역 매뉴얼에 통합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해둬야 한다(노진철, 2020: 146-147).

19라는 예외적 자극 앞에서 사회/공동체는 정상적으로, 즉 그 고유한 구분과 연결의 논리에 의해 기대되는 바대로 운동하되, '일상의 정지'라는 예외적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운동한다. 일상의 정지는 과거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의 유지 속에서 이뤄진다. 자극의 예외성과 결과의 예외성이 정상적 과정에 의해 매개되므로, 이 글이 범유행의 상황 속에서 관찰하는 것은 정상의 고양과 압축이다.

이때 고양은 공동체의 도덕적 자가면역화의 고양을 가리킨다. III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안위에 매몰되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이탈하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전방위적 자가면역 작업이 착수되며, 그 결과 공동체는 증여의 명령이라는 항체를 생성하면서 실제로 강화된다. 우리가 말하는 압축은 범유행 발발 이후 이름들의 관계로서의 사회관계가 국민이라는 이름의 역량 강화 속에서 압축적으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VI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사회 또는 이름의 경제가 '전시 태세'에 돌입함에 따라 사람들은 적에-맞서-선물하는-국민으로 일제히 명명되고 그 귀결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구현하게 된다. 사회/공동체가 구분된 것으로 연결되듯 그 압축과 고양에서도 구분된 것의 연결이 확인된다. 공동체의 도덕적 자가면역은 적과의 마주함이라는 조건 위에서 진행된다. 증여의 명령은 적과-맞서는-국민으로 명명된 사람들이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서로의 국민다움/답지않음을 관찰하게 되기에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항체가 될 수 있다. 역으로 주권적 명명 혹은 국민/적 사이의 빗금치기는 한편으로는 우리/남, 하나/둘의 구분에 입각한 관찰에 이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에 대한 불안에서 공포/희망, 긍지/혐오로 나아가는 정서적 자기조절을 거친 공동체적 존재들이 각자 수행하는 증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자가면역과 주권적 명명이 증여를 매개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코로나-주지-않기로서의 선물주기가 가진 특별한 함의를 드러내준다. 우리 각자의 증여를 통해 그어지는 국민/적 사이의 포함과 배제의 빗금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면, 서로를 향하는 우리의 선물은 결국 국가에 의해 '탈취'되는 셈이 아닐까? IMF 외환위기 시기의 금 모으기 운동을 놓고 그랬던 것처럼, 국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을 통한 범유행의 극복을 자기 자신의 승리의 역사로 기억하지 않을까?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보호를 대가로 자신의 자연권을 국가에 넘긴다면, '코시국'의 사람들은 적에-맞서-선물하는-국민으로의 명명이 가져다주는 자기긍정과 안도를 대가로 선물을 국가에 빼앗기며, 국가는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지고한 힘, 주권을 생성해 낸다.

증여에 의해 매개되는 국민의 주권적 명명과 국민공동체의 자가면역 사이의 연결이 근대 국민국가의 정상적 질서를 구축한다고 해보자. 범유행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 일반적 전개와 대비되는 예외적 전개로서, 이 글이 사회/공동체적 삶의 압축과 고양이라는 견지에서 분석한 이 예외성은 범유행 시대의 화두 중 하나인 '일상의 정지'를 통해 모두에게 감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크고 작은 예외의 순간들이 이미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되리라는 것을 여기에 더함으로써, 그리고 상술한 정상성을 나름의 조작을 거친 생명정치—이름(名)이 이끄는 삶(生)을 육성·관리하는 정치—의 범주로 포착함으로써 사회/공동체적 삶의 양상들의 주기적 순환이라는 관점을 타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누이트의 집합적 삶의 이중적 형태(morphologie)에 대한 모스(Mauss, 1950)의 논의가 여기에 영감을 제공한다. 거기서는 가족 단위로 식량을 찾아 유동하는 여름의 삶과 여러 가족들이 한 곳에 정주하면서 의례와 잔치에 매진하는 겨울의 삶이 대비된다. 경제중심주의적 여름과 정치중심주의적 겨울, 일용할 양식을 찾고, 소비하고, 다시 찾기 위해 이동하는 일상이 반복되는 여름과 종교적 의미를 갖는 의례들과 행사들이 반복되는 겨울의 대비를 변용해, 국민국가의 사회/공동체적 삶의 정상성이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여름과 예외적으로 강화되는 겨울을 대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막 빠져나오고 있는 범유행의 시간은 경제적 요구가 정치의 요구에 우위를 내주는 겨울, 일상의 루틴이 증여의 루틴

에 의해 침범당하는 겨울, 비난·혐오·적의의 소통이 난무했던 혹한의 겨울, 명명의 마스크를 쓴 모두가 국민적 生名으로 새롭게 육성되는 생명정치의 겨울이 아니었을까?

2022년 5월 21일 접수
2022년 6월 27일 수정 완료
2022년 6월 8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김봉수. 2021. “안전, 생명정치 그리고 법: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본 생명정치와 법.”『법학연구』. 62(1): 161-189.

김홍중. 2020. “코로나19와 사회이론: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 54(3): 163-187.

끌라스트르(Pierre Clastres). 2002.『폭력의 고고학』. 변지현·이종영 역. 울력.

노진철. 2020. “코로나19 범유행 재난과 사회적 체계들의 교란: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사회와이론』 37(2): 127-181.

루만(Niklas Luhmann).

_____. 2014a.『사회의 사회』. 장춘익 역. 새물결.

_____. 2020.『사회적 체계들』. 이철·박여성 역. 한길사.

마트롱(Alexandre Matheron). 2008.『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김문수·김은주 역. 그린비.

모스(Marcel Mauss). 2002.『증여론』. 이상률 역. 한길사.

박문정. 2021. “유럽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아감벤의 관점.”『유럽연구』 39(1): 119-137.

박세진. 2020. “증여와 사회/공동체: 이론적 접합의 모색.”『비교문화연구』 26(1): 35~97.

_____. 2022. “어버이수령의 이름과 북조선 사회의 원자(原子): 사회정치적 생명의 말과 삶.”『문화와 사회』 30(1): 109-179.

반 겐넵(Arnold van Gennep). 2000.『통과의례: 태어나면서 죽은 후까지』.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1992.『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동아일보. 2020. “文대통령 ‘국내 감염 4명, 코로나 전쟁에 반드시 승리.’”「동아일보」(07/2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0/102067291/1

경향신문. 2020. “정세균 ‘전쟁에 준하는 사태… 불법행위자 즉시 검거.’” 「경향신문」 (09/27).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009271653001#c2b

연합뉴스. 2021. “[코로나 1년] 완치됐지만… 나를 꺼리는 시선 가장 힘들어” 「연합뉴스」 (01/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34600054

슈미트(Carl Schmitt). 2012.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정태호 역. 살림.

신응철. 2021. “코로나19 시대와 파놉티콘 다시 보기.” 『현대유럽철학연구』. 60: 75-98.

신정아·최용호. 2016. “자크 데리다의 자가면역성 ‘이론’과 책임의 윤리: 종교, 정치, 문화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78: 133-163.

아감벤(Giorgio Agamben). 2008.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 2015a. “면역적 민주주의.” 김상운 역. 『문화과학』 83: 390-415.

_____. 2015b. “면역화와 폭력.” 김상운 옮김. 『진보평론』 65: 309-323.

_____. 2020c. “생명정치와 철학.” 김상운 옮김. 『문화과학』 104: 291-310.

이경묵. 2022. “코로나19의 플랫폼: 호혜성과 기식관계의 뒤섞임.” 『한국문화인류학』 55(1) : 207-248.

이문수. 2020. “Covid-19와 면역에 관한 행정철학적 고찰.” 『행정논총』 58(3): 125-151.

정성훈. 2009. “법의 침식과 현대성의 위기: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을 통한 진단.” 『법철학연구』 12(2): 331-356.

조문영. 2020. “한국사회 코로나 불평등의 위계.” 『황해문화』 2020(가을): 16-34.

조선의 오늘. 2022. “사랑의 대전.” 「조선의 오늘」 (06/09).
https://dprktoday.com/news/58934

진태원. 2018. “칼 슈미트와 자크 데리다: 주권의 탈구축.” 『철학과 현상학

연구』 78: 3-42.
터너(Victor Turner). 2005.『의례의 과정』. 박근원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황임경. 2013. “자기 방어와 사회 안전을 넘어서: 에스포지토, 데리다, 해러웨이를 중심으로 본 면역의 사회·정치 철학.”『의철학연구』 16: 115-143.
홍경자.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명정치.”『현대유럽철학연구』 62: 185-217.
Agamben, Giorgio. 2020a. “The Invention of an Epidemic.” https://www.journal-psychoanalysis.eu/coronavirus-and-philosophers
_____. 2020b. “Clarifications.” https://www.journal-psychoanalysis.eu/coronavirus-and-philosophers
_____. 2020c. “A Question.” http://itself.blog/2020/04/15/giorgio-agamben-a-question
_____. 2020d. “Nuoce riflessione.” https://www.quodlibet.it/giorgio-agamben-nuove-riflessioni
Bird, Greg and Jonathan Short. 2013. “Community, Immunity, and the Proper: An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Theory of Roberto Esposito.”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18(3): 1-12.
Derrida, Jacques. 1993. *Spectres de Marx.* Paris: Galilée.
_____. 2010. *Séminaire, La bête et le souverain: Volume II (2002-2003).* Paris: Galilée.
Esposito, Roberto. 2010. *Communitas: The Origin and Destiny of Commu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13. “Community, Immunity, Biopolitics.”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18(3): 83-90.

Guille-Escuret, Georges. 1996. "La niche écologique contre l'écosystème et l'intervention négligée des faits techniques." *Anthropologie et Sociétés* 20: 85-105.

Lacan, Jacques. 1966. *Écrits.* Paris: Seuil.

Lehtinen, Mattias and Tuukka Brunila. 2021. "A Political Ontology of the Pandemic: Sovereign Power and the Management of Affects through the Political Ontology of War."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3: 674076. doi: 10.3389/fpos.2021.674076

Le Monde. 2020. "'Nous sommes en guerre': le verbatim du discours d'Emmanuel Macron." *Le Monde* (03/16)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0/03/16/nous-sommes-en-guerre-retrouvez-le-discours-de-macron-pour-lutter-contre-le-coronavirus_6033314_823448.html.

Mauss, Marcel. 1950. "Essai sur les variations saisonnières des sociétés Eskimos. Étude de morphologie sociale." *Sociolologie et anthropologie.* Paris: PUF. pp. 389-477.

Spinoza. 2005. *Éthique,* translated by Robert Misrahi. Paris-Tel-Aviv: Éditions de l'Éclat.

Weiner, Annette B. 1985. "Inalienable Wealth." *American Ethnologist* 12: 210-227.

Society/Community in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Dynamic of Gift-Giving, Naming, and Autoimmunity

Park, Sejin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eries of events triggered by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ment of the biopolitics that fosters a life based on the name of the nation. The idea behind the whole discussion is that the acts involved in not spreading the virus, including wearing a mask, can be considered gift-giving. By transforming the familiar socio-anthropological them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ift-giving and society/community into a problem of the society/community's movement stimulated by the outbreak of COVID-19, the author analyzes this movement in two sections: (1) as an autoimmune process of the community that elicits the moral practice of gift-giving and (2) as a process of the activation of society or "economy of the name" by facilitating observations based on the nation/enemy distinction. In addition, a brief reflection on the nature of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state implied by the widespread use of the metaphor of war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is introduced.

Key words: COVID-19, life, gift-giving, autoimmunity, sovereign naming

한국사회 제23집 1호(2022년): pp.85-142

‘소셜과 혁신’을 바라보는 대학생의 양가적 시선: 사회학 실습 교육 사례*

권 현 지** · 이 상 직***

요 약

이 글은 사회학 실습수업 수강생의 연구 활동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청년의 활동과 그 활동을 관찰하는 수강생의 인식을 좇는 액자 구조의 보고다. 지난 10여 년간 청년이 사회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담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기업, 관련 NGO는 ‘기업가정신’과 ‘실험성’을 강조하고 ‘사회혁신’을 목표로 내건 다양한 청년 중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작 사회혁신의 주체가 되는 청년이 누구인지, 이들의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는 2017년과 2018년에 서울 소재 A대학 사회학 실습수업에 참여한 사회학 (부)전공생의 눈으로 본 청년 사회혁신가 및 사회혁신 활동의 특성을 기술하고, 청년-사회혁신의 장(場) 밖에 있는 대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강생이 관찰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은 활동 주체의 성격과 참여의 맥락, 실천 방식에 따라 ‘비즈니스’와 ‘활동’, 그리고 ‘운동’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둘째, 대체로 졸업을 앞둔 수강생들은 자신과 연구대상자를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를 진행한 학생들은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기업가정신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혁신(사업)가의 정체성 이면에 강도 높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청년 사회혁신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소극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수강생들은 ‘청년’을 동질 집단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시각에, 청년을 ‘사회혁신’을 마땅히 이루어내어야 할 존재로 전제하는 사회적 기대에

* 이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행복나눔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수업에 참여해 귀중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신 수강생들에게 감사드린다. 학생들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연구 현장을 소개해 주신 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hkwon248@snu.ac.kr

*** 교신저자,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er091012@naver.com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제어: 사회혁신, 사회운동, 청년, 세대, 사회적인 것, 사회학 교육

> “(소셜벤처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우리 학교 친구들 대체로, 저희 조원도 그렇지만, 정해진 트랙을 잘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의 진로도 사실은 대체로 그냥 사회에서 인정하는 진로 중에 하나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너무 시야가 좁았었구나, 라는 것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또 감수하고 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다든지 어느 정도 자본이 안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분들...그런 것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 저는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리스크를 생각 안 하면서 자랐어요.” - 팀 1의 수강생 A[1)]

> “사회운동이요? 지원하고 싶지만 거기에 내 미래를 맡기고 싶지는 않는 것?” - 팀 9의 수강생 A

Ⅰ. 서론: 청년, 사회혁신, 사회학 교육

이 연구는 2017년 1학기와 2018년 1학기에 서울 소재 A대학 사회학과가 개설한 연구실습과목을 사례로 ‘청년’ 주도 ‘사회혁신’의 실천 현장과 이를 관찰하는 학생 청년의 시선을 분석한 보고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청년’과 ‘사회혁신’을 연구 키워드로 제시하고 관련 실천 현장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연구 결과를 자료로 삼아 실천 현장에 대한 메타 분석을 진행하

1) 이 글에서 인용하는 발언은 모두 수강생의 것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발언자는 모두 익명으로 표기할 것이다. 다만,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일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연구를 수행한 팀의 번호를 표기했다. 팀 번호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한편, 학생들의 연구 과정을 관찰하고 학생들을 면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과 사회혁신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현장 청년의 경험과 그것을 관찰한 학생 청년의 경험을 겹으로 관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액자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구조를 취한 것은 청년 사회혁신 활동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활동을 접한 장(場) 밖 청년들의 청년-사회혁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청년이 사회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담론이 널리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은 '기업가정신'과 '실험성'을 강조하고 '사회혁신'이라는 이름표를 단 다양한 청년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지원해왔다. 여러 NGO와 '중간지원조직'은 사회혁신 개념을 다양한 사업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청년에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대학 또한 이러한 중개자 대열에 포함된다. 대학은 지역연계참여형(community-based learning) 과목이나 사회문제해결형(problem-based learning) 과목 등 사회혁신 관련 교과목이나 각종 교과 외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과 사회혁신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사회'혁신' 개념과 연계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등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의 주체가 될 '청년'들이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종종 혁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회혁신의 장(場) 밖 청년들과 사회혁신의 관점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장 밖의 청년들이 사회혁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우리는 대학의 맥락에서 이들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학은 청년과 사회혁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자가 특정 방식으로 연결되는 현상 자체를 성찰하는 주요 연구 기관이기 때문이다. 사회혁신은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이 고정된 어떤 상태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상상되어야 할 변화의 과정이다. 사회와 시장의 중간 영역에서 틈새 자리를 찾거나 자본주의 맥락에서 사회 혹은 시장을 침범하여 혼종적 중간지대의 경계 확장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침범적·확장적 실험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사회적인 것'의 규범적 정당성에 기대어 시민 참여를 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장과 사회 영역 모두에서 제도화의 정도가 낮고 사회적 인정 기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되는 '혁신'의 비용과 리스크는 이를 수행하는 (청년) 개인에게 주로 부과된다. 한국사회에서 사회혁신이 확산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한편 '사회적인 것', '혁신', '청년'이라는 개념어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섞여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엮이는 맥락 또한 매우 다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요인 혹은 요인 간 연계에 있어 특정한 이념형을 전제하는 사회혁신 관련 교육은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혁신 교육의 맥락을 생각해봐야 할 이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사회혁신 교육에서 강조되는 참여형 교육과 사회학 연구 방법의 연계를 모색했다. 우리는 사회학 실습 과목 수강생들을 사회혁신의 장 밖에 있는 '일반'[2] 청년으로 상정하고 그들에게 '사회혁신과 청년' 혹은 '사회운동과 청년'이라는 주제어와 관련된 조직과 활동을 조사해 사례연구 기말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답하고자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장의 한 발 밖에 있는 청년들은 사회혁신의 현장을, 사회혁신의 주체와 활동을 어떤 식으로 포착하고 인식하고 해

2) 물론 이 연구에서 '장 밖' 청년으로 상정한 대학생이 청년 일반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이전 단계에 있다. 파트타임 노동이나 인턴, 창업 활동 등을 경험한 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직업 탐색기에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또한 서울 소재 A대학에서 2년 이상 사회학을 (부)전공했다. A대학은 한국사회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 개개인의 이력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자본을 일정 정도 축적했다는 것을, 그에 따라 일정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사회학 전공생들은 주류 환경의 영향 내에 있으면서도 그 환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들은 '사회적인 것'에 대해 배우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실습수업의 맥락도 있다. 사회현상과 일정 정도 거리 둘 것을 강조하는 연구 방법론 교육은 사회혁신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장 밖 청년 일반의 것으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석하는가? 그러한 포착과 인식, 해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청년과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 질문으로, 연구 대상으로, 연구 활동으로 구체화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물로 학기 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했다. 이에 더해 학기가 끝난 시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들에게 조사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느꼈는지를 물었다. 2018년에는 이들 수강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학기 중에 진행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 논문은 사회학 실습수업 수강생들이 ‘청년’과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단면을 포착하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자신을 그 실천과 담론의 어느 자리에 위치시키는지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에 목표를 둔 사례연구다.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연구의 맥락을 제시하고, Ⅲ장에서는 연구 자료를 수집한 과정을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사한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활동 주체의 특징과 활동의 개인적·제도적 조건을 기술한다. 특히 학생들이 각 유형의 활동을 ‘소셜’ 혹은 ‘사회혁신’의 맥락에서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정리하는 한편, 서로 다른 활동을 관통하는 개념과 다른 활동을 다르게 위치 짓는 요인을 확인한다. Ⅴ장에서는 사회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그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과 면담내용을 자료로 청년 주도의 사회혁신이라는 담론과 실천, 제도의 맥락에서 학생들이 조사한 사회혁신 활동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는지 살펴본다. Ⅵ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발견을 정리하고 연구 함의를 토론한다.

Ⅱ. 연구의 맥락과 설계

이 연구의 일차적인 관찰 대상은 서울 소재 A대학 사회학과에서 2017년과 2018년 봄 학기에 개설된 ‘사회학연구실습’에 참여한 사회학 (부)전공 학

생들의 실습(연구)활동이다. 학생들은 '청년과 혁신', '청년과 운동'이라는 키워드로 한 학기 동안 사회학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 두 키워드를 제시한 맥락은 세 가지였다.

첫째, 우리는 '사회혁신'을 매개로 담론과 실천, 제도가 형성되는 최근의 현상에 주목했다(송위진, 2016; 박명규·이재열, 2018; 이승철·조문영, 2018).[3] 이 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사회혁신은 오랫동안 풀기 어려웠던 기존의 사회문제나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풀어내는 활동이다(정미나, 2016).[4] 즉 "사회 문제 해결이 혁신 활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경제적·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시작하는 비즈니스 혁신, 산업혁신과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송위진, 2016: 115) 사회혁신에서는 목표의 사회성이 강조되는데, 구체적인 해법으로 언급되는 것은 보통 "비즈니스 모델"(김영춘, 2017: 21)이다(이새롬·도현명, 2018).

사회혁신을 좋은 것으로 보고 그것의 확산·발전을 도모하려는 규범적 글에서는 사회의 복잡성 증대에 따른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사회혁신 현상의 등장을 기술한다(조상미 외, 2019). 비판적 시각에서는 사회혁신을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교차하는 혼종적 거버넌스 공간에서 작동하는 "통치합리성"(이승철·조문영, 2018: 286)으로, "새로운 사회·지식·주체의 형태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승철·조문영, 2018: 274)으로 본다. 이 시각에서 사회혁신 개념의 확산 과정은 주요 사회 세력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경합하는 가운데 특정한 정치적 기획이 투영된 현상(김주환, 2017; 이승철·조문영, 2018)이다. 기

3) 이 현상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혁신'이 부각되고 있다(송위진, 2016: 116).

4) 구체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사회혁신 정의는 없다(조상미·전종설·안소영·정지연, 2019). 열린 개념이라는 점이 개념의 특징으로 강조되기도 한다(멀건, 2011). 제프 멀건(2011)은 혁신을 "작동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하고, 사회혁신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로 유발되고, 1차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로 정의한다. "작동하는"이라는 말과 "아이디어"라는 말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고찰로는 김은지(2018)의 연구와 이승철·조문영(2018)의 연구를 참조.

업, 정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기 다르게 등장한 혁신의 문제의식이 세 영역이 교차하는 공간이 등장한 2010년대에 와서 ‘사회혁신’이라는 담론과 실천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사회적인 것”의 약화, 또는 쇠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김홍중, 2016: 467; 조문영·이승철, 2017)되면서 사회학자의 관심을 끌어왔다.

둘째, 사회혁신의 주체로 ‘청년’이 호명되지만(이회수·이재영·조성일, 2013; 류연미, 2014; 송화준·한솔, 2014; 이새롬·도현명, 2018), 호명의 주체와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조문영, 2018)에 주목했다. 모호성은 청년 세대론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근대에 발견된 청년은 사회변혁의 주체로 호명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 청년은 처음으로 그러한 역할을 박탈당했다(주은우, 2004; 홍명교, 2011). 먹고 살기도 어렵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진단을 둘러싸고 다양한 청년 세대론이 등장했지만 청년의 정체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이광석·윤자형, 2018). 우리는 평균적 기술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대안적 혁신 활동을 하는 청년의 활동을 직접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청년 당사자가 그들을 어떻게 볼지 궁금했다. 강의 형식을 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셋째, 위의 맥락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한편 대학교육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현장 연계 수업, 또는 학생 참여 수업의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현장인 해당 강의는 ‘액션러닝’, ‘문제기반학습’, ‘지역기반학습’ 등으로 지칭되는 교육방법론에 기초한다(Lizzio and Willson, 2004). 교육 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의 연계가 점차 약화하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김동석, 2016; 김태현·이태희, 2017)의 목표와 방식에 대한, 좁게는 사회학 교육의 지향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김영모, 1992; 강정구, 1998; 양영진, 2010; 정태석, 2010; 강희경, 2012; 서영표, 2017). 대학교육 수준에서는 현장과의 연계와 학생 주도 학습이 강조되어 왔고, 사회학 교육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지식 전달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강조되고 그 방법론으로 넓은 의미에서 학생 참여 교육(engaged learning)이 언급되곤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경험 사례가 꾸준히 소개되어

온 바(Mooney and Edwards, 2001; Lizzio and Willson, 2004; Albers, 2008; Eglitis, Buntman and Alexander, 2016)와 달리 국내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 검토나 경험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회학 교육 방법론에 관한 사례로도, 현장 기반 대학 교육에 관한 사례로도 자리할 수 있다.[5)]

요컨대 우리는 최근 주목받는 사회혁신 현상을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오늘날 청년 담론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사례로 사회학 실습 수업을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다. 첫째, 사회혁신, 또는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둘째, 그러한 활동을 수강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그러한 평가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나는 수강생들의 위치 의식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연구를 매개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청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은 사회혁신 실천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발견하고, 조정하고, 드러내는가?

Ⅲ. 현장과 자료

1. 맥락

이 연구의 현장인 '사회학연구실습'은 사회학과 전공필수과목으로, 또 다른 필수과목인 '사회통계'와 '사회조사방법론'을 수강한, 졸업을 1-2년 앞둔 35명 내외의 사회학 전공생이 수강한다. 수업 목표는 사회학 연구를 실습하

5) 그러나 지면 제약으로 이 측면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관련 사례연구로, 정치학에서는 김의영 외(2015; 2016b)와 이태동(2016), 이태동 외(2017), 김의영·미우라히로키(2018)의 연구를, 사회복지학에서는 최명민·김승용(2005)의 연구를, 경영학에서는 유재언(2012)의 연구를, 교육학에서는 정진·홍효정(2018)의 연구를 참조.

는 것이다. 연구 설계에서부터 자료 수집·분석, 논문 작성, 발표와 토론에 이르기까지 연구 과정 전반을 경험하게 해 사회학 전공자들의 사회현상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업의 취지다.

수업은 해당 학기에 제시된 주요 개념과 관련 연구,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본 강의와 소그룹별 연구 구상, 연구문제 제기, 연구 설계, 사례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토론 등 연구 전 과정에 대한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17년과 2018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연구 주제어는 각각 ‘청년과 사회혁신’과 ‘청년과 사회운동’이었다. 두 차례 모두 ‘사회학을 공부하는 청년의 눈으로 청년을 본다’는 것을 연구의 기본 테마로 삼았다. 연구 방법을 제약하지 않았지만 학생 대다수는 현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선택했다. 사례 선택 과정에서 교수진은 몇몇 사이트를 보기로 소개했다. 학생들은 강의 초반부터 4-5명의 소집단을 이루어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업 과정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교수진은 각 단계마다 학생들과 조사 과정 및 조사 내용에 대해 대화했다. 연구 결과는 학술대회 형식을 빌려 발표했다. 결과물은 수강생은 물론이고 학과의 다른 교수와 학생, 그리고 연구 참여자도 볼 수 있도록 준출판의 형식으로 문집으로 묶었다(A대학교 사회학과, 2017; 2018).

2. 수강생들이 조사한 현장

수강생들이 조사한 연구 대상은 소셜벤처 창업자, 소상공인, 청년활동가, 음악인, 학생운동 참여 대학생 등 다양했다. 두 차례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표 1〉과 같다. 주제어만 제시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조사대상을 우리는 ‘비즈니스’, ‘활동’, ‘운동’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파악한 사회혁신 활동의 주요 분류 범주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비즈니스’에 주목한 세 팀 중 두 팀은 성수동 소셜 밸리에서 활동하

는 소셜벤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적 가치(니즈)를 사업으로 구현한다는 사업가들이다. 한 팀은 사회적기업 '△△△'가 운영하는 공동주거공간인 ○○○에 주목해 이 공간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입주민의 생활과 상태를 연구했다(강보성 외, 2017).[6] 다른 한 팀은 소셜 밸리에 터 잡은 소셜벤처들의 상호관계에 주목해, 그들이 협력하는 방식과 맥락을 탐구했다(강보배 외, 2017). 연구 대상으로 보면 ○○○ 입주자가 소셜벤처의 대표일 가능성이, 즉 두 연구 대상 집단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지만 두 연구의 초점은 크게 다르다. 나머지 한 팀(이예린 외, 2017)은 망원동에서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조사했다. 이 팀이 주목한 것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이었다. 학생들은 망리단길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이곳에서 발현되는 사업 방식이 드러내는 새로운 사회적인 것 그리고 혁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싶어했다. 무엇보다 이 팀의 구성원은 장사하는 청년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다음은 '활동'(류연미, 2014)에 속하는 대상이다. 활동 사례는 하나(김승민 외, 2017)로, 성북구에 자리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들이다. 이 협동조합은 서울혁신파크에 자리한 청년허브의 '서울특별시 사회혁신 활동가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만든 곳이다.

〈표 1〉 기말 연구보고서 제목(분석 대상 연구는 음영 표시)

연도	팀 번호	제목
2017	1	체인지메이커들의 공동주거공간 ○○○가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티의 특성과 '불안'의 개념을 중심으로
	2	성수동 소셜벤처 간 협력 양상과 협력에 작용하는 진정성 분석
	3	새로운 상인의 부상을 통해서 본 청년 세대의 탈물질주의: 망원동 청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6) 이 글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만큼 이하에서 언급할 조사대상 조직은 익명으로 표기할 것이다.

연도	팀 번호	제목
	4	‘청년’을 거부하는 청년활동가: 청년 당사자성의 기획과 실천 — 성북구 청년협동조합 ‘△△’를 중심으로
	5	예술인 운동에서의 노동자성 재구성: □□□의 ‘음악인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6	▽▽▽ 내 조직변화에 따른 운동 성격 분석: 정체성 변화에 따른 미시적 혁명을 중심으로
	-	세대 간 비교를 통한 청년세대의 문화다양성 원인 분석: 관람방식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 청년들의 정치적 정향과 정치 참여
	-	청년 세대 내 통일 의식의 분화
2018	7	청년 공익변호사들의 사회운동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8	노무사의 노동운동 동원·유지 맥락: ‘▽▽’을 통한 미시동원맥락을 중심으로
	9	인정투쟁 양상에 따른 활동가 상의 차이와 조직의 지속가능성: ○○○○ 행정팀을 중심으로
	10	SNS에 기반한 청년 여성운동 연구: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 페이스북 페이지’ 사례를 중심으로
	11	‘공동체 생존’의 실천: ‘□□ 농성 대학생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12	대안공동체 ‘청년연대은행 ○○’의 조직문화가 조직생존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 리더십의 매개를 중심으로
	13	프레이밍론으로 본 노동자-학생 연대 성공의 동학: 2018년 △△ 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사례를 중심으로
	-	자기감시성 관련 상황이 대학생의 불매운동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양유업 불매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운동’이다. 두 팀은 홍익대학교 부근을 공간적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조직 활동을 □□□과 ▽▽▽을 사례로 연구했다(박윤경 외, 2017; 이상호 외, 2017). 이들 두 팀은 ‘예술’과 ‘운동’의 관계에 흥미를 보였다. 다른 두 팀은 운동에 참여하는 노무사와 변호사를 탐구했다(윤호중 외, 2018; 고보석 외, 2018). 노무사를 소재로 제안한 학생은 실제 노무사로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민변 소속 변호사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제안한 학생도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의 연구 취지는 이들 직업 영역에서 벌어지는 운동의 양상을 자기 삶의 계획 또는 지향과 관련지어 탐색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직업으로서의 전망을 투명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정체성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소재를 잡은 팀도 있었다. SNS에 기반한 여성운동('○○대 남자들의 사상과 가치관')이나 학생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이 그 예이다(김해니 외, 2018; 권병학 외, 2018; 박혜진 외, 2018). 마지막으로, 평소 청년 활동으로 떠올리기 어렵거나 청년과 연결 짓기 어려웠던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호기심이 반영된 소재도 있었다. 소녀상 농성장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김규원 외, 2018)이나 연대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박주원 외, 2018)이 그들이다.

3. 자료

이 연구의 1차 자료는 수강생들이 작성한 기말보고서이다(A대학교 사회학과, 2017; 2018). 연구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정한만큼 보고서는 학생들이 사회혁신·사회운동과 청년이라는 테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잘 드러낸다. 우리는 교수자와 수업 조교로 수업의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학생들이 처음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기말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고민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다음으로는 학기가 끝나고 팀별로 만나 진행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discussion) 자료가 있다. 면담은 2017년 여름과 2018년 여름에 토론식으로 진행했다. 2017년에는 질적 연구를 한 여섯 팀만 면담했으며, 2018년에는 모든 팀을 면담했다. 팀원 전부를 면담하기도 했고, 팀원 일부를 면담하기도 했다. 면담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째, 기말보고서로 정리된 학생들의 관찰기에 관한 이야기다. 주제를 어떻게 잡고 연구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연구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물었다. 둘째, 그들이 관찰한 활동, 또는 사람

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다. 조사한 활동의 주체와 활동의 맥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회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 ‘그들’과 ‘청년으로서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혁신’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회혁신의 주체로 청년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수강 소감과 후속 연구 제안이다. 수업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개선할 점으로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 후속 연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점을 더 연구해 볼 생각인지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진행한 학기 초 설문조사 자료가 있다. 문항은 세 영역으로 구성했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신의 예상 지위 등을 묻는 사회 인구학적 문항이 있고, 다음으로 사회운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사회 운동에 대한 기본 인식을 묻는 문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가 사회운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청년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이 있다. 이들 질문으로 수강생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의 인식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앞에서 기술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청년’과 ‘사회혁신’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는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자료 일부가 익명화되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강의를 진행할 때에만 해도 우리 스스로 이 강의를 실험으로 생각했고, 특정한 목표를 세워두지 않았다. 두 해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기획과 초점을 지속해서 수정해나갔다. 2018년에만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런 점에서 수강생들이 이 연구의 취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리라 판단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조사를 할 때에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는 등 수강생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입을 자제했다.

Ⅳ. 사회적인 것과 청년: 비즈니스, 활동, 운동

이 장에서는 수강생들이 관찰하고 보고한 현장의 실천을 세 가지 활동—비즈니스, 활동, 운동—으로 분류해 각각의 성격을 기술한다. 우리의 분류에 따르면, 수강생들의 연구는 사업가, 활동가, 운동가라는 주체성에 대한 탐구로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전통적인 주체가 노동자이다. 졸업을 1-2년 앞둔 수강생 대다수는 예비 노동자의 자리에서 탐구를 진행했던 것 같다. 예비 노동자로서 수강생들에게 각 유형의 실천은 무언가 "주류는 아닌" 것이었다.

1. 비즈니스와 '소셜': 불안, 진정성, 취향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자리한 혁신밸리는 조사 시점을 전후한 수년 간 크게 주목받은 곳으로, 소셜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의 대표 사례(윤지훈·박지훈·배종태, 2017)나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이유리·이명훈, 2017). 특히 민간 주도로 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은 자타가 강조하는 대목이다. 소셜벤처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된 계기는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체 △△△가 주도한 '서울숲 프로젝트'였다(이유리·이명훈, 2017: 169).

이곳에 관한 학생 연구 두 편은 각각 소셜벤처를 발굴·투자·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동 주거공간 ○○○에 입주한 청년(예비)사업가(강보성 외, 2017)의 정체성과 소셜벤처 운영자들 간 협력 활동(강보배 외, 2017)에 주목했다. 이들 연구는 소셜벤처 현장의 '관계'를 각기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강보성 외(2017)는 몇 차례의 탐색 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청년(예비)사업가의 '불안'에 주목했다. 불안은 '체인지메이커'를 꿈꾸는 이들이 ○○○에 모인 배경이다. ○○○는 각자의 불안을 '함께' 해소하려는 기능적 목적을 갖는다. 저자들이 주목한 것은 불안에 대처하는 ○○○가 또 다른 불안을 낳

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이었다. ○○○가 초래한 불안은 주로 평판 관리의 압박으로 발생했다.

> “본 연구는 (…) ○○○라는 커뮤니티의 특성이 어떤 불안을 야기하고 어떤 불안은 완화시키는지 알 수 있었다. (…) 목표의 가치성에서 유발되는 불안이란 번듯한 미래를 뒤로 한 채 진정성을 추구한 데 대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커뮤니티 내의 상호지지를 통해 완화되었다. 직업적 성공에서 유발되는 불안은 (…) 커뮤니티 내에 동원 가능한 자원의 양과 범위 증대를 통해 완화되었다. 반면, 체인지메이커라는 자아 정체성이 끊임없이 환기되는 상황에서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피로감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얻기 위한 평판 관리로 인한 피로감에서 새로운 불안이 발생했다.”(강보성 외, 2017: 36)

강보성 외(2017)에 따르면, 체인지메이커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사회적 인정을 얻고 사업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한다.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관계적 자원과 경제적 지원은 앞의 질문이 야기하는 불안을 줄여준다. 그러나 관계 맺기 과정에서 자신이 체인지메이커라는 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인정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관계는 압박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모든 관계를 자원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하는 관계 자원의 특성은 관리되기 어려운 내밀하고도 본질적인 불안을 야기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이중적 불안 동학을 소셜벤처업계 특유의 현상으로 해석한다. 그 배경에는 플랫폼 자본주의(이광석, 2017)에 기반한 소셜벤처업계에서 통용되는 “청년자본”(조문영, 2018)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적 압력과 그것과 연계된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 및 유동성이 있다.[7]

---

7)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며 갈등은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개인 간의 일로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되는 순간 어느 한 명이 커뮤니티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일단락된다.”(강보성 외, 2017: 34)

성수동에서 소셜벤처를 실제로 운영하는 이들을 만나고 온 학생들(강보배 외, 2017)이 주목한 것은 소셜벤처 운영자들이 언급한 '진정성'(김홍중, 2009)이다. 강보배 외(2017)에 따르면 소셜벤처 간 협력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진정성이며, 진정성 판단의 주체이자 객체는 진정성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벤처사업가다. 즉, 협력 결정의 기준은 상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는지, "소셜벤처의 기업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진실한 의지"가 있는지다(강보배 외, 2017: 47). 이것이 중요한 맥락은 두 가지다.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환경에 있기에 서로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쉽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누구와 협력하는지 자체가 사회적 가치 평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이다. 소셜벤처업계에서는 "밸류 체인의 모든 부분에서 '소셜 임팩트'를 낼 수 있"(p. 63)는지가 기업 활동의 평가 기준이 된다. 첫 번째 연구에서 주목한 (예비) 체인지메이커들의 정서 관계망은 두 번째 연구에서 주목한 소셜벤처 운영자들의 협업 관계망과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성수동 소셜밸리를 조사한 학생들은 종강 후 면담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공동체에 배태된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해석했다. (예비)소셜벤처운영자들이 말하는 진정성이란 특정 내용이 담긴 규범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믿는 (그것이 텅 비어 있더라도) 어떤 가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자신을 걸게 하는, 신념과 태도·행위를 아우르는 것이다.

> "사회학과(학생)인데 사회적 가치 다들 추구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건 사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어떤 활동에 좀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시민사회단체에서 운동을 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패라는 게 워낙 좀, 사실 성공을 점치기도 쉽지 않고 실패를 점치기도 쉽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건데, 기업은 실패든 성공이든 그런 리스크를, 시장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라는 게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 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던데 그냥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이런 건가, 생각이 들었고.” - 팀 2의 수강생 A

사업과 소셜의 만남을 드러내는 마지막 키워드는 ‘취향’이다. 망원동 소상공인에 관한 연구(이예린 외, 2017)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는 소상공인 나름의 공간 취향(윤혜수, 2016)과 관계 지향성에 주목한다. 그것은 이예린 외(2017: 81)의 연구에서 인용된 다음의 두 카페 운영자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이) 촌스럽고 오글거려요. 망원동이 관광지처럼 됐어요. 망리단길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진짜 극혐. 해시태그 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싫어요. 월세도 오르니까 별로 안 좋고요.” - C 카페 운영자

> “망리단길 현상이 안 좋죠. 그래서 딱 이런 분위기만 유지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관광지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망원동이 관광지처럼 되면 임대료가 오르는 것 외에도 지금처럼 손님과 소통하고 그런 여유가 사라질까 봐.” - B 카페 운영자

이러한 ‘취향’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권의 부상을 바라지 않는 맥락, 즉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맥락이다.[8] 상권 부상을 반기지 않는 가게 업주들은 “① 사업 시작시 흥미와 가치가 업종과 장소 선택에 강한 동기로 작용하고, ② 홍보 지양 및 자발적 축소 경향을 보이며, ③ 가게 운영에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투영한다.”(이예린 외, 2017: 101) 학생들이 확인한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실천을 아우르는 키워드도 ‘진정성’이라는 것이

8) 이예린 외(2017)가 만난 소상공인 19명 모두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상권 부상에 대한 입장은 절반씩으로 갈렸는데, 연구의 초점은 그 차이를 낳은 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저자들이 내린 결론은 가치관 차이였다. 가치관이 얼마나 물질주의적인지에 따라 업종 및 장소 선택 기준, 홍보 의지, 확장 의지에서 차이가 있다.

다.[9] 물론 진정성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것과 조금 다르다. 그것은 "뚜렷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것"이나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것", 또는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말은 '상업적인 것'이다. 상업적인 것은 복제될 수 있는 것이고,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것이며, 속일 수 있는 것이다(pp. 96-97).

> "음료를 만들 때 커피 위주다 보니까 손님의 입맛을 속이고 싶지 않은 거. 그린티라떼는 녹차를 정말 짜 가지고 넣어서 좀 리얼하게 하는 것을 추구해요. (…) 손님과 저의 관계가 단순히 소비자와 상인의 관계가 아닌, 내가 손님들에게 저렴한 커피를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 B 카페 운영자

> "내가 하는 요리, 내가 튼 음악 등 내 느낌이 고스란히 묻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가게를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 독창성이라고 생각해요. (…) 앞으로 저도 더 많이 보고 더 배워야죠." - A 카페 운영자

저자들은 이러한 지향과 실천을 "자아실현의 욕구"로,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발현으로 해석했다(이예린 외, 2017: 98). 그들의 운영 행태에는 "삶의 질과 자아실현의 범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탈물질주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이 반영"(p. 98)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향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저자들이 언급한 것은 운영자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관심과 지향을 드러내는 소품(책, 세월호 관련 소품, 채식주의를 홍보하는 포스터 등)을 가게에 배치한다거나, 수익 일부를 환경단체 등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거나, 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직원과 "형제나 친구" 같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거나 하는 노력이다(pp. 98-99).

---

9) 이 점은 연남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10명을 2010년-2013년에 면담해 이들의 '취향'을 밝힌 윤혜수(2016)의 연구에서도 강조되는 특징이다. 윤혜수는 그들이 수행하는 실천과 그것에 반영된 취향을 '노스탤지어', '진정성', '자연스러움'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한다.

비즈니스와 소셜의 접점에 주목한 연구 세 편의 문제의식은 '이른바 장사하는 사람들(돈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세 연구는 소셜한 것의 정체를 찾으려는 시도, 또는 그것의 양가적·역설적 함의(도전하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하는 불확실성)를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으로 읽을 수 있다.

2. 활동과 '소셜'

또 다른 일련의 실천은 '활동'으로 부를 수 있다.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이라는 제도적 맥락(류연미, 2014; 김은지, 2018; 장봄, 2017)에서 청년대안활동으로 불리는 움직임이다. 활동 개념으로 청년 경험을 포착하려는 움직임은 20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활동'을 키워드로 "청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구한 류연미(2014)는 "사회-활동"하는 주체로서의 청년론이 2000년대 이래 청년이 정치-운동의 주체로서도, 경제-노동의 주체로서도 자리잡지 못한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유용한 담론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청년활동가 담론이 제도적·실천적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물질적 토대는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2011년 10월~2020년 7월) 중에 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조직이 2013년에 설립된 '청년허브'다. 청년허브를 매개로 한 활동은 노동도 운동도 아닌, 노동과 운동 영역에서 상실된 지속가능성을 복권하려는, 혼종적 실천으로 정의된다. 노동과 운동 둘 중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노동과 운동이 공존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느슨하게 묶어 사회적 활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류연미(2014)는 그 예로 청년 사회적기업가나 소셜이노베이터, 소셜디자이너, 마을활동가를 든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사회적기업가나 소셜이노베이터라고 불리는 이들과 학생들이 조사한 청년활동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청년 활동의 한 사례인 '△△'[10]에 대한 연구(김승민 외, 2017)는 청년당사자주의를 둘러싼 제도적 조건과 청년활동가의 상호작용을, 그리고 그 내

에 잠재된 긴장을 드러낸다. △△의 사업영역은 6가지로 구분된다. 청년네트워크 조직, 지역자원조사, 연구출판, 미디어사업, 교육사업,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것이다. '청년네트워크 조직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역에 무관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벌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는 활동이며, '지역자원조사사업'은 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조사해 마을 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연구출판·미디어사업'은 보고서나 웹툰, 다큐멘터리 영상 등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를 초빙해 시리즈 강연회를 여는 활동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활동에는 성북구의 주요 전통시장 내에 공유카페를 만들거나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조형근, 2018: 197-198).

김승민 외(2017)가 주목하는 것은 '활동'이라는 실천과 '청년'이라는 기표가 갖는 양가적 의미다. △△의 활동은 그 영역이나 성격 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활동의 포괄성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이기도 하다. 조직 형태는 협동조합이지만 조합비로 모이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성북구나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방·중앙정부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이다. 공적 자원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지만, 거꾸로 자립을 어렵게 하는 제약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목표는 네트워크 형성이다. 그것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지역의 물리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일종의 "지향 공동체"이다(김승민 외, 2017: 136).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이

10) △△는 "지역 재생과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기획·연구·교육 등 전방위로 활동하는 협동조합"(홈페이지 소개글)이다. 창립선언문에 따르면, △△는 "1. 청년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및 삶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2.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혼자만의 고민이 공유와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 자원이 선순환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4.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다. 그런 점에서 활동의 목표는 "나를 잃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거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예와 같이 매우 모호한 형태로 표현된다.

'활동'이라는 실천의 목표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의미)'의 특징과도 일정 부분 연결된다. 그것은 "내향적"으로, "간접적"(조형근, 2018: 203)으로 부여되는 의미로, 주요 내용은 "자기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변화에 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참여하는 '작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 나아가 "저런 삶도 가능하겠구나"라는 메시지의 전달, 즉 다른 삶을 상상하게 만드는 자극제나 역할모델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p. 203)이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소셜임팩트'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체인지메이커와는 결을 달리하는 의미 부여다. '활동가'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사회적인 의미를 굳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지향 그 자체가 대안 노동이나 대안 운동의 모습과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그들의 활동이 무엇에 대한 부정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활동가들이 그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승민 외(2017)는 '청년'이라는 기표가 가진 양가성에도 주목한다. △△ 활동의 정체성 혼란은 그들의 활동 앞에 '청년'이라는 표현이 더해지면서 심화된다고 평가한다. 청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 지원을 비롯한 현실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는 동시에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하나의 굴레로 작동한다"(김승민 외, 2017: 141)는 것이다. 김승민 외(2017)의 연구는 활동가들이 이 점을 잘 알면서도 '청년'을 버릴 수도 더 내세울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11]

11) 단체명에 '청년'이 포함되지만 △△는 조합원 가입 조건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청년연대은행 ○○은 조합 정관으로 가입 나이를 제한(만 15-39세)한다. 가입하고 나면 나이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3. 운동과 '소셜'

다음으로 살펴볼 두 편의 연구(박윤경 외, 2017; 이상호 외, 2017)는 '운동'의 영역에서 청년-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에 접근한다. 앞서 '활동' 영역에서는 기존 운동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지향이 활동의 모호함을 결과하는 양상을 논의했다. 두 편의 연구는 오랫동안 종속적 '노동자'의 대척점에서 독립적 '전문가' 정체성을, '사회'보다는 '개인'을 강조해 왔던 문화·예술영역 전문가들이 예술 과정과 유통에 대한 시장(자본)과 조직의 관리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노동'과 '사회' 개념을, 사회운동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가의 통찰이 주목받으면서 예술가들이 예술 고유의 문법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분야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자기 정체성을 예술노동자로 규정하거나 예술활동을 예술노동이나 예술행동으로 규정하는 등 예술활동을 사회운동 메커니즘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예술 작법으로 '사회적인 것'의 복원을 지향하는 예술계의 최근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형성한다. 물론 이러한 운동 프레임 차용도 하나의 통일된 흐름으로 수렴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활동을 '노동'으로 재규정하는 움직임(예술노동)과 자신의 활동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예술행동)은 차별적 궤적을 그린다(김준기 외, 2015).

두 편의 학생 연구가 각각 다룬 □□□과 ▽▽▽은 각각 '예술노동'과 '예술행동'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이동연, 2012; 옥은실·김영찬, 2013; 양효실, 2014; 박선영, 2014; 이씬정석, 2016). 예술행동은 특정 사회적 이슈에 예술의 방식으로 개입하는 집단 행위로 규정할 수 있고, 예술노동은 창작행위를 노동으로 자리 매기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12)]

12)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가 모여 "예술노동과 예술행동을 둘러싼 사회적 의미와 흐름"에 대해 나눈 대화에서 이광석은 "사회적 사건이나 특정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예술가들이 집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회미학적 참여를 보여

2013년에 설립된 □□□에 관한 연구는 “예술의 이해 대변 운동이 노동자 정체성을 채택하고 노동조합 형태를 표방한다는 점에 주목”해, 예술가들이 노동조합운동 방식을 채택한 맥락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가들이 말하는 ‘노동’의 개념이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질문한다(박윤경 외, 2017: 153). 저자들은 그 배경을 음악 산업 재편에 따른 음악가들의 생계 불안정성 증대라는 사회적 맥락과 청년유니온 결성을 인상 깊게 봤던 초대 위원장 정○○의 개인 경험이 맞물린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근로자’라는 범주와 노동조합이라는 형태가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권리에 대한 고려가 운동방식 결정의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직이 노동조합 자격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또 노동과정과 결과물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미부여 방식 차이로 인해, □□□의 활동 전략과 내용이 기존 노동조합운동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노동과정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노동 결과물도 상품을 넘어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물로 본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은 버스킹 캠페인, 사회적 교섭, 법률안 발의, 토론회와 포럼 개최 등의 방식을

주거나 사건 현장의 당사자와 피해자들과 함께 긴밀하게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모습”(김준기 외, 2015: 172)이 2000년대 이후에 늘었다면서, 예술행동을 “현실 정치사회적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회성, 현장성, 소수성, 기록성 등의 특징들을 갖고 미학적인 현실 개입과 표현을 행하는 것”(p. 173)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출발해 좌담회 참석자들은 예술과 사회를 연계하려는 경향이 등장한 배경으로 2000년대 이래 진행된 예술의 상업화와 대중화를 꼽는다. ‘예술’과 ‘사회’가 연결되는 것은 “‘예술’ 부분의 전반적인 보수화, 도구화, 체재내화”(p. 174)와 관련 있고, 한편으로는 “예술 자체가 대중적인 언어와 영역으로 보편화되며 일상 속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p 175)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차적으로는 예술 관련 직업군 증대의 배경이자 결과다. 이런 배경에서 상업화에 따른 종속, 소외, 탈정치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술행동’으로 표현되고, “서비스 영역이나 문화 영역과 같은 부분이 과거와 다르게 대규모 산업화,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예술 활동들과 활동가들이 문화 상품 생산자나 문화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위지 지어지는 과정”(김준기 외, 2015: 181)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참여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된 경쟁과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예술노동’으로 표현되었다. 즉 예술 자체와 생존이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생존의 경계에 있는 현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한편 예술가 스스로 생존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는 것이다.

종합해서 활동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함의를 준다면서도, 그러한 활동 고유의 특징, 즉 경계의 모호성이 조직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박윤경 외, 2017: 177-178).

▽▽▽[13] 연구는 조합에 참여했던 음악 생산자의 초기 정체성이 '운동'에서 '음악'으로 변한 것에 주목해 그들이 지향하는 '자립'의 내용을 탐색한다(이상호 외, 2017). 운동 지향 변화가 자립에 대한 의미 부여 방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저자들이 봤기 때문이다. 초기에 자립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나는 물질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정신적인 성숙"(이상호 외, 2017: 192)을 돕는 일이다. 그러나 후기에 조합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수용했다. 운영 방식도 자본이라는 거대 개념에 저항하기 위해 집단 중심으로 활동을 구상했던 것에서 개별 음악가의 자립을 돕는 쪽으로 바꿨다. 초기에는 음악 자체로 평가받을 것인지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공연으로 평가받을 것인지를 두고 노선을 구분했으나 후기에는 그러한 구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활동의 '순화'를 저자들은 이들 지위의 존재론적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초기 조합 구성원들은 집회를 이끄는 운동가이면서 운동의 대상인 같은 현실에 갇힌 노동자였으며, 계급으로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기 어려운 예술가 고유의 정신 상태까지 가지고 있어

13) 2011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이름은 상호협업을 통해 음악 생산자들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경제적·가치적·사상적 자립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음악 기획자, 제작자, 음악가 등 80여명이 조합원이다. 대표자 없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한 운영위원회가 조직을 운영하며 통일된 사업계획은 없고 뜻맞는 이들이 프로젝트식으로 협업한다. 조합은 공연공간, 녹음 장비, 음반 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홍보와 유통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이 금전적 보상보다는 음악적 성취를 중시하기에 조합의 부담은 적다. 그러나 조합 차원에서 확실한 수입 전략이 부재해 조합원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능은 미약하다(박선영, 2014: 189-191).

무엇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상호 외, 2017: 200) 그런 상황에서도 궁극적 지향점은 “자기 음악의 완성과 자기완성이다.”(p. 201) 저자들은 이들의 음악 활동을 이렇게 규정한다. “그들의 음악은 욕망의 충족을 위해 소비되는 음악도 아니고, 운동가의 도구로서 민중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자기완성에 기반을 둔 진정성 있는 자기 음악은 타인과 공명을 일으키며 공감을 야기한다. 그 공감은 상대방에게 본래 내재되어 있는 매끈한 공간과 음악가의 자유로운 정신이 소통하는 과정이다.”(p. 202) 이런 맥락에서 저자들은 이들이 “주어진 능력 안에서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선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본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들의 활동을 ‘운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활동이 가지는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들의 운동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판단중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적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인간적 교감에 기반하여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극단적 형태인 이들의 운동은 요구가 배제된 목소리이다. 요구가 배제된 이상 이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다.”(p. 207)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 두 편은 비록 음악 분야에 제한되지만 ‘예술노동’과 ‘예술행동’이라는 표현에 착목하고 그 진화를 기술함으로써 이들 예술분야 사회운동이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근래의 문제의식에 닿아 있으면서도 어떤 딜레마에 봉착하는지를 구체화한다. 학생들은 예술영역의 ‘운동’이 ‘활동’과 같이 내향적이고 간접적인 쪽에 가깝고 참여 동기도 ‘자족적’이라는 점[14]을 잘 포착함으로써 이들 운동을 규범적·낙관적으로 평가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점을 드러냈다. 저자들은 자족성을 느슨한 관계적 조직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면서도 운동의 장기 지속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양가적 요인으로 봤다. 집단운동의 정서와는 매끄럽게 접합되기 어려운 독

14) 관련해 “예술행동의 실체라는 것이 예술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권리나 대가 지급의 문제로 국한”(김준기 외, 2015: 188)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립성·고유성을 근간으로 하는 예술가 정체성도 참여 예술가들로 하여금 정체성 조정 작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운동과 소셜의 접점에서 수강생들이 포착한 또 하나의 활동 흐름은 일종의 지지자로서의 운동이다. 2000년대 이래 학생운동의 퇴조가 목격되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관심은 학교에서도, 학계에서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거시 의제에 대한 집합적 움직임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개인 수준에서는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중에는 기존 의제에 기존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운 의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또 오래된 의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변호사(고보석 외, 2018)나 노무사(윤효중 외, 2018)라는 전문 직업을 운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라면, 페이스북에 기반한 여성운동(김해니 외, 2018)이나 불매운동(박혜진 외, 2018)이 두 번째에 가깝다. 위안부 운동에 참여하는 □□ 활동(김규원 외, 2018)이나 성소수자 운동(권나현 외, 2018),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노-학 연대' 사례(권병학 외, 2018)는 마지막 경우에 가깝다.

수강생들은 운동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정체성에 관심을 보였다. 관심에는 그런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다.[15] 예컨대 노무사가 노동자 측에서 일하는 것은 "합리적인 개인의 의사 선택 방향과 합치되지 않"(윤효중 외, 2018: 14)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들이 탐구하려는 것은 "(청년노무사들이) 전문직을 꿈꾸며 각종 자원을 투입하여 노무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서 기대되는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15) 가장 큰 전제는 오늘날에는 청년과 운동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대인식이다(주은우, 2004; 최철웅, 2011; 홍명교, 2011). 청년은 노동운동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으며, '탈정치화'된 주체로 간주된다. 각자도생의 문화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줄 거대 담론도, 또렷한 적도 보이지 않는다. 있다고 해서 자신의 생존을 챙기기 급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능한 연대의 움직임은 이른바 '당사자' 운동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여러 연구의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의미를 찾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수렴된다.

자발적으로 선회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라 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린”(p. 14) 개인적·조직적 맥락이다. 공익변호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한 팀은 이렇게 물었다. “80년대와 달리 자신이 하고 있는 사회운동으로부터 삶의 뜻을 길어내는 과정에 스스로의 자유와 유예가 많아진 상황에서 주체들은 어떻게 사회운동과 삶을 연결하여 해석하는가?”(고보석 외, 2018: 71)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도 ‘비합리적인 혹은 지속 불가능한 행동’일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격의 운동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었다. “연대를 조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정체성과 대학생으로서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연대하여, 발족 이후 가시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며 학생운동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권나현 외, 2018: 78) ○○○○에 관한 연구가 사례이다. 불매운동(박혜진 외, 2018)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 운동을 전개하는 사례(김해니 외, 2018)도 포함될 수 있다. 고전적인 문제의식으로 여전히 청년의 전위적·정치적 역할에 주목해 운동을 보려는 연구도 있다. “생존이나 실리와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모순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청년 운동”(김규원 외, 2018: 195)으로 규정한 □□활동이 예이다.

이들 연구는 오늘날 청년들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과 그 맥락을 보여준다. 그 방식은 과거와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참여 동기도 과거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어떻게 운동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학생들이 주목한 지점은 조금씩 다르다. 청년들이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연계 고리가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기도 하고, 학생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프레이밍 전략(권병학 외, 2018)이나 익명의 온라인 페이지를 통한 큐레이팅 전략(김해니 외, 2018)을 강조하기도 하며, 활동 자체가 만들어 내는 유대감을 지속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4. 활동의 조건과 맥락

지금까지 학생들이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사회혁신 활동을 '비즈니스'와 '활동', '운동'으로 분류해 개괄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일정 수준 분석적 경계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들 활동의 성격은 그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혼종성'(김의영 외, 2016a)이라는 말이 이들 활동의 공통된 성격을 요약한다. 사업, 노동, 운동 등 기존에는 비교적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활동들이 ('진정성'과 같은) 몇 개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서로 섞이면서 독특한 실천을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활동이 전개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수준과 제도 수준에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개괄한 활동의 주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개인적 배경과 이들의 활동이 전개되는 사회적 맥락을 각 학생 연구팀의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정리한다.

1) 개인적 요인

앞에서 소개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다. 학생들이 조사 대상 활동의 내용과 참여 동기를 조사하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활동 참여 맥락에서 개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게 평가했다. (예비)체인지메이커를 만나고 온 팀 1의 수강생 B는 지방대생에 관한 글이나 지방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에 비추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배경에는 부모의 지위가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이 글의 서두에 인용한 같은 팀의 수강생 A의 발언도 비슷한 짐작을 표현한 것이다. 소셜벤처사업가를 조사한 팀 2의 한 팀원도 인생에서 조금 늦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배경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 자본과 높은 사회·문화 자본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분들이 학벌이 다 좋으세요. 소위 서울의 명문대학을 주로 많이 다니시는. 아무튼 그동안 열심히 스펙 쌓고 그런 애들(과 비교했을 때), 나이 어려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나이) 먹어가면서 특별하게 쌓인 것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자체는 좀 강건한 동력이 있어야 한다.” - 팀 2의 수강생 A

망원동 소상인들의 경우 저자들이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경제적 계층”을 상중하로 묻는 질문에 2명이 ‘상’, 6명이 ‘중상’, 9명이 ‘중’, 2명이 ‘중하’라고 답했다. 학력을 보면, 고졸자 1명과 대학원 졸업자 1명을 제외한 17명이 대졸자였다. 나이로는 20대 2명을 제외한 17명이 30대로 1980년대생이 많다(이예린 외, 2017: 106). 종합하면, 경제자본은 ‘중’에서 ‘중상’ 정도 되고, 사회·문화자본은 ‘상’ 정도인 이들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연남동 소상공인 연구(윤혜수, 2016)에서 보고된 가게 운영자의 특성과도 유사하다. 윤혜수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제한적인 경제자본과 높은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으로 구성된 것”(p. 227)이라고 규정했다.

문화자본의 상대적 강세는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경우 더욱 뚜렷한 것으로 보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를 조사한 팀이 상근활동가 중 한 명의 생애사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1989년 인천에서 출생하였고, 여동생이 한 명 있다. 부친은 5.18 유공자 출신으로 당시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중학교를 대안학교로 입학하였고 고등학교 진학은 일반 입시학교를 선택하였다. 유년시절부터 ‘반골 기질’이 있어 비교적 가치관이 뚜렷했던 그는 장래희망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을 꿈꿨다. 부모님은 ○○가 22살이 되던 해에 귀농하였다. 군 제대 후 1년간 휴학해 청소년 활동, 홈스쿨링과 대안 교육에 관한 활동을 했다. 이후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시 혁신활동가 사업에 참여하여 △△문화재단에서 활동했다. 활동이 끝난 후 △△의 창립멤버가 되었다.”(김승민 외, 2017: 149)

‘운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활동 영역이나 활동 내용에 따라 폭이 넓기 때문이다. 음악인들의 가정 배경이나 성장 환경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면담에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었다. □□□을 조사한 팀 5의 수강생 A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음악활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직업적 정체성은 음악인에 있다. ▽▽▽의 조합원을 만나고 온 팀 6의 수강생 A도 이런 말을 했다. “거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고 대게 투잡 뛰면서까지 하잖아요.” 팀 6의 연구보고서에서 예술활동가들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 계속 음악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돈이 안 되는 “비주류 인디 음악”을 하면서 “자기 음악의 완성과 자기완성”(이상호 외, 2017: 201)을 꿈꾸는 이로 그려진다. 이런 말들에 비추어 볼 때 대중예술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비즈니스’나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나 여타 전문가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보다 높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Kwon, Kim and Yang, 2018).

노무사나 변호사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비교적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를 선택한 동기를 분석한 글에서 저자들은 노무사의 길을 택하는 이들이 “사기업, 공무원, 기존 진로를 각기 다른 이유에서 부정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윤호중 외, 2018: 27)고 썼다. 그 부정의 맥락은 스펙 등 높은 요구 조건과 여성 차별, 지루한 삶에 대한 거부와 주체적 삶에 대한 욕구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에서의 불합리함에 대한 경험과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운동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pp. 33-34). 공익변호사의 경우 30대 전후의 사람들로 로스쿨을 졸업한 이들이 많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에 인용된 몇몇 면담 발췌문에 이들의 성장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고보석 외, 2018: 62).

>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어릴 때부터 가톨릭 신자였는데 주일학교에서 꽃동네로 2박 3일 봉사활동을 갔다. (…) 이후에도 학대받는 아동들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번지르르한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종교와 부모님의 교육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 - 변호사 E

> “어렸을 때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내버려두지를 못했다. (…) 사람들이 저보고 선천적 복음주의라고 한다. 사실 종교는 없다. (…) 집안은 평범했는데 내가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공익변호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말리지는 않았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뜻대로 하라고 하셨다.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여유로웠고 절박했던 적이 없다.” - 변호사 F

> “변호사 E는 아버지가 교수,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로 “진보적”이었고, “안정적”이었다. 변호사 F 또한 “큰 굴곡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보석 외, 2018: 63)

대학생으로서 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경우 그 배경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과 지역의 주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본과 높은 문화 자본의 조합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사회혁신 또는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문화(혹은 상징)자본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자본 수준에서는 상당한 스펙트럼이 있다. 내부의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하는 이들이 가장 높은 경제·문화자본을, 활동을 하는 이들이 그 다음 수준의 자본을, 전문직업인을 제외한 운동 참여자들이 가장 낮은 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이러한 배경은 이들이 각각의 활

16) 이것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이 만나고 온 사람들은 대게 그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소셜벤처 사업가의 경우 업체를

동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으로 해석되는 것과 동시에 수강생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혁신활동의 흐름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점은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2) 제도적 요인

혁신 활동의 제도적 요인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활동 대다수가 '형성 중'인 단계에, 제도화되거나 체계화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보통 제도적 틀을 깨려는 맥락에서, 혹은 제도적 틀이 없는 상황에서 등장한다는 점 때문이다.

소셜벤처 활동과 관련해 언급된 제도적 요인은 '생태계 조성'으로 요약된다. 종강 후 면담에서 저자들은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개인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배경을 행동으로 이끄는 "트리거", 즉 촉매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물론 그런 잠재적인 성향이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와 같은 촉매·지원 조직이 수행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인터뷰 했던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냥 관심은 있었지만 뛰어들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 관계자들이 그럼 우리가 네가 힘들지 않게 사무실도 지원해주고 매칭도 시켜주고 할게." - 팀 1의 수강생 C

물론 이런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계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이라는 행위자"(팀 2의 수강생 A)였다. 그 힘은 자금이면서, 끈기이면서, 전지적인 통찰이다. 저자들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성수동 사례의 일반성이지만, "중심적인 조

운영하는 이들과 직원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이라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과 조합원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참여자들의 성격도 그와 유사할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직이나 인물"이 없이는 그런 네트워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것은 "관 주도"로 만들어지는 생태계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정부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곳 분위기를 팀 1의 수강생 B는 이렇게 표현했다.

> "관 주도나 이런 거와는 별개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트렌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그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자신들이 하는 좋은 일을 좀 더 퍼트려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뭐랄까 사회에서 인정받고 수용되고 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계속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관 주도라고 하면 트렌드 자체에 강박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 팀 1의 수강생 B

'활동'으로 묶일 수 있는 실천의 바탕에는 공적 지원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 수입원에서 가장 비중 있는 것은 정부용역사업이다. △△가 조직된 맥락 자체가 서울시 청년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적 자율성과 지속성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묶이는 실천에는 제도적 맥락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적 맥락의 부재나 단절성이 새로운 운동을 촉발한 배경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 요인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운동을 낳은 제도적 요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재를 딛고 새로운 제도화를 이루거나 기존 운동 질서를 깨기 위해서는 자원의 결집과 행위의 성숙이 요구된다. 대개의 운동 조직이 가진 과소대표성과 산개성, 그리고 정체성의 혼돈은 제도화 혹은 파열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는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리하면, 이러한 실천의 제도적 요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실천의 제도적 조건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를 다루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V. 그들과 우리: 청년과 사회혁신

지금까지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을 세 유형으로 구분해 기술하고, 이들 활동을 포괄하는 개인적·제도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학생들이 그러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를,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학생들이 '사회혁신'이나 '사회운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 의미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많은 학생이 자신들이 조사한 활동에 '사회혁신'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꺼렸다. 한 학생은 소셜벤처 활동에서 '소셜'이 텅 비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조문영, 2021). "체인지는 아무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첨에 소셜이라는 걸 착한 일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본 사람들도 크게 달랐던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재밌었던 거는 소셜이 정해진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갖다 붙여서 소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 팀 2의 수강생 C

> "그게 사회적 가치의 재밌는 점인데, 내용이 비었어요 진짜. 그 안에 뭐를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식인 거 같고, 뭔가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연결을 시킬 수만 있으면 다 받는 거 같고, 검열하지 않음이 되게.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이고 그걸 내가 뛰어 들어

> 가서 하려는 일이고 나름의 소신이 있는 거 같다, 라면 상대적으로 오케이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 팀 2의 수강생 B

학생들은 그 의미가 텅 비어 있고 열려있다는 것이 '소셜'의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자리에 상업적인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비즈니스를 한다'와 '비즈니스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한다'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팀 2의 수강생 B는 그러한 의혹을 이렇게 표현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거죠. 플러스알파가 필요한데 사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청년협동조합 △△에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해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신'(新)은 맞는 것 같은데, '혁'(革)으로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혁'이 될 수 있는 조건이란 확장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이다.

> "혁신이요? 혁은 잘 모르겠는데. 신이기는 한데 혁은. 물론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개혁'이라면 그 단어에 깔려 있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적폐 같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악습이거나 폐습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없애고 일소하고 새로운 뭔가로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의 '혁'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 이게 개혁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개혁은 있을 수 없나?) 그거는, 음, 저는 약간 수양의 느낌에 더 가까운?" - 팀 3의 수강생 A

> "저도 비슷하게 새로운 현상인 거 같은데 그걸 혁신으로까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은데, 가서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 고민을 했던 게 정말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 △△ 같은 경우에도 (…) 지금은 이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뭔가 계속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아니면 조금 더 조직이 커졌을 때, 이럴 때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거 가지고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어서." - 팀 4의 수강생 A

□□□ 활동에 대해 글을 쓴 팀 5(박윤경 외, 2017)의 팀원 모두도 지속이나 확장가능성의 측면에서 □□□의 활동에 회의감을 표했다.

> "혁신이 맞느냐 아니냐를 제 식대로 해석하면, 확장 가능하냐는 질문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빈곤한 상상력이지만 노동조합처럼 강제력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도 잠시 해봤다가도, 법은 사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보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거 같다, 그러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기존에 없던 제도를 만들어 낼 만큼 이 사람들이 규합할 수 있느냐, 몇만 명이 일어나서 이걸 안 만들어주면 정말 큰일 날 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런 상상력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 같고. 그래서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확장이나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팀 5의 수강생 B

조금 다른 측면에서 ▽▽▽ 활동을 조사한 팀 6(이상호 외, 2017)의 한 팀원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묻는 우리들의 질문에 그들의 활동을 "운동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하는 일로 규정했다.

>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진짜 꿈을 품고 나가는 운동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느낌? (…) 인디라는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게 가장 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 자기 자리를 찾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혁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그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음악인으로서 내가 어쨌든 살아가려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뭔가 새롭고 위대한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리라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생존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팀 6의 수강생 A

학생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회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그것은 사회적이면서도 확장될 수 있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생존을 넘어선 무엇인가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학생이 자신들이 조사한 활동의 전망을 기본적으로는 밝게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평가한 기준 자체의 타당성을 회의하기도 했다. ‘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된 것 아닌가’, ‘꼭 평가라는 것을 해야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되묻기도 했고, ‘과연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그러한 질문은 자신들이 보고 온 활동들을 ‘혁신’이나 ‘운동’으로 규정하게끔 하는 우리 질문자에 대한 불편감을 에둘러 표시한 것이기도 했다.

사회혁신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도 양가적으로 드러냈다. 학생들은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혁신이라면 “뭔가 하나의 운동이나 흐름을 만들어내고 법을 고친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존 질서 안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미시적인 움직임도 사회혁신으로 볼 수 있겠다”고 했다. 운동도 그저 즐거운 일일 수 있다는 신선함을 봤다고도 했다. ‘실패한 혁신가’도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팀 5의 수강생 C는 “꼭 누가 인정하고 누군가의 기준에서 괜찮고, 혹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도 진짜 자기 자신들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그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것도 충분한 성공이고 그 분야에서 혁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학생들은 그런 활동이 자족적인 것을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사회적이기는 어렵다고도 생각했다. 많은 학생이 ‘소모임으로서는 성공이나 운동방식으로서는 실패인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었다고 말했다.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희 내부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 되겠냐, 확장되겠냐, 얘길 많이 하다가도 또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 아 이러면 되는 거 아냐, 하면서 돌아오는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분들이 즐겁다 하면은 성공적인 소모임이나 성공적인 모임 자리는 될 수 있겠으나 이분들이 결국 원하는 어떤 음악인들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성공적인 운동방식은 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느꼈거든요.” - 팀 5의 수강생 D

2. 나와 그들

위와 같은 학생들의 평가에는 이미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설정한 방식이 내포되어 있다. 핵심은 ‘거리두기’였다. 그것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관계 측면에서의 거리두기[17]와 ‘청년’에 같이 속하는 이들 간 관계라는 측면에서의 거리두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가장 자주 나온 표현은 “다르다”였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등의 표현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거리 인식의 구도는 “정해진 트랙을 잘 가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인정하고 정착된 진로에서 벗어나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대비(팀 1의 수강생 A)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비는 경외감을 드러내는 맥락과 약간의 답답함을 드러내는 맥락 모두에서 사용되었다.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이들을 만나고 온 팀 2의 수강생 D는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 “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다. 한 번 인터뷰 나오면서 와 진짜 저렇게 살아야 해,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는데. (저렇게 산다는 건?) 그냥,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를 계속

17) 연구를 매개로 한 참여형 교육은 직접 참여를 통한 교육과 상당한 차이를 낳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관찰자와 참여자 간의 거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하는 거죠. (그게 너희 삶이랑 어떻게 다를까? 너희도 지금 뭔가 꿈을 추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은 인제 믿는 게 있으면, 그냥 일단 시작을 하더라고요." - 팀 2의 수강생 D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진로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자리 매겨진다. 여러 학생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가치가 있는 방향이라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팀 1의 수강생 A) 기업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먹고 살기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 글의 서두에 인용한 팀 1의 수강생 A의 발언이 이를 잘 표현한다.

청년협동조합 △△ 활동가들에 대한 인상은 이러했다. 한 팀원은 이들을 만나고 나서 기존의 거리감이 더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 "저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뭔가 옛날이야기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밟아 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요인은?) 뭐 가정교육,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고, 학창시절의 경험도 있었고, 아니면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족과 함께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 (…) 미래, 우리처럼 일찍 일찍 미래에 대해 엄청 설계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마음 가는대로 관심이 가는대로 하는 것 같고 지금 삶에 대해서 물어봐도 딱히 욕심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팀 4의 수강생 A

다름의 배경으로 학생들이 짐작한 것은 위의 언급과 같이 가정배경이다. 그러나 소셜벤처사업가를 말할 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학생들에게 '활동'은 적극적 지향의 결과라기보다는 소극적 대응의 결과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한 인식의 맥락에서 한 학생은 자신도 언제든 그들과 같은 경로로 접어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동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

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전망이 밝지는 않겠구나, 각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이 집단들이 중요하게 묶일 수 있는 게 가치지향이라는 측면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표방하면서 그게 더 우선인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 시작이, 패배감이라는 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 어차피 내가 회사를 들어가든 뭘 가든 나는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어차피 계약직인데, 계약직해서 불안정하나 이거 해서 불안정하나 똑같이 불안정한데 그래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이런 식의. 만일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면 이걸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이 영역이 더 커지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 같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는 거니까.” - 팀 4의 수강생 B

□□□과 ▽▽▽ 사람들을 만나고 온 팀도 그들의 활동이 새롭다고, 존경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뉘앙스는 앞서 소셜벤처 운영자들에 대한 표현과 미묘하게 달랐다. 소셜벤처 운영자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자신감이나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반응이 강조되었다면 운동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어떤 결의 같은 것이 강조된다.

> “존경스러웠어요. 보통은 불안을 얘기할 뿐인데 그 사람들은 뭔가를 직접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저는 미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데.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고. 약간, 떳떳하게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거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고 대개 투잡 뛰면서까지 하잖아요. 딱히 후회되는 거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하다, 나도 다르게 했을 수도 있었겠는데.” - 팀 6의 수강생 A

이러한 차이의 감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18] 앞에서 다양한 종류의 활동가들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유추해 보았듯이, 그들과 수강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그러한 감각의 차이를 낳은 요인일 수 있다.

2018년도 봄 학기의 초반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9개 범주)와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약 47%가 '중상', 30%가 '상'이라고 대답했다. 즉 77%가 자신이 나고 자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상' 이상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예상 지위 분포도 크게 다르진 않다. 중상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상위라고 인식하지는 않는 가족지위는 학생들로 하여금 '누구나 대체로 인정하는 길'로 가게 하는 한 배경일 수 있다.

〈표 13〉 희망 진로

직업	사례 수	퍼센트
정책공무원	7	23.3
법조	5	16.7
언론	4	13.3
(금융)공기업/민간기업/외국계기업	6(공기업 3)	20.0
학계/사회운동	4(각 2)	13.3
노무사/카피라이터/사업가/미정	4(각 1)	13.3
합계	30	100.0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응답을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해진 길을 간다는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공

18) 거리두기가 연구의 시작과 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드러났던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짐작한 이질감을 조사를 통해 재확인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일부는 예상치 못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일부는 예상치 못한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이 있으리라 들어갔다가 실망한 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표현했던 정서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기업 등 주요 직군에 대한 선호의 합이 전체의 63%가 넘는다. 공무원과 전문직이 선호하는 직종인 반면 민간기업 회사원이나 사업가는 상대적으로 비선호 직종이다.

이것만 보면 중상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가정에서 자라 높은 학력 수준을 갖춘 이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 이유를, "정해진 길을 가야"할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위치를 생애 궤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 "사회운동이 돈을 버는 것과 사회운동이라는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 (지금 제 상황은 후자를 선택하기에)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기회비용이 큰 거죠. 사회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부모님께 말하기까지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성실하게 한다면) 좋은 로스쿨 가서 연봉 1억 받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행정고시도 붙을 수 있고 진짜 취직할 수도 있는 마당에 월급 130만원 주는 ○○에 제가 취직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부모가 직업 선택에 가장 큰 요인?) 아니요. 제 스스로에 대한 거죠. (학내) 여성학생이라면 많이 느끼는 건데 엄청 치열하게 그 입시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잘 나갈 때 나는 이걸 해야 한다는 그 괴리감을 잘 못 견딜 것 같아요." - 팀 9의 수강생 A

이것은 꼭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학생들은 가치 측면의 활동 동기도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을, 즉 사회운동만의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약 제가 여성운동을 하고 싶다면 여성 운동판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여성학을 전공해 박사가 되어서 연구해도 사실 똑같은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실천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팀 9의 수강생 A) 같은 맥락에서 '성과'주의가 아니라 '효능감'의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단순히 돈이 아니

라 내 가치를 이 운동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는 과거 운동에는 '사회적 인정'과 결부되는 상징 가치가 있었으나 이제 그마저도 소멸되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 "전 재벌이어도 사회운동 안할 거 같아요. 제가 이걸 해 가지고 뉴스에라도 한 번 나올 수 있고, 진짜 사람들이 날 알아줄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내가 이 운동에 100만원 좀 넘게 일했을 때 뉴스에 나올 수 있고, 의제가 될 수 있고, 공론화될 수 있다면...." - 팀 9의 수강생 A

"내가 운동가가 돼서 인생을 투신하면 나는 어떤 걸 얻고 어떤 희망을 보고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옛날에 비해 주기 힘든 상황"(팀 13의 수강생 A)에서 필요한 것은 '돈'보다는 오히려 '가치'와 '인정'일지도 모른다. 사회혁신이든, 사회운동이든 학생들에게 그 활동이 매력적일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 말은 결국 누구나 사회혁신가가,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그들이 될 수는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팀 9와의 면담 마지막에 한 학생이 한 말은 묘한 여운을 남긴다.

> "사실 저 아까 활동 안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그냥 반어법이고, 하고 싶은데, 하..." - 팀 9의 수강생 B

3. 다시, '청년'이라는 범주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청년인식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과 관계 있다. "다르다"는 서로 다른 이들을 '청년'이라는 범주로 자꾸만 묶으려는 시도에 대한 거부감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기도 했다. 수업운영자로서, 또 그들을 관찰하는 연구자로서 일관되게 확인한 반응은 '청년'이라는 말에 대한 학생들의 당혹감이었다. 학생들은 '청년'이라는 말이 낯설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해 조사하고 글을 쓰면서 오늘날 청년 문제로 불리는 많은 현상이 사실 시대 문제가 아닌가, 이 시대를 사는 모두가 겪는 문제가 아닌가, 청년만이 특별한가, 과연 청년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 등의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했다.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업 이후 면담 자리에서 "그건 청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청년활동가가 특별한 게 뭐냐" 등의 질문을 받을 때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청년 연구의 소재로 제시된 지역적 공간과 자신의 관심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혹감은 한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먼저 학생들은 청년을 자꾸 뭔가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불편감을 표현했다. 실제로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으면서 뭔가 요구하고 기대할 때에는 청년을 특별한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자원과 권한, 인정을 주지 않으면서 혁신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거나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정책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치도 생각도 다른 이들을 청년으로 묶으려는 시도에 대한 불편감도 표현했다. 서로 다른데 왜 자꾸 '청년'이라는 모호한 범주로 엮으려고 하냐는 것이다. 학생들은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같은 점을 찾으려는 마음과 다른 점을 찾으려는 마음 사이에서 느낀 답답함을 토로했다. 궁극적으로 그들과 자신을 연결해 의미를 부여할 것을 강요하는 시선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냈다. '꼭 청년이어야 하냐'는 것이었다. 한 학생은 면담에서 "청년과 중장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꼰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팀 4의 수강생 C)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가서 만나보니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더 많이 느꼈다는 것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이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다. 아래에 인용한 대화는 우리의 기대와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어긋나는지를 보여준다.

> "(청년으로서 거기 들어가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청년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저희는 청년 연구를 했다는 생각

> 은 별로 안 했고 소셜벤처 연구를 했다. (연령대로 보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30대 중반인데, 뭔가 저희랑 달라 보여서 저희랑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 팀 2의 수강생 B

마지막으로, 청년을 사회혁신가나 사회운동가의 이미지로 읽거나 그런 식으로 존재화하려는 기대에 대한 의혹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면담에서 "판"이 만들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이라는 이유로 무언가 "혁신"해야 하고, "운동"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 문제는 청년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며 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청년에게 부과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러한 반응에는 청년을 청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동료로 인식하고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Ⅵ. 결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우리는 서울 한 대학의 사회학과 전공수업 활동을 매개로 최근 주목받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검토했다. 2010년대에 접어 들어 '소셜벤처 창업가', '청년사회혁신가', '청년예술가' 등의 이름으로, '체인지메이커'(정경선·루트임팩트, 2018)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호명의 보편성에 비추어 그러한 호명으로 해석되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맥락에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특히 그런 식으로 대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또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청년 집단의 눈에 그런 활동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우리는 서울의 한 대학 사회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혁신, 또는 사회운동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수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청년의 눈으로 청년을 본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강의자와 조교는 수강생들의 연구 진행 전 과정을 관찰했고, 학기가 끝난 후에는 수강생들을 면담해 연구 경험에 대해 토론했다. 이를 정리해 우리는 세 가지에 답하고자 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을 하고 있는가? 둘째, 수강생들은 그들을,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셋째,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각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의 실천은 '비즈니스'와 '활동',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의 사회혁신 담론에서는 이 셋이 잘 구분되지 않지만, 이들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역설적으로 '비즈니스'가 가장 적극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운동'이 가장 자족적인 생존 운동의 성격을 띤다. '활동'은 그 사이에 있다. 둘째, 그에 따라 참여 주체들의 성격이나 참여 맥락도 다르다. 경제자본에 비해 문화·사회자본이 많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본이 많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다. 여기에서도 '활동가'들이 그 사이에 있다. 셋째, 수강생들은 세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를 사실상 자신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자리 매겼다. 그러면서 이들 활동에 스스로가 참여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이렇게 답한 맥락은 크게 나뉘었다. 수강생 전체로 보면 그런 활동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풍족하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이유와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가 섞여 있었다. 한 사람 내에서도 그 세계에 들어가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이유와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내 삶을 걸기에는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이유가 공존했다. 그렇지만 모두가 청년과 사회혁신을 연결시키려는 우리의 시도 자체에 불편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발견이 청년과 사회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혁신 담론은 모든 청년을 소환하지만 사실 그 세계

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히 닫혀 있다는 점이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갈 수는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이러한 괴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정해진 길을 잘 따르게 만드는 것'이 여전히 주된 목표인 제도권 교육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을 그러한 활동의 이념형들과 자꾸 연결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낳는다. 한편으로는 당사자성 강조가 문제 규정과 해법을 '청년'이라는 범주에 가두어놓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성공 사례의 부각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다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둘이 결합해 그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 청년을 비판하는 어떤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수강생들이 보인 불편감을 이러한 점에 대한 자각과 그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이 '사회적인 것'과 연결되면 될수록 그 청년들은 '경제적인 것'과 싸우는 동시에,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진 '소셜적인 것'(김홍중, 2016: 467)[19]이라는 이데올로기와도 싸워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함의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 글의 바탕이 된 우리의 실험도 '청년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라는 해법이 오히려 청년을 도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정상근, 2011; 김창인·전병찬·안태언, 2019)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청년 또한 누구인가 하는, 특수한 집단을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19) 김홍중은 '소셜'이라는 형용사가 '사회적'이라는 형용사를 대신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현실과 원리를 '사회적인 것'과 구별해 '소셜적인 것'이라고 부른다(2016: 466-467). 그에 따르면 '소셜'은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적이지만 집단 수준에서는 반사회적인 현상을 낳는 '사회적 반사회성'을 나타내는 기표로 그것의 의미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미디어공간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로 경제적 사업, 경영, 비즈니스와 연관되어 있다."(p. 467). 그에 따르면 '소셜적인 것'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인 것이 없는 세계'에서 사회적인 것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셜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사회 구분 경계를 바탕으로 전개된 실천에 비해 훨씬 모호한 의미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보인 불편감은 '사회적인 것'의 의미 변화가 함의하는 양가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성찰과 경험적 분석을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22년 5월 15일 접수
2022년 6월 27일 수정 완료
2022년 6월 27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강보배·강우송·김민주·박상준·이진욱. 2017. “성수동 소셜벤처 간 협력 양상과 협력에 작용하는 진정성 분석.” A대학교 사회학과 편. 「청년의 일과 삶에 관한 아홉 개의 이야기」.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39-72.

강보성·김대진·서현후·양병헌·정호빈. 2017. “체인지메이커들의 공동주거공간 ○○○가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티의 특성과 ‘불안’의 개념을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 「청년의 일과 삶에 관한 아홉 개의 이야기」.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9-38.

강정구. 1998. “사회학 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대학교육」 79, 78-84.

강희경. 2012. “시대와 불화하는 사회학과 교육: 취업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전문성 시대와 일반성 추구 간의 부조화.” 「지역사회학」 14(1), 37-72.

고보석·김선욱·박강민·최민아. 2018. “청년 공익변호사들의 사회운동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 「행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39-74.

권나현·김가람·김민주·김보미. 2018. “인정투쟁 양상에 따른 활동가 상의 차이와 조직의 지속가능성: ○○○○ 행정팀을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 「행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75-102.

권병학·김병민·김상연·이상호. 2018. “프레이밍론으로 본 노동자-학생 연대 성공의 동학: 2018년 △△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사례를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 「행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251-288.

김규원·신예은·양다연·이규민. 2018. “‘공동체 생존’의 실천: ‘□□ 농성 대학

생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 「행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191-224.

김동석. 2016. "고등교육 이념과 대학의 기능 변화." 「교육연구」 24, 134-150.

김승민·김철선·윤상문·윤하림·황준영. 2017. "'청년'을 거부하는 청년활동가: 청년 당사자성의 기획과 실천-성북구 청년협동조합 '△△'를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 「청년의 일과 삶에 관한 아홉 개의 이야기」.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113-150.

김영모. 1992. "회장취임연설문: 한국에 있어서 사회학 교육의 과제." 「한국사회학」 24(여름호), 1-6.

김영춘. 2017. "소셜벤처의 조직화와 제도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5), 19-43.

김은지. 2018. "'사회혁신', 변화를 '제작'하는 사회운동의 등장: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26(2), 7-57.

김의영·미우라히로키. 2018. "지역 기반 시민정치 교육의 내부적 긴장성 문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수업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정치연구」 27(3), 79-108.

김의영·강동혁·강바다·김기범·김세영·김소라·김윤정·김준영·김찬우·김한울·나정환·백운중·서연·서희경·손성동·송지원·심중호·오현주·윤재언·이다혜·이병호·이소영·이수한·이승완·이승은·이어진·장세정·장예은·장요한·정예진·조현서·조현익·최서영·탁지영·홍준석·김다진·연준한·유지연·이경수·임기홍·홍지영·미우라 히로키. 2015.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 서울: 푸른길.

김의영·구양미·권헌익·안도경·안상훈·이옥연·이준웅·최인철·한신갑. 2016a.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서울: 푸른길.

김의영·강민정·김정은·김채은·류동규·윤용빈·이동명·이지호·최예린·홍순형·배병진·윤영관·이원동·연준한·유지연·이경수·임기홍·이상직·미우라 히로키. 2016b. 「동네 안의 시민경제: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

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사례」. 서울: 푸른길.
김태현·이태희. 2017.「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김주환. 2017.「포획된 저항: 신자유주의와 통치성, 헤게모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 서울: 이매진.
김준기·송경동·이광석·이원재. 2015. “‘예술행동+예술노동’ 좌담-예술노동과 예술행동을 둘러싼 사회적 의미와 흐름에 대하여: 예술노동과 예술행동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문화과학」84, 170-210.
김창인·전병찬·안태언. 2019.「청년현재사」. 서울: 시대의창.
김해니·라서연·이동희·정의현. 2018. “SNS에 기반한 청년 여성운동 연구: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 페이스북 페이지’ 사례를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행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145-190.
김홍중. 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한국사회학」43(1), 1-29.
_____. 2016.「사회학적 파상력」. 파주: 문학동네.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멀건, 제프(Geoff Mulgan). 2011.「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김영수 옮김(희망제작소 기획). 서울: 시대의창.
박명규·이재열 편. 2018.「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파주: 한울.
박선영. 2014. “대안음악을 위한 세 가지 목소리: 바른음원협동조합, 뮤지션유니온, 자립음악생산조합.”「문화과학」80, 180-193.
박윤경·신일식·이성진·이재은·최지우. 2017. “예술인 운동에서의 노동자성 재구성: □□□의 ‘음악인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청년의 일과 삶에 관한 아홉 개의 이야기」.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151-182.
박주원·윤서영·위희수·정다윤·조무근. 2018. “대안공동체 ‘청년연대은행 ○

○’의 조직문화가 조직생존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 리더십의 매개를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행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225-250.

박혜진·이유라·장예나·진소정. 2018. “자기감시성 관련 상황이 대학생의 불매운동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양유업 불매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행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103-142.

서영표. 2017. “제주에서 사회학하기: 사회학의 존재이유 되찾기.”「탐라문화」54, 67-104.

송위진. 2016. “혁신 연구와 사회 혁신론.”「동향과전망」98, 115-146.

송화준·한솔. 2014.「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토가 있다: 대안의 영토를 찾아가는 한국의 사회 혁신가들」. 서울: 알렙

양영진. 2010. “2010년의 한국사회학: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제언.”「한국사회학」44(5), 1-22.

양효실. 2014. “차이의 코뮌, 감각의 연대: 두리반농성과 자립음악생산조합의 경우.”「미학」80, 151-192.

옥은실·김영찬. 2013. “문화적 실천으로서 사회운동의 변화: 두리반 운동을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63, 53-75.

유재언. 2012. “경영학 교육에서의 액션러닝의 유용성: 자생체계 모형(VSM)에 의한 이중 순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경영교육연구」27(6), 395-418.

윤지훈·박지훈·배종태. 2017. “창업생태계가 소셜 벤처의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수동 소셜밸리를 중심으로.”「사회적기업연구」10(1), 91-134.

윤혜수. 2016. “새로운 소상공인의 취향과 공간적 실천: 2010년대 연남동의 사례연구.”「문화와 사회」22, 227-281.

윤효중·이현선·조승규·홍혜송. 2018. “노무사의 노동운동 동원·유지 맥락: ‘▽▽’을 통한 미시동원맥락을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행

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11-38.

이광석. 2017. “자본주의 종착역으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소묘.” 「문화과학」 92, 18-47.

이광석·윤자형. 2018.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언론과사회」 26(2), 77-127.

이동연. 2012. “진정한 독립을 꿈꾸는 문화 어소시에이션 자립음악생산조합.” 「플랫폼」 35, 48-53.

이상호·이하연·정지훈·최윤석·황세희. 2017. “▽▽▽ 내 조직변화에 따른 운동성격 분석: 정체성 변화에 따른 미시적 혁명을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 「청년의 일과 삶에 관한 아홉 개의 이야기」.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183-210.

이새롬·도현명. 2018. 「젊은 소셜벤처에게 묻다: 어떻게 비즈니스로 세상을 바꾸는가?」. 통영: 남해의봄날.

이승철·조문영. 2018. “한국 ‘사회혁신’의 지형도: 새로운 통치합리성과 거버넌스 공간의 등장.” 「경제와사회」 120, 268-312.

이씬정석. 2016. “음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과제: 뮤지션유니온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18, 148-178.

이예린·이유림·전경모·전혜원·조광래·조현. 2017. “새로운 상인의 부상을 통해서 본 청년 세대의 탈물질주의: 망원동 청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A대학교 사회학과 편. 「청년의 일과 삶에 관한 아홉 개의 이야기」.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pp. 73-112.

이유리·이명훈. 2017.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분석: 성수동 소셜 벤처 밸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2), 161-188.

이태동. 2016.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지향, 방법론, 활성화 구조에 대한 연구: ‘마을학개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2), 119-143.

이태동·강승연·강우형·고현창·김민·김민정·김민혁·김하은·김현정·김혜원·

남정권·박서영·박석준·박영서·심산하·여세진·이규철·이예은·이지수·장경진·장도경·차소라·채웅준·최준혁·하지영·허아람·홍다솜·고우진·권승현·김나현·김민성·김이레·김찬주·김청송·류소현·박지원·박혜연·백광호·서민근·손훈영·신석영·심평강·안지우·윤인영·이한재·이혜랑·임성일·임성호·장보경·전승주·정건희·정다인·조은철·조현민·홍용우·Cheng Shuo·안정배·손효동·최은지. 2017. 「마을학개론: 대학과 지역을 잇는 시민정치교육」. 서울: 푸른길.

이회수·이재영·조성일. 2013. 「청춘, 착한 기업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회적 기업가 12인의 아름다운 반란」. 서울: 부키.

장봄. 2017. "노동과 활동의 사이, 유예된 노동을 말하다: '청년혁신활동가'에 대해." 윤영도 편. 「정동하는 청춘들: 동아시아 청년들의 정동과 문화실천」. 서울: 채륜. pp. 102-124.

정경선·루트임팩트 편. 2018. 「당신은 체인지메이커입니까」. 파주: 김영사.

정미나. 2016.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혁신의 특성과 사회변화." 「사회혁신의 시선」 10, 1-24.

정상근. 2011.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청춘이다: 대한민국 청춘의 생태 복원을 위한 보고서」. 서울: 시대의창.

정진·홍효정. 2018. "대학수업에서의 학습자 경험으로 본 액션러닝의 특성." 「교육혁신연구」 28(1), 381-404.

정태석. 2010. "사회학의 위기 논쟁과 비판사회학의 대응." 「경제와사회」 88, 94-119.

조문영. 2018. "청년자본의 유통과 밀레니얼 세대-하기: 젊은 소셜벤처 창업자들에 관한 문화기술지." 「한국문화인류학」 51(3), 309-364.

_____. 2021. "테크노-소셜 밸리의 (비)연결: 사회혁신 스타트업의 청년들." 조문영 외.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 서울: 책과함께. pp. 265-301.

조문영·이승철. 2017. "'사회'의 위기와 '사회적인 것'의 범람: 한국과 중국의 '사회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소고." 「경제와사회」 113, 100-146.

조상미·전종설·안소영·정지연. 2019.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한국사회복지교육」45, 83-109.

조형근. 2018. "창조성과 공공성의 긴장: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사례." 박명규·이재열 편.「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파주: 한울아카데미. pp. 187-221.

주은우. 2004. "4·19 시대 청년과 오늘의 청년."「문화과학」37, 86-117.

최명민·김승용. 2005. "사회복지교육에서 액션러닝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교육」11(1), 81-103.

최철웅. 2011. "'청년운동'의 정치학."「문화과학」66, 15-50.

홍명교. 2011. "대학의 위기와 대안적 학생운동의 전망."「문화과학」66, 111-127.

A대학교 사회학과 편. 2017.「청년의 일과 삶에 관한 아홉 개의 이야기」.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_____. 2018.「행동하는 청년들: 청년운동과 세대동학」. 서울: A대학교 사회학과.

Albers, C. 2008. "Improving Pedagogy Through Action Learning and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Teaching Sociology* 36(1): 79-86.

Eglitis, D. S., Buntman, F. L., & Alexander, D. V. 2016. "Social Issues and Problem-based Learning in Sociolog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the Undergraduate Classroom." *Teaching Sociology* 44(3): 212-220.

Kwon, H., Kim, S., & Yang, J. 2018. "What Makes Them Dream on?: The Influence of Social and Psychological Assets on Young Musicians' Decision to Stay in the Profession." *Development and Society* 47(3): 371-400.

Lizzio, A., & Willson, K. 2004. "Action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n Investigation of Its Potential to Develop Professional Capabilit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9(4): 469-488.

Mooney, L., & Edwards, B. 2001. "Experiential Learning in Sociology: Service Learning and Other Community-Based Learning Initiatives." *Teaching Sociology* 29(2): 181-194.

Youth and Social Innovation: A Case Study of Youth Participatory Research in Sociology Class

Kwon, Hyunji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ang-Jic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the activities of young people who are doing 'socially meaningful work' that are reflected by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projects on social innovation activities. Over the past decade, a discourse has been formed that emphasizes the subjectivities of the youth carrying out social innovation.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relevant NGOs have been planning, facilitating and supporting various youth-centered projects that incorporate the notion of 'entrepreneurship' and 'experiment' and promote social innovation. However, less is known about what sorts of people are (or can be) actually engaged in the social innovation and what their actual activities are. The well-known success stories of a few high-profile social ventures are biased, with little reflection of reality. In addition, most analysis of social innovation experiments led by young people have been done mainly by policymakers and professional researchers from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NGOs. Against this backdrop, less is documented about how young people 'in general' perceive the ongoing youth-centered social innovation practices.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social innovators and social innovation programs seen through the eyes of undergraduates who participated in sociology practice classes at a university in Seoul from 2017 to 2018. The main findings include: First, we classified the young peoples practices of 'socially meaningful work' into three categories: 'business', 'activity', and 'move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actitioners discovered by the students, seem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context of

their participation, and the nature of their activities. Second, the students tended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those social innovators devoted to socially meaningful work in various ways. Third, the students also tend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young people's social innovation activities somewhat negatively. They found that intense anxiety coexisted behind the innovative entrepreneurs who accepted uncertainty in their activities and actively internalized their entrepreneurial identity.

Key words: social innovation, social movement, youth, generation, the social, teaching sociology

한국사회 제23집 1호(2022년): pp.143-158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 한국 거주 이주배경 청년을 중심으로*

백 경 민** · 연 규 진***

요 약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주변화 정도를 통계적인 척도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사회적 주변화 정도가 어떻게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연결망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차원이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연결망의 차원이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획득이 이들의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정서적 안녕감보다, 구직을 위한 또는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에 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정보망에서 배제될 때, 자신들이 주변화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이주배경 청년; 사회적 주변화; 사회적 자본; 한국; 연결망; 유대감

---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 1A3A2A02096860).

**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kbaek37@ssu.ac.kr

***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 kjyon@sogang.ac.kr

Ⅰ. 서 론

최근 한국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경제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전반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순규, 2011). 특히 이주민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송영호·최영미, 2022; 윤인진·송영호, 2011).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이주배경 청년들 내부의 다양한 하위집단이 있고 각 집단마다 성인기 이행에서 경험하는 발달과업과 적응 수준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Rumbaut and Komaie, 2010). 하지만 이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다문화 연구 및 지원정책들이 이주 1세대인 부모와 아동기·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기에 진입하는 이주배경 청년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민족정체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리고 향후 10년 후면, 한국의 전체 청년 인구의 약 3.4% 정도가 이주배경 청년들이 차지하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통계청, 2022).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집단 간 삶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사회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하며, 장기적으로 다문화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한국사회에서 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주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이주배경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주변화 정도를 통계적인 척도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사회적 주변화 인식 정도가 어떤 요인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이다. 여러 연구들이 해외와 국내 연구들이 이민자의 삶의 질과 사회 적응에 그들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양인숙 김선혜 2011; 박세희 외 2019; Garip 2008; Wu et al. 2014). 하지만 이주배경청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사회적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연결망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사회적 자본의 차원이 이들의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후속 연구에서 이주배경청년의 사회적 주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요인에 주목할 것인지를 논의해 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집단 외부로 개인 또는 집단을 격하시키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변화는 한 사회의 주류 집단에 특정 집단이 소속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Hall, Stevens, and Meleis, 1994). Winchester and White(1988)은 이주민의 주변화를 경제적 주변화, 법적 주변화 그리고 사회적 주변화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적 주변화에 주목하여 살펴보려 한다. 사회적 주변화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다는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강해지면 그 개인이 특정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저해하므로,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통합 연구와도 연결이 된다.

사회적 자본 이론은 이민자의 삶의 질과 사회 적응에 대한 좋은 분석틀을 제공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에 내재하는 신뢰와 규범, 그리고 호혜성을 사회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들이 자본 활용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Coleman 1988; Putnam 1994). 사회적 자본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충분히 포섭(inclusive)되어 공동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익(benefits)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최예나 김이수 2015; 이재열 2006).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보유 여부 또는 보유 정도는 공동체에 대한 포섭 정도 즉 사회적 주변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그들은 사회적 자본을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거시적인(macro) 차원으로 해당 사회의 규범을 수용하고, 제도(institutions)와 구성원을 신뢰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사회적 자본의 미시적인(micro) 차원으로 사회 구성원 간 연결망의 구성과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Son 2020).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이민자들의 삶의 질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민자들이 특정 사회에 얼마나 잘 배태(embedded) 또는 포섭 (inclusive)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이민자가 지닌 사회적 자본의 양을 해당 사회에 구성원과 얼마나 다양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on 2020).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민자가 특정 공동체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잘 포섭되었을 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말한다 (Coleman 1988). 그리고 이들은 이민자가 특정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망을 가지게 될 때,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Portes 1998; Granovetter 2018).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보유는 이주 배경 청년들의 삶의 질, 특히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높은 유대감을 지니게 될 때, 이주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에 잘 포섭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잘 연결되어 있을 경우,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 역시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2개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자신의 주변 사람에 대해 높은 유대감을 가진 이주배경청년은 자신의 사회적 주변화인식 정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가설 2: 자신의 주변 사람과 많은 연결망을 가진 이주배경청년은 자신의 사회적 주변화인식 정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Ⅱ. 자료 및 변수

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21년 5월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과 삶의 질 제고”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이 발주하여 한국갤럽이 수행한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이다.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이주배경청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한정하고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자의 자녀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연령 범주 제한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만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본 조사 대상인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학교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주배경 청년의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하기에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함께 활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인구센서스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기반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주배경 청년들을 모집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조사 대상자를 만나거나 소개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기관을 방문하여 응답자와 접촉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동료 및 지인을 소개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자료에는 329명의 이주배경 청년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1) 삶의 질과 개인 건강; 2) 주관적 건강인식; 3) 교육 및 진로; 4) 고용; 5) 대인관계; 6) 중도입국; 7) 일상 경험에 대한 다양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에는 300명의 응답자 자료가 사용되었다.

2.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주변화를 측정하기 본 연구에서는 Issmer and Wagner(201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주변화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주변화 척도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집단에서의 본인의 위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타당화 된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민선과 백근영(202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다음의 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1) 한국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은 덜 가치롭게 느껴진다. 2) 일자리를 찾을 때 내 배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이다. 3) 나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기란 어려운 일이다. 4) 한국 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전체 문항은 4점(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 매우 동의한다)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이며, 4문항 간 Cronbach Alpha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2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여 개별 사회적 자본이 이주배경청년의 사회적 주변화 평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변에 대한 유대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 다음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3)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4) 내가 필요하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5)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6)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위 문항들의 Cronbach 알파값은 0.85이다. 사회적 유대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위의 6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주변과의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 다음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2)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3)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4)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5)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6)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위 6문항의 Cronbach 알파값은 0.84이다. 사회적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해 위의 6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독립 변수로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 소득, 직업 유무, 한국어 구사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구 소득은 10점 척도, 교육 수준은 8점 척도, 그리고 한국어 구사수준은 5점 척도의 변수이며, 이를 연속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주배경 청년들의 국내 출생인지 아니면 중도입국인지에 따라 사회적 주변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양경은·함승환, 2018; 이병철·송다영, 2011), 이들의 출생지도 변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 누가 해외 출생인지도 변수에 포함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변수명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한국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은 덜 가치롭게 느껴진다. (문항 1)	300	1.73	0.76	1	4
일자리를 찾을 때 내 배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문항 2)	300	1.68	0.67	1	3
나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기란 어려운 일이다. (문항 3)	300	1.65	0.71	1	4
한국 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문항 4)	300	1.52	0.66	1	4
종속변수 4 문항 평균값	300	1.64	0.59	1	3
사회적 유대감	300	3.70	0.52	2	5
사회적 연결망	300	3.70	0.58	2	5
성별 (남성=1)	300	0.42	0.49	0	1
연령	300	28.87	2.76	25	34
교육수준	300	4.60	2.00	1	7
가구 소득	300	5.28	1.78	1	10
직장 유무	300	0.84	0.37	0	1
한국어 구사 수준	300	4.36	0.89	1	5
출생지 (한국출생=1)	300	1.32	0.47	1	2
부모 출생지 (어머니가 국외출생=1)	300	0.72	0.45	0	1

Ⅲ. 결과

〈표1〉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4개 문항에 포함된 문항 중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내 배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1.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4개 문항의 평균이 모두 2이하(2=동의하지 않는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주배경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한국 사회 내 주변화 정도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질문에 대해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 2〉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이 앞서 제시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OLS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2〉 OLS 회귀분석 결과

변수	분석 결과
사회적 유대감	-0.183
	(0.102)
사회적 연결망	-0.178*
	(0.090)
성별 (남성=1)	-0.030
	(0.063)
연령	0.002
	(0.012)
교육수준	-0.046**
	(0.017)
가구소득	-0.028
	(0.019)
직장유무	0.109
	(0.089)

변수	분석 결과
한국어 구사수준	0.063
	(0.037)
출생지 (한국출생=1)	0.225**
	(0.071)
부모 출생지 (모 해외출생=1)	0.036
	(0.072)
상수값	2.604***
	(0.457)
사례수	300
R^2	0.2088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01, ** p<0.01, * p<0.5

〈표 2〉는 지수화된 점수로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적 주변화 정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b=-0.178),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b=-0.046) 그리고 국내출생일수록(b=0.225), 자신이 주변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은 자신의 주변화 정도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의 사회적 주변화 정도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유대감 정도는 사회적 주변화 정도에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

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주배경청년이 자신들의 사회적 주변화 정도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 이미 잘 포섭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유대감의 차이가 한국 사회 내의 포섭 정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이주배경청년들은 자신들이 믿을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자신들의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정서적 안녕감보다, 구직을 위한 또는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에 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정보망에서 배제될 때, 자신들이 주변화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그들의 사회적응을 다루는 연구를 확장시키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유대감과 연결망으로 나누어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대감과 연결망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여 각각의 차원이 어떻게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그리고 풍부한 정보망을 제공하여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주배경청년들의 사회적 주변화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제언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교육수준은 이주배경청년의 사회적 주변화에 일관된 그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연령을 단순하게 분석의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위 변수들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출생 이주배경 청년들은 해외 거주 중 한국으로 중도입국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중도입국 후 한국의 정규 교육과

정에 편입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편입되더라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여러 가지 불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주배경청년들이 성장하면서 축적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결핍으로, 그리고 문화자본과 인적 자본의 결핍으로 확장되어 나타날 수 있다 (채소린, 2021). 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해외출생인 경우 해외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를 분리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이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의 본질적 가치는 다른 두 집단 사이를 연결하여 새로운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데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은 이질적 두 집단을 매개하여 새로운 정보가 과연 연결망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이 문항은 특히 연결망의 영향을 과소 평가(underestimate)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더 좋은 측정도구가 포함된 설문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들이 얼마나 또는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종단연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고 있어서 사회적 주변화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향후 연구에서 이주배경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지, 그리고 해외출생과 국내출생 이주배경 청년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사회적응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18일 접수
2022년 6월 24일 수정 완료
2022년 6월 22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김민선·백근영. 2021. “사회적 주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괜찮은 일자리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및 주도적 성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42(1), 101-126.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 연구〉, 18(3), 247-272.

박세희·황인욱·이태진 2019. “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9(1), 166-199.

양경은·함승환. 2018. “이주배경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 소속감 격차: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함의”, 〈사회복지정책〉, 45(1).

양인숙·김선혜.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237-266.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이병철·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3-49.

송영호·최영미. 2022.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2(2), 3-38.

채소린. 2021. “중국 출신 이주청소년들이 경험한 초국적 불안정성-학력 중단 이후 교육 및 진로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 177-211.

최예나·김이수. 2015.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간 관계에 관한 연구: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53-78.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Ferrari, G., & Pailhé, A. 2017. Transition to Adulthood in France: Do Children of Immigrants Differ from Native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31, 34-56.

Garip, F. 2008. Social capital and migration: How do Similar Resources Lead to Divergent Outcomes?. *Demography,* 45(3), 591-617.

Granovetter, M. 2018.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ll, J. M., Stevens, P. E., & Meleis, A. I. 1994. Marginalization: A Guiding Concept for Valuing Diversity in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6(4), 23-41.

Issmer, C., & Wagner, U. 2015. Perceived Marginalization and Aggression: A Longitudinal Study with Low-Educated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4(1), 1-18.

Son, J. 2020. *Social Capital.* Polity Press.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Putnam, R. D. 1994. Social Capital and Public Affairs.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5-19.

Rumbaut, R. G., & Komaie, G. 2010. Immigration and Adult Transitions. *The Future of Children,* 20(1), 43-66.

Winchester, H. P., & White, P. E. 1988. The Location of Marginalised Groups in the Inner C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1), 37-54.

Wu, Q., Tsang, B., & Ming, H. 2014. Social Capital, Family Support, Resilience and Educational Outcomes of Chinese Migrant 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4(3), 636-656.

통계청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ttps://www.mois.go.kr)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Perceived Social Marginalization: A Focus on Migrant Young Adults in Transitioning into Adulthood in Korea

Baek, Kyungmin
(Soongsil University)

Yon, Kyujin
(So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migrant young adults' perceived social marginalization in Korea and how social capital affects it. Using a national survey of migrant young adults aged 25 to 34 living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ocial network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migrant young adults' perceived social marginalization in Korea, which indicates that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has an important role on the decrease of their perceived social marginalization.

Key words: Migrant young adult; Social Marginalization; Social Capital; Korea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 2 조 (목적)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한국사회〉는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

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른 기관이 학회에 제출된 논문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 가(O), 재심(△), 게재 부적합(X)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이론적용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⑥ 관련문헌의 취급, ⑦ 연구결과의 의의, ⑧ 문장의 가독성, ⑨ 논문의 독창성, ⑩ 논문제목의 적합성, ⑪ 연구주제의 중요성, ⑫ 이론적 기여도, ⑬ 방법론적 기여도, ⑭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6. 투고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기준을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	○	○		게재확정
○	○	△	게재가능	수정권고후 게재
○	○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이면 게재
X	X	X		
X	X	△	게재불가	
X	X	○		

7. 재심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재심에 응하지 않기로 알려온 경우 또는 재심용 원고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재심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한번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 11 조 (투고 규정) 〈한국사회〉에 게재될 논문은 '〈한국사회〉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게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3 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속한다.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

국사회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사회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 (표절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표절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2008. 7.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 (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 3 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 4 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 5 조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 · 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 6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기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 · 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 · 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 8 조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 · 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 · 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제 9 조 (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제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

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 10 조 (편집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본 연구소 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 12 조 (이의 신청)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보장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4 장 벌 칙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3 조 (규칙 재 · 개정)

1. 이 규약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원고제출

1. 투고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면서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출된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당해 원고마감은 발행일 30일전이며 발간예정일은 당해 6월 30일, 12월 30일입니다.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합니다.
4.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 4부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집위원회로 우송합니다.

   보낼 곳: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isrku.org

원고작성

1. 원고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ᄒᆞᆫ글 97 기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시 추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글자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줄 간격: 170%
   여백 주기: 좌우 3cm, 위 2cm, 아래 1.5cm, 머리말·꼬리말 각 1.5cm
3.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쓴다.
4.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영문 주제어(Key Words) 순서로 구성한다.
5. 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전화·팩스)가 명기되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하되, 1명의 '제1저자'(교신저자)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6. 국문요약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한다.
7.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8.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장·절·항·목의 번호는 " Ⅰ ", "1", "1)", "(1)"의 순서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3)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이용할 때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논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홍승직(1994: 23)은 …";
   [예2] "…라 했다(홍승직, 1994: 23)."

(2)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예1] "…밀즈(Mills, 1956)"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가운데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김용학 · 임현진, 2000)"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양춘 · 김문조 · 손장권 · 박길성 · 김철규, 2001)"; "...(양춘 외, 2001)"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현영석, 2003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9.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10.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1)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되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가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4)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5)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최재석. 1990.「현대가족연구」. 일지사.

임희섭. 1987a.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구조와 정책정향: 1961-8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93-218

_____. 1987b.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25-149.

管谷章(스가랴 아기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社.

Berger, P. L. and H. M. Hs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Transaction.

Cannell, C. F., P. Miller and L. Oksenk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t Techniques.” pp. 389-437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y-Bass.

Amsden, A. H. 1989. Asian’s Next Giants: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인근달 역.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영어사).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손장권. 2001. “정보사회의 환경과 조직변화.” 「한국사회」 4: 147-172.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Shin, Ho Hyun. 1990. “S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of Hawaii.

Krafcik, J. F. and J. D.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Working Paper of IMVP.* MIT.

Kollock, P. and M.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3) 번역서

휴이트(John P. Hewitt).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심리학」. 윤인진 역. 학지사.

클레크 · 히긴스 · 스파이비(S. 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

혁래 · 박길성 · 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pp.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1.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제시"와 같이 표시한다.
    2)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3)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4) 표 속에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5) 표의 선은 맨 위에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 까지만 긋도록 한다.
    6)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시에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한다.
    7) 그림에는 x축과 y축과 곡선 · 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8)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과 같이 표기한다.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장: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편 집 위 원: 김재우(전북대 사회학과)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과)
신인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심보선(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심재만(고려대 사회학과) 윤상우(동아대 사회학과)
이승철(서울대 인류학과) 이해진(충북대 사회학과)
장서현(고려대 사회학과) 정고운(경희대 사회학과)
조정우(경남대 사회학과) 조혜정(삼성경제연구소)
황선재(충남대 사회학과)

(이상 가나다순)

편 집 간 사: 배진태(고려대 사회학과)

한국사회 제23집 1호

2022년 6월 28일 · 인쇄
2022년 6월 30일 · 발행

편집 · 발행/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화: 02-3290-1651 팩스: 02-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isrku.org

인쇄 · 출판/도서출판 새로문화
전화: 02-313-1431 팩스: 02-313-1434

ISSN 1229-036X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23 No.1 / June 2022

* 이 책은 한국리서치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ISSN 1229-036X